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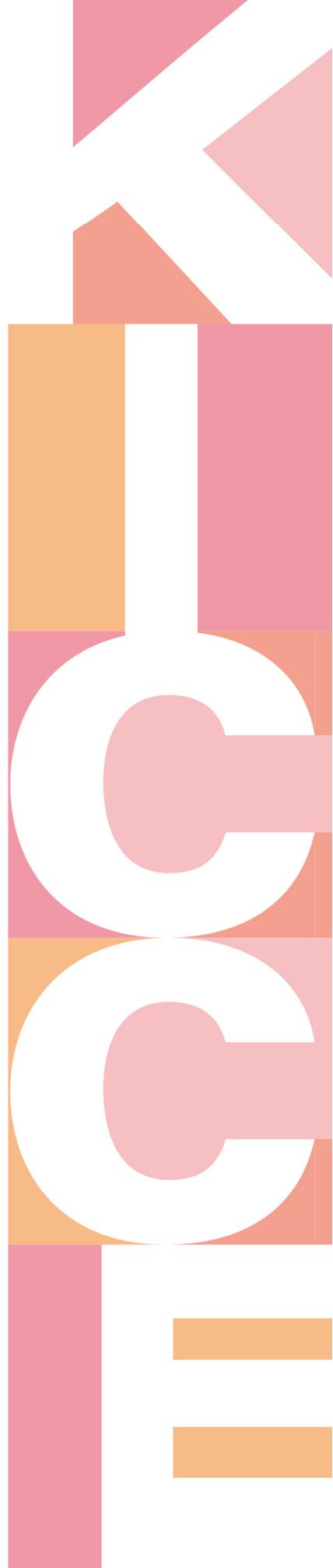
www.kicce.re.kr

2022년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자료집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목차

일본	3
일·가정 양립	5
양육지원	11
유아교육·보육	20
임신·출산지원	27
코로나19	32
기타	35
미국	47
양육지원	49
유아교육·보육	53
코로나19	66
기타	69
독일	75
일·가정 양립	77
양육지원	78
유아교육·보육	87
출산·임신지원	97
코로나19	98
기타	102
영국	109
양육지원	111
유아교육·보육	112
코로나19	125
기타	132



스웨덴	137
양육지원	139
유아교육·보육	142
임신·출산지원	151
코로나19	152
기타	154
중국	159
일·가정 양립	161
양육지원	162
유아교육·보육	167
임신·출산지원	179
코로나19	183
기타	184
호주	195
일·가정 양립	197
양육지원	198
유아교육·보육	200
코로나19	203
기타	204
프랑스	207
양육지원	209
유아교육·보육	211
코로나19	212
기타	218

2022년 해외 육아정책 동향 정보 (국가별, 주제별)



일본

일·가정 양립		
1	육아·간병 휴직 법 개정에 대한 안내(2022년 4월 1일부터 3단계 시행)	5
2	산후 아버지 육아휴직 10월 1일부터 시행	7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8
4	손자녀 휴가 및 육아·손자녀 양육 휴가	10
양육지원		
1	효고현 아카시(明石市)시의 5가지 무상 육아지원 제도	11
2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교부금	13
3	아기 기저귀 정기 배송	14
4	야마가타 <베이비 안심 스테이션> 등록 시설 모집	15
5	2022년도 오사카시 저소득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지원금 지급	17
6	베이비 퍼스트 운동	18
유아교육·보육		
1	제3차 학교안전 추진에 관한 계획(개요)	20
2	어린이집 등의 디지털화 추진 사업	23
3	어린이 등하원 버스 안전 철저 플랜	25
임신·출산지원		
1	불임 치료 보험 적용 도입	27
2	오키나와 현 나하시 임산부 건강 진단	28
3	임신 여성을 지원하는 출산준비금	30
코로나19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관련 어린이집 등의 대응	32
기타		
1	쇼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등 자립 지원 사업	35
2	중층적(重層的, Multi-layered) 지원 체제 정비 제도	36
3	아동 복지 주간	38
4	삿포로시의 의료적 케어 아동 보육 모델 사업	40
5	고베 아동 건강 플랜 2024	42
6	어린이 의료비 지원	43

❖ 일·가정 양립

1. 육아·간병 휴직 법 개정에 대한 안내(2022년 4월 1일부터 3단계 시행)

■ 육아·간병 휴직 법 개정

- 남녀 모두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출산 후 아빠의 육아 휴직 제도(출생 시 육아 휴직 제도의 도입과 고용 환경 정비, 개별(제도를 이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향 확인 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개정됨.

■ 고용 환경 정비, 개별 주지·의향 확인 조치 의무화

- 1) 육아 휴직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고용 환경의 정비
 - ‘육아 휴직’과 ‘출산 후 남성의 육아 휴직’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사업주는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마련해야 함.
 - ※ 또한 1개가 아닌, 복수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① 육아 휴직·산후 아빠의 육아 휴직 관련 연수실시
 - ② 육아 휴직·산후 아빠의 육아 휴직 관련 상담체제 정비(상담 창구 설치)
 - ③ 근로자의 육아 휴직·산후 아빠의 육아 휴직 취득 사례 수집 및 제공
 - ④ 근로자에게 육아 휴직·산후 아빠의 육아 휴직 제도와 육아 휴직 취득 촉진에 관한 방침 주지
- 2) 임신·출산(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을 한 근로자에게 개별적 주지·의향 확인 조치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출산 등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사업주는 육아 휴직 제도 등에 관한 다음 사항을 주지시키고, 육아 휴직 사용 의향에 대한 확인을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함.
 - ※ 육아 휴직 사용을 포기하게 하는 형태의 개별적 주지와 의향 확인은 인정 불가

주지사항	① 육아 휴직·산후 아빠의 육아 휴직에 관한 제도 ② 육아 휴직·산후 아빠의 육아 휴직 신청처 ③ 육아 휴직 시 급여에 관한 내용 ④ 육아 휴직·산후 아빠의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 보험료 관련 내용
개별 주지·의향 확인 방법	① 면담(온라인 면담도 가능) ② 서면 교부 ③ FAX ④ 전자우편 등 중 하나(③, ④는 근로자가 희망했을 경우에만)

- ※ ‘산후 아빠의 육아 휴직’과 관련된 고용 환경 정비, 개별 주지·의향 확인은 2022년 10월 1일부터가 대상

■ 기간제 고용 근로자의 육아·간병 휴직의 취득 요건 완화

- 현행(육아 휴직의 경우)
 - ① 고용 지속 기간이 1년 이상
 - ② 자녀가 18개월이 되는 사이 계약이 만료되었다는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 개정: 상기 ①의 요건을 폐지하고 ②에만 ※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 취급(고용 지속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노사 협정 체결로 인해 제외 가능)
 - ※ 육아 휴직 수당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준 완화

■ 육아 휴직 분할 사용

구분	산후 아빠의 육아 휴직(=출산 휴가) (22년 10월 1일~) 육아 휴직과 별도로 취득 가능	육아 휴직 제도 (22년 10월 1일~)	육아 휴직 제도 (현행)
대상 기간 취득 가능일 수	자녀 출생 후 8주 이내에 최대 4 주까지 사용 가능	원칙상 자녀 1세(최대 2세) 까지	원칙상 자녀 1세(최대 2세) 까지
신청기한	원칙상 휴가 2주 전까지	원칙상 1개월 전까지	원칙상 1개월 전까지
분할 사용	분할하여 2회 사용 가능 (단, 첫 신청 시 한꺼번에 신청하기)	분할하여 2회 사용 가능(사용 희망 시, 각각 따로 신청 가능)	원칙상 분할 사용 불가
휴직 중의 취업	노사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근로자가 동의한 범위에서 휴직 중 취업 가능	원칙상 취업 불가	원칙상 취업 불가
자녀 1세 이후 휴직 연장	-	육아 휴직 시작일 탄력적으로 수정 가능	육아 휴직 시작일은 1세, 18개월 시점으로 한정
자녀 1세 이후 휴직 재취득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재사용 가능※	재사용 불가

※ 1세 이후의 육아 휴직이 다른 자녀에 대한 출산 휴가, 산후 아빠의 육아 휴직, 간병 휴직 또는 새로운 육아 휴직 개시로 기존 육아 휴직이 종료된 경우로, 출산 휴가 등의 대상이던 자녀가 사망 등을 한 경우, 다시 육아 휴직을 취득할 수 있음.

■ 육아 휴직 사용 현황의 공개

- 종업원 수 1,000명 이상인 기업은 육아 휴직 등의 사용 현황을 연 1회 공개할 의무가 있음.
- 공개 내용은 남성의 '육아 휴직 등의 사용률' 또는 '육아 휴직 등과 육아 목적 휴가 취득률'임. 취득률 산정 기간은 보고한 날짜가 속한 사업 회계연도의 전년도임. 인터넷 등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하며, 자사 홈페이지 외에 후생노동성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양립 지원의 광장'에서 공개하는 것도 추천함.

2022년 03월 16일

출처: <https://www.mhlw.go.jp/content/11900000/000789715.pdf>

2. 산후 아버지 육아휴직 10월 1일부터 시행

■ '산후 아버지 육아휴직(출생 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등에 대한 홍보

- 일본 후생노동성은 「육아·개호 휴직법」 개정으로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산후 아버지 육아휴직(출생 시 육아휴직)'과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등에 대한 홍보를 9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홍보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심포지엄(온라인)' 개최 예정

- 관련 부서(도도부현 노동국)에서 「육아·개호 휴직법」 개정에 관한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며, 육아맨 프로젝트에서도 기업·관리직·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관련 세미나 개최할 예정임.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 심포지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 공표 안내 및 사례 소개/ 자유 토론(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한 전문가 의견 교환)
- 기업 대상 세미나 '육아·개호법이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 개정 법령의 해설 및 사례 소개를 포함하여 기업에게 요구하는 제도, 활동 등에 대해 소개
- 관리직 대상 세미나 '육아 보스의 관리 노하우': 기업 관리직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내 환경 조성 및 업무 관리 노하우, 관리직의 역할 등을 소개

- 청년층 대상 세미나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출산을 앞둔 부부나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사원,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신청 방법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라이프 스타일, 육아와 가사의 구체적인 분담 예시, 복직 이후의 업무 방법 등을 안내

■ ‘특별 상담 창구’ 운영

- 관련 부서(도도부현 노동국)에 설치된 육아휴직·산후 아버지 육아휴직에 관한 ‘특별 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육아휴직 관련 모든 내용에 대해 상담, 대응할 예정임.
-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촉진을 위한 안내 책자를 각 지자체 모자 보건 창구 등을 통해 모든 시민에게 배부함.
- 2021년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3.97%로 9년 연속 상승하여 역대 최고를 기록함(2021년도 고용 균등 기본조사). 후생노동성은 상기 활동을 포함하여 향후에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더욱 권장, 추진해 나갈 것임.
- 도도부현 노동국 고용 환경·균등부(실)는 기업·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육아휴직에 관한 특별 상담 창구를 마련,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모든 문의에 대응하고 있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다’, ‘육아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는 등의 상담에 응하며, 사실 확인 후, 시정 지도나 노사 간의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음.

2022년 08월 22일

출처: https://www.mhlw.go.jp/stf/newpage_27491.html

3. 육아휴직 분할 사용

■ 2022년 10월부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

- 일본에서 「육아·개호 휴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해당 법 개정에 따라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분할 사용을 위한 사내 시스템을 정비해야 함.

■ 배경

- 지금까지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이 원칙상 인정되지 않았으며, 이용할 수 있다 해도 기간을 합쳐서 사용해야 했음. 이로 인해 특히 남성 근로자는 휴직에 대한 불안감과 거부감 때문에 육아휴직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법이 최근 개정되어, 2022년 10월부터는 육아휴직을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됨.
- 구체적으로, 자녀가 2세가 되기 전까지 남성 근로자와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각각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부모가 각자 적절한 시기에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하게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게 됨.
- 또한, 자녀가 2세가 된 후의 육아휴직 연장도 지금까지는 2세 6개월, 3세가 되는 시점에 맞춰 휴직을 연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음.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철폐되어, 자녀의 2세 이후 육아휴직을 연장하는 경우, 시작 일에 대한 제한 조건이 없어짐. 즉, 자녀가 2세가 된 후에도 기간 중 전반 3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어머니가, 후반 3개월간의 육아휴직을 아버지가 사용할 수도 있게 됨.

■ 기업의 준비 사항

-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대한 개요를 이해하고, 법 개정에 따라 기업이 대응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야 함.
- 육아휴직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임을 사내에 주지시킬 필요가 있음. 이번 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분할 사용 외에도 산후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 등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가 도입될 것임. 개정 내용이나 구체적인 취득 예시 등을 정리한 안내 책자 배포나 사내 연수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개정 내용을 주지시켜야 함. 이와 동시에, 육아휴직에 관하여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인사팀 내에 상담 창구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함.
- 2022년 4월부터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및 출산을 신청한 경우, 사측은 반드시 육아휴직 제도의 개요와 신청, 육아휴직 시의 급여,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사회 보험료를 안내하고 확인해야 함. 면담이나 서면, FAX, 이메일을 통해 안내하며, 면담은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함.
- 개별 안내는 근로자의 육아휴직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육아휴직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기 위함임. 따라서 안내 시에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변경된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대해 알려야함.

- 취업 규칙 내용의 변경

-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변경된 내용은 사내 규정에 기재된 취업 규칙에도 반드시 새로 반영시켜야 함. 그중에서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 1) 육아휴직을 자녀 1명 당 2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취지 추가
 - 2) 자녀가 2세 반이 될 때까지, 또는 3세가 되는 기간 동안에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 일을 배우자의 '육아 휴직 종료 예정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 추가
- 육아휴직을 분할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자녀가 2세가 된 후에 육아휴직을 연장할 경우, 시작일의 제한이 없어진 점을 육아휴직 항목에 새로 추가해야 한다는 것임. 산후 아버지 육아휴직 제도 등 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 규칙을 변경하고, 근로자에게 주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 기준 감독관을 통해 보고해야 함.

2022년 07월 05일

출처: <https://www.soumunomori.com/keiei-izumi/archives/12380>

4. 손자녀 휴가 및 육아·손자녀 양육 휴가

■ 목적 및 취지

- 일본 고리야마시는 2022년 7월, 「베이비 퍼스트 운동」 참여를 선언하고, 활동 슬로건인 '고리야마시는 전력을 다해 육아를 응원한다!'의 구체적인 실행 제도 중 하나로 '손주 휴가'와 '육아·손주 양육 휴가'를 마련함. 고리야마시의 해당 제도를 계기로 민간기업과 타 지자체에 동일한 제도가 확장되어, 출산과 육아가 수월한 사회 실현에 기여할 것을 기대함.

■ 내용

- 손자녀 휴가: '남성 출산 보조 휴가(출산 이후 3주간의 기간 중 최대 3일간 특별 유급 휴가)'와 '남성 육아 참여 휴가(자녀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중 최대 5일간 특별 유급 휴가)'를 '남성(아버지)'뿐 아니라 '조부모'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

- 육아·손자녀 양육 휴가: ‘육아·손자녀 양육 휴가’로 제도를 규정하고, 새롭게 명칭을 정하여 육아와 손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조부모)이 유급 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도 ‘남성 출산 보조 휴가’와 ‘남성 육아 참여 휴가’와 동일한 휴가를 받을 수 있음. 이를 통해 산모의 입원, 퇴원 시 동행, 출산 시 동행, 출산 관련 입원 시에 해당 휴가를 이용할 수 있음. 또한 태어난 손자녀를 돌보거나, 출산아기의 형제 자매를 돌볼 때, 손자녀의 병원 진료 시에도 이용할 수 있음.
- 본 제도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함.

2022년 12월 24일

출처: <https://www.city.koriyama.lg.jp/uploaded/attachment/49960.pdf>

❖ 양육지원

1. 효고현 아카시(明石市)시의 5가지 무상 육아지원 제도

■ 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만들기

- 효고현 아카시시(明石市)에서 실시하는 <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 만들기> 슬로건의 핵심은 다음의 5가지 무상 육아지원 제도임.

■ 5가지 무상 육아지원 제도

- 육아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는 결국 인구 증가로 연결됨. 5가지 무상 육아지원 제도는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함.

1) 아동 의료비 무상화

- 거주지역에 따라 아동 의료비가 다름. 이에 아카시시는 2021년 7월부터 의료비 무상화 제도를 추가 확대하여 중심지 이상의 도시 중,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무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 진찰비 무료/ 지역 외 병원의 경우도 무료/ 조제비 무료

2) 둘째 자녀부터 완전 무상 보육 적용

- 자녀를 둘 이상 낳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고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둘째 자녀부터 보육비를 100%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
- 어린이집 및 유치원 비용 무료(지역 외 시설도 해당)/ 자녀들 간의 나이 차이 제한 없음/ 부모의 소득 조건 없음.

3) 0세 아동 보호 방문 '기저귀 정기 배달'

- 아카시시에서 교육을 받은 배달원이 매일 기저귀와 육아 용품을 가정으로 직접 배송함. 뿐만 아니라, 배송과 함께 육아에 대한 고충이나 고민을 들어주거나, 육아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해 줌.
- 대상: 2020년 4월 이후 출생아로, 생후 3개월부터 만 1세 생일 때까지
- 배송 제품: 기저귀, 분유 등의 육아 용품(약 32,000원 상당)

4) 중학교 무상 급식 시작

- 중학교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됨. 교육비가 늘어나는 시기인 중학생이 있는 가정의 부담을 줄여주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
- 1식 약 3,700원, 3년간 지원

5) 공공시설 입장료 무상화

- 천문 과학관은 고등학생까지 무료로 입장 가능함. 공휴일 및 휴일에 가족과의 여가 시간을 늘리기 위해, 다음의 시내 4개 시설의 어린이 이용료를 무료로 전환함.
- 대상 시설: 천문 과학관/ 문화 박물관/ 가족 놀이 공간 '하레하레'/ 아카시 수영장

2022년 06월 06일

출처: <https://www.city.akashi.lg.jp/shise/koho/citysales/kosodate/index.html>

2.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교부금

■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교부금

- 도쿄도는 지역의 저출산 대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의 선구적인 대처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 저출산 대책 중점 추진 교부금>을 활용하고 있음.
- 해당 교부금 사업은 결혼 지원 및 임신·출산, 유아기를 중심으로 한 육아를 배려하는 사회 만들기, 계몽 활동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선구적인 대응 및 긴급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집중 추진하면서 지자체의 활동도 지원하는 제도임.

■ 2022년도에 다음의 사업을 실시함.

1. 아동·육아 지지 도쿄 사업

- 육아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다양한 분야의 기관, 단체, 지자체와 제휴·협력하여, 사회 전체가 육아를 지원하는 제도를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육아 가정을 지지하는 제도 및 분위기를 마련함.
- 뿐만 아니라, 2021년에 리뉴얼한 도쿄도의 육아 정보 사이트 ‘도쿄 육아 스위치’의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인지도를 향상시킴.

2. 챗봇을 통한 육아 지원 정보 제공

- 도쿄의 육아 관련 정보를 정리한 ‘도쿄 육아 서포트 북’의 내용을 바탕으로 육아 상담을 해주는 채팅 상담 창구를 마련.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 지자체 실시 사업

1. 후추시(府中市) 실시 사업

- 온라인 육아 상담 사업: 위드&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안심하고 임신, 출산,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해 산부인과 의사, 조산사, 소아과 의사에게 육아 관련 고민 등을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

2. 오우메시(青梅市) 실시 사업

- 신혼 생활 스타트업 응원 사업: 신혼 생활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결혼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저출산 대책 및 안정적인 거주, 정착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 본 사업에 대한 전단지, 포스터, 디지털 홍보물 등을 통한 홍보 활동으로 인지도를 향상함.

2022년 06월 06일

출처: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kodomo/katei/tiikishoushikakyouka/index.html>

3. 아기 기저귀 정기 배송

■ 돌봄 방문 및 육아 정보, 아기 기저귀 무상 제공

- 이시카와현(石川県) 고마쓰시(小松市)는 생후 3개월부터 만 1세까지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매달 1회씩 돌봄 방문 및 육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와 동시에 일회용 기저귀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함. 2022년 7월 1일 고마쓰시 생활협동조합 코프(COOP) 이시카와에서 출범 기념식을 개최함.

■ 대상

- 고마쓰시에 출생/전입신고 된 생후 3개월에서 만1세 생일까지의 아동과 그 보호자

■ 지원 내용

- 아동과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해,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함. 더불어 매달 1회, 일회용 기저귀를 무상으로 배송.

■ 신청 방법

- 가정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함(매년 4월 말 예정). 4월 이후에 태어난 아동 또는 고마쓰시로 전입된 아동의 경우, 출생 신고 시(또는 전입신고 시)에 안내함.

■ 신청 및 배송 절차

- 고마쓰시에서 대상 가정에 ‘고마쓰시 아기 일회용 기저귀 정기 배송 신청’에 관한 연락을 함.
 - 대상자가 고마쓰 전자신청 서비스를 통해 신청.
 - 고마쓰시가 위탁업체에 일회용 기저귀 배송·육아 정보 제공 등을 의뢰.
 - 배송 업체가 배송 날짜를 연락한 후, 각 가정으로 기저귀를 배달하면서 보육 및 육아 관련 정보를 제공함.
- ※ 배송원 및 배송 업체는 이 제도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지 않음.

■ 주의사항

- 기저귀 배송 등은 고마쓰시가 지정한 위탁 업체가 진행함. 본 제도는 기저귀 배송과 함께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함. 따라서 기저귀 등의 지급품은 배송원과 대면하여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친척집 등 자택 이외의 장소로 배송 불가).

2022년 07월 01일

출처: <https://www.city.komatsu.lg.jp/soshiki/kodomokatei/kosodate/13496.html>

4. 야마가타 <베이비 안심 스테이션> 등록 시설 모집

■ 개요

- 야마가타현(山形県)은 육아 세대가 외출 시에 안심하고 모유 수유실이나 기저귀 교환대의 설치를 촉진 및 확장하고자 함. 영유아를 키우는 세대가 안심하고 외출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위하여 야마가타 <베이비 안심 스테이션>의 등록 시설을 모집하고 있음.

■ 설치 추진 보조금 안내

- ① 여성이 수유할 수 있는 공간 정비(파티션, 커튼, 칸막이, 가림막, 수유용 의자 등)
- ② 남성과 여성 모두 기저귀를 교환할 수 있는 공간 정비(기저귀 교환대, 아기 침대 등)
- ③ 분유수유 설비 관련 정비(분유보트, 전기포트 등)
- ④ 화장실 정비
- ⑤ 냉난방 설비 정비

※ ③~⑤은 <베이비 안심 스테이션> 전용 목적으로 정비하는 경우에 한 함.

■ 지원율·지원 한도액

- 지원율: 비용의 1/2
- 지원 한도액: 30만 엔(최대 지원금: 60만 엔)
- 채택 예정 건수: 약 10건(예산: 300만 엔)

■ 신청 기한

- 모집마감: 2022년 12월 20일(화)
- ※ 예산을 넘는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액은 지원 한도액으로 처리함.

■ 선정 조건 등

- 보조금을 활용하여 시설을 정비한 후, 해당 시설을 <베이비 안심 스테이션>으로 등록함.
-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기업 또는 단체 1곳 당 시설 1개임.
- 신청 양식은 홈페이지 URL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음.

- 보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예시
 - 건물 등의 신축에 맞춰 수유실·기저귀 교환대 등을 정비하는 경우(수유실·기저귀교환대 등의 설치 경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기존 건물 등에 수유실·기저귀 교환대 등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기저귀 교환대 등이 없었던 남성 화장실에 새로 설치하는 경우
- <베이비 안심 스테이션>에 해당하는 기존 시설 등을 수리, 리뉴얼 하는 경우

2022년 09월 09일

출처: <https://www.pref.yamagata.jp/documents/29731/hojokin.pdf>

<https://www.pref.yamagata.jp/documents/29731/toroku.pdf>

5. 2022년도 오사카시 저소득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지원금 지급

■ 지원금 취지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영향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식비 등 물가 급등에 직면한 저소득 육아 세대에 대한 생활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도 오사카 시 저소득 육아 세대를 대상으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지원금을 지급함.

■ 지원금 수급자

- 저소득 한부모 가정이며, 다음 1)~3) 중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
 - 1) 2022년 4월분 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 2) 공적연금 등(유족연금, 장애연금, 노령연금, 산재연금 등)을 수급함으로써 2022년 4월분 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아동부양수당 지급 제한 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에 한함)
 - 3) 2022년 4월분 아동부양수당은 지급받지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수입이 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와 동등 수준인 자

- 기타 저소득 육아 세대로, 다음 1)~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2022년 4월분 아동수당 또는 특별 아동부양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로, 2022년도 균등할 주민세가 비과세 대상인 자
 - 2) 그 외 대상 아동(2022년 3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장애가 있는 아동은 20세 미만)**)을 양육하는 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2022년도 균등할 주민세가 비과세 대상인 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가계가 급변하여 2022년도 균등할 주민세가 비과세 대상인 자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계급변자)
- * 2022년도 오사카 시 및 타 도도부현 등의 저소득 육아 세대에 대한 육아 세대 생활 지원 특별 지원금(한부모 가정분)의 지급이 끝난 아동은 대상에서 제외됨.
- ** 2022년 4월 이후~2023년 2월 말까지 태어난 신생아도 대상임.

■ 지급액

- 아동 1인당 5만 엔임.

2022년 10월 20일

출처: <https://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567246.html>

6. 베이비 퍼스트 운동

■ 개요

- 「베이비 퍼스트 운동」은 육아 세대가 자녀를 ‘낳고 키우고 싶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작된 운동임.
- 정부 기관과 기업은 육아 친화적인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공익 사단법인 일본 청년 회의소가 전국적으로 해당 제도를 전개하고 있음.
- 고리야마 시(郡山市)는 이 취지에 맞춰 2022년 7월 25일 「베이비 퍼스트 운동」에 참여할 것을 선언함. 활동 슬로건인 “고리야마시는 전력을 다해 육아를 응원한다!”를 바탕으로 제

도를 도입하고 있음. 시민, 사업자, 고리야마시 등이 하나 되어, 자녀를 ‘낳고 키우기 좋은’ 지역 만들기를 목표로 함.

■ 고리야마시의 액션 플랜

- 고리야마시에서는 다음의 3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인 액션을 실시함.

1) 안심하고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역 실현

- 조산사 등의 임신, 출산, 육아 지원(니코니코* 서포트): 육아 지원 거점 시설(니코니코 아동관)과 3개의 행정 센터에서 코디네이터(조산사)나 보건사가 임신기부터 육아기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함.
- 건강 상담과 수유, 목욕 등 산후조리: 조산사가 지역 지정 의료기관 등에서 숙박 또는 당일(1일 케어)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수유 지도 등을 실시함.
- 산전·산후 가사·육아 응원(도우미 파견): 모자수첩 교부 후 임신부 및 산후 1년 이내(다태아 출산의 경우는 2년 이내)인 여성의 가사나 육아를 돕기 위해 도우미를 파견함.
- 아기 니코니코 스테이션: 아기 니코니코 스테이션은 기저귀 교환과 수유를 할 수 있는 시설임. 아기와 편하게 동반 외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확충하도록 함.

2) 아동 성장 단계에 맞춘 육아 지원

- 육아 지원 거점 시설(니코니코 아동관): 아동과 성인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나 육아 동료 만들기에 대한 지원, 많은 세대가 상담 받을 수 있는 체제를 정비하여 종합적인 육아 지원에 힘씀.
- 자원봉사를 활용한 육아 응원(패밀리 서포트 센터 사업):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회원이 되어 신뢰 관계를 형성하면서 육아에 대해 서로 돕는 회원 시스템으로, ‘지역 내 상부상조하는 육아’를 목표로 하고 있음.

3) 젊은 세대의 희망 실현 응원

- 위드 코로나 결혼생활 지원 사업: 코로나19 사태로 남녀의 ‘만남의 장’이 제한되는 가운데, 후쿠시마 결혼·육아 응원 센터가 운영하는 온라인형 결혼 매칭 시스템 hapifukunavi (하피후쿠나비) 가입비 절반(5천 엔)을 지원함.

- 신혼 생활 스타트업 지원 사업: 신혼 생활 지원을 위해 조건을 충족한 신혼가구의 주택 취득 및 임차, 이사와 관련된 비용을 최대 30만 엔까지 지원함.

* 니코니코: 일본어로 방긋방긋이라는 뜻의 의태어

2022년 11월 28일

출처: <https://www.city.koriyama.lg.jp/site/kosodate/44897.html>

● 유아교육·보육

1. 제3차 학교안전 추진에 관한 계획(개요)

■ 학교안전 추진에 관한 계획

- 각 학교별 안전 대응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계획(학교보건안전법 제3조 제2항)임.
- 제3차 학교안전 추진에 관한 계획 마련에 대하여(2022년 2월 7일 중앙 교육심의회 답신)을 바탕으로 2022년 3월 25일에 각의(국무회의) 결정.
- 계획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임.

■ 총론

- 제3차 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
 - 학교가 작성한 계획·매뉴얼의 실효성에 대한 과제
 - 학교안전을 위한 실행 내용, 인식 등의 차이
 - 동일본대지진을 기억하며, 향후 대규모 재해 발생에 대비한 실천적인 방재 교육을 전국적으로 추진할 필요성 등

- 계획의 기본적인 방향성

- 학교안전 계획, 위기관리 매뉴얼 개정 주기를 마련하여 학교안전에 대한 실효성을 향상 시킴.
- 지역의 다양한 주체와 밀접하게 연계·협력하여 아동을 배려한 안전대책을 추진함.
- 모든 학교에서 실천적·실용적 안전 교육을 추진함.
- 지역의 재해 위험을 고려한 실천적인 방재 교육·훈련을 실시함.
- 사고 정보나 학교의 대책 상황 등 데이터를 활용해 학교안전을 가시화함.
- 학교안전에 관한 의식을 향상시킴(학교안전 문화 양성).

- 지향 목표

- 모든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고, 주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자질 및 능력을 갖출 것.
- 학교 관리 하에서 아동, 청소년 등의 사망 사고 발생을 0건으로 할 것.
- 학교 관리 하에서 아동, 청소년 등의 부상·질병 발생률을 장애나 중증 부상을 동반하는 사고를 감소시킬 것.

■ 추진 방법

- 다섯 가지 추진 방법을 마련하여 학교안전에 관한 구체적 추진과 학교안전에 관한 사회 안전의식을 고취시킴.
- 학교안전에 관한 조직적 대책 추진
 - 학교 경영 관점에서 학교안전에 관한 명확한 개념 정리
 - 세이프티 프로모션 스쿨의 개념을 도입해 학교안전 계획을 갱신하는 주기 확립
 - 학교 주변 지역의 자연 환경을 비롯하여,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한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 및 수정

- 학교 내 안전 담당 교직원의 명확한 역할 정리, 학교안전에 관한 연수·훈련 확충
- 교원 양성 시, 학교안전에 대한 학습 내용 포함
- 가정, 지역, 관련 기관 등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학교안전 추진
 - 커뮤니티 스쿨 등 학교와 지역 간 연계·협력 구조를 활용한 학교안전 방안 추진
 - 통학 시 안전 확보에 관한 지역 추진 체제의 구축, 통학로 교통안전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관련 기관과 연계한 제도 강화·활성화
 - SNS로 인한 아동, 청소년 등의 피해, 성 피해 근절을 위한 방법 대책 촉진
- 안전에 관한 학교 교육 확충
 - 아동, 청소년 등이 위험을 예측하고 회피하는 능력을 육성하는 안전 교육의 확충, 지도 시간 확보, 학교 교육 방식 개선
 - 지역의 재해 리스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재 교육의 확충, 관련 기관(소방단 등)과의 연계 강화
 - 유아기, 특별 지원 학교의 안전 교육 모범 사례 등 수집
 - 사이버 유해 정보 대책(SNS로 인한 피해), 성범죄·성폭력 대책 등 현대 사회에 걸 맞는 학교안전에 대한 계획 수립
- 안전관리에 관한 학교 제도 개선
 - 학교안전 점검에 관한 방안 개선(판단 기준 명확화, 아동을 배려한 대책 추가 등), 학교 설립자의 점검·대책 강화(전문가와와의 연계 등)
 - 학교 시설의 노후화 대책, 비구조재의 내진 대책, 방재 기능 정비 추진
 -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아찔 사고 사례 활용
 - 학교 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 등의 검증과 재발 방지 등(학교 사고 대응에 관한 지침 내용 개정에 관한 검토)

- 학교안전 추진 제도에 관한 종합 방안 마련
 - 학교안전과 관련된 정보 가시화, 공유, 활용 추진(조사항목, 조사방법 재검토 등)
 - 재해 공제 급부에 관한 데이터 등을 활용한 자료의 인지, 효과적 활용
 - 설립 주체(국·공립·사립)와 상관없이, 학교안전에 관한 연수 등의 정보, 기회 제공
 - AI,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방식으로 사고 예방에 관한 제도 마련
 - 학교안전에 대해 인지할 기회 부여(각 학교교직원의 인식 향상의 날·주간 설정 등)
 - 정부의 학교안전 시책 지원

2022년 03월 25일

출처: https://www.mext.go.jp/content/20220325_mxt_kyousei02_000021515_02.pdf

2. 어린이집 등의 디지털화 추진 사업

■ 사업 목적

- 어린이집의 디지털화를 추진함으로써,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아동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 실시 주체: 각 지자체

■ 사업 내용

- 비용 지원: 규정 시설에서 보육교사의 서류 작성 등 업무 부담 경감에 필요한 기능을 지닌 시스템(이하 '보육 업무 지원 시스템'이라 함)을 새로 도입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함.
- 업무 개선 추진 지원: 각 지자체의 업무 위탁을 받아 ICT 전문가가 지역 내 보육 시설을 방문하여 보육 업무 지원 시스템의 도입 지원, 업무 개선 추진 지원, 의식 개혁 지원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함.

■ 실시 요건

- 대상 시설: 정부, 지방공공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한 민간시설로, 도쿄도 내에서 2022년 4월 2일 이후에 개원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 및 사업
 - 1) 아동복지법 제39조 제1항에 규정된 어린이집(인가 어린이집), 입학 전 아동에 관한 보육 등 종합적 제공 추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항에 규정된 유보 연계형 인정어린이집
 - 2) 아동복지법 제6조에 규정된 소규모 보육 사업, 주택 방문형 보육 사업, 사업소 내 보육 사업
 - 3) <도쿄도 인가 어린이집 사업 실시 요강>에 규정된 도쿄도 인가 어린이집
 - 4) <도쿄도 긴급 보육 및 정기 이용 보육 사업 실시 요강>을 바탕으로 한 정기 이용 보육 사업(전용 시설 및 임시시설) 및 긴급 돌봄 보육
- 보육 업무 지원 시스템의 기능: 보육 업무 지원 시스템은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에 기여해야 하므로 최소 아래의 기능은 반드시 갖춰야 함.
 - 1) 다른 기능과 연동한 원아 대장 작성 및 관리 기능
 - ※ 원아 대장에는 성명, 주소와 같은 기본 정보 외에도 가족 연락처, 이메일 주소, 신체 측정 정보, 출생 시 기록, 성장 기록, 병력, 생활기록, 검진과 예방 등 다양한 정보를 관리해야 함.
 - 2) 원아 대장과 연동된 지도 계획 작성 기능
 - 3) 원아 대장, 지도 계획과 연동된 보육 일지 작성 기능
 - 4) 원아 대장과 연동된 원아의 등원 및 하원 관리 기능
 - 5) 보호자와의 연락에 관한 기능
- 도입 계획서: 대상 시설은 별도로 정한 ‘보육업무지원 시스템 도입 계획서’(이하 ‘도입 계획서’라 함) 및 확인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함. 도입 계획서에는 도입과 관련된 비용 견적서 등과 도입할 보육업무 지원 시스템에 등재된 기능에 대해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함.

- 기타 유의사항: 당해 연도 보육업무 지원 시스템을 도입할 시설 또는 사업(이듬해 4월 1일에 개설하는 대상 시설 포함)을 대상으로 함. 도입 비용은 시설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함.

2022년 05월 19일

출처: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kodomo/hoiku/ictsuishinjigyoku.html>

3. 어린이 등하원 버스 안전 철저 플랜

■ 어린이 등하원 버스 운행 시 철저한 안전관리에 관한 긴급대책

■ 소재 확인 및 안전장치 장비 의무화

- 운전자와 승차자에 상관없이, 버스 승·하차 시에 아동의 소재가 명확히 확인되도록 관계부처령(令) 등의 개정을 통해 아동의 소재 확인과 안전장치 장비를 의무화함.
- 의무 이행 내용
 - 하차 시 등에 점호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를 확인
 - 등하원 버스 안전장비 설치
- 법적 효과 등
 - 지도, 감사 등을 통해 각 원에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 의무 위반은 업무 정지 명령 등의 사유가 되며, 해당 명령 위반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안전장치 사양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

- 안전장치의 장비가 의무화되는 것을 감안하여 아동 방치를 방지하는 안전장치(가칭)의 사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작성함.
- 아동 방치를 방지하는 안전장치(가칭)의 사양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관계부처령 개정에 따른 의무화에 따라 조속히 정리함.

- 향후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등을 작성함.
- 휴먼 에러(인재)를 보완하는 안전장치여야 함.
- 사업자(유치원 등)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일반 상용차에 후 부착 가능한 안전장치도 고려해 봄.

■ 안전 관리 매뉴얼 작성

- 차량 관련 대책인 안전장치 사양에 관한 가이드라인 작성과 동시에 등하원 버스 운행 시 어린이집 등 시설 현장에 도움이 되면서도 알기 쉽고 간결한 안전 관리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함.
- 안전 관리 매뉴얼의 포인트
 - 매일 사용할 수 있는 체크 시트: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매일 확실히 확인하는 내용등하원 버스 픽업 업무 흐름에 따라 포인트 정리: 원에서의 업무 흐름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내용
 - 아동 방치 사고 제로를 목표로 함: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례를 공유, 아동 스스로가 구조 신호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버스 랩핑 및 스모크 선텍 사용에 관한 유의사항
 - 심플한 구성: 내용을 확실히 이해하고 다시 읽어도 부담스럽지 않도록 구성

■ 조기 아동 안전 대책 촉진을 위한 '아동 안심·안전 대책 지원 패키지'

- 등하원 버스 안전장치 도입 지원
 - 장비가 의무화된 벨 등 차량 내 아동의 소재 누락 방지 장치 장비 등을 위한 개보수 지원
- 등원 관리 시스템 도입 지원
 - 아동의 등하원 상황을 보호자가 간편하게 연락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직원 간 확인 및 공역을 지원하기 위한 등원 관리 시스템 도입을 지원
- 아동 보호 태그(GPS) 도입 지원
 - 안전 대책에 기여하는 GPS를 활용한 아동 지킴 서비스와 관련된 기기 등의 도입 지원

- 안전 관리 매뉴얼에 관한 동영상 전달 및 연수 실시 등
 - 안전 관리 매뉴얼의 이해를 돕도록 설명 영상을 제작하고 연수를 실시
 - 등하원 버스에 장착하는 안전장치 권장 리스트 작성

2022년 10월 12일

출처: https://www8.cao.go.jp/shoushi/shinseido/meeting/anken/k_4/pdf/s1.pdf

❖ 임신·출산지원

1. 불임 치료 보험 적용 도입

■ ‘생식 보조 의료’에 대해 올 4월부터 보험 적용 대상 포함

- 2022년 2월 9일, 중앙 사회보험 의료협의회에서 인공수정 등의 ‘일반 불임치료’, 체외 수정, 현미수정 등의 ‘생식 보조 의료’에 대해 올 4월부터 보험 적용 대상에 새로 포함하기로 함.
- 이는 일본 생식의학회가 일본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식 보조 의료 및 일반 불임치료의 각 의료 기술에 대한 유효성 등 성과를 평가, 정리한 생식 의료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생식 보조 의료’에서는 채란에서 배아 이식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기본적인 진료는 모두 보험 적용이 되며,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치료 중 선진 의료로 정의된 것은 보험 진료와 병용할 수 있음.

■ 불임치료 보험 적용에 해당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험관 아기 등 기본 치료는 모두 보험 적용됨.
- 국가 심의회(중앙 사회보험 의료협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관련 학회의 가이드라인 등에서 유효성·안전성이 확인된 치료(아래 참조)는 보험 적용됨.
- 일반 불임치료: 타이밍법, 인공수정

- 생식보조의료: 난자, 정자 채취→ 체외수정·현미수정→ 수정란 배양→ 배아 동결 보관→ 배아 이식
- 생식보조의료 중 추가로 실시될 수 있는 ‘옵션 치료’에 대해서도 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선진 의료’로 보험과 병용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음.
 - ※ ‘선진 의료’란 보험 외 선진 의료 기술이라 인정된 것으로, 보험 진료와 함께 진행할 수 있음. 불임치료에 관한 ‘선진 의료’는 수시로 추가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진료받는 의료기관에 확인하기 바람.
- 연령 및 횟수 요건(체외 수정)은 지원금과 동일
- 보험 진료에서도 현행 지원금과 동일하게 아래와 같은 제한 조건이 있음. 또한 일부는 경과조치가 적용됨.
- 연령 제한: 치료 시작일 기준 여성의 연령이 43세 미만일 것
- 횟수 제한: 첫 치료 시작 시점 여성의 나이 횟수 상한 40세 미만은 총 6회까지(자녀 1명 당), 40세 이상~43세 미만은 총 3회까지(자녀 1명 당)
- 치료비의 30%만 청구에서 부담하게 됨.
- 치료비가 고액인 경우, 월 상한액(고액 요양비 제도) 있음. 구체적인 상한액이나 절차는 가입한 의료보험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거주 지역 담당과)가 확인할 필요 있음.

2022년 03월 24일

출처: <https://www.mhlw.go.jp/content/000913267.pdf>

2. 오키나와 현 나하시 임신부 건강 진단

■ 개요: 임신부 건강검진 비용 지원

- 임신 중에 산모 모두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출산을 위해 정기 건강 진단을 받아야 함. 오키나와 현 나하시(那覇市)에서는 14회에 걸쳐 임신부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 2021년도부터 다태아(쌍둥이나 세쌍둥이 아기) 임신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5회를 추가로 지원함. 임신 건강 수첩과 함께 지급되는 임신부 건강검진 진찰표를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음.
- 임신부 건강 검진 사업비의 일부는 '특정 방위 시설 주변 정비 조정 지원금'에 편성되어 있음.

■ 올바른 임신부 건강 진단 횟수

임신 주수	건강 진단 횟수
임신 23주까지	4주 1회
임신 24주 ~ 35주까지	2주 1회
임신 36주 ~ 출산까지	1주 1회

- 비용 지원 항목은 임신부 건강검진 진찰표에 기재된 검사 항목(빈혈, 혈액형, 불규칙항체, 매독혈청 반응, B형·C형 간염 항원 등 기본 검사와 초음파 검사 등)만 해당.
- 최근 나하시로 전입한 세대는 나하시 보건소 지역보건과 창구에서 임신 주수에 따른 건강 진단표를 전달하고 있음.
- 나하시에서 타 지역으로 진출한 세대는 해당지역 보건과에 임신부 건강 진단 지원을 문의 하기 바람.

■ 기타

- 오키나와 현 외 의료기관에서 임신부 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검진 비용을 환불해주는 제도를 쓸 수 있음. 임신부 건강검진 비용을 선결제 한 후, 신청하면 지원 범위 내에서 비용을 환불 받을 수 있음. 단,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된 비용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022년 04월 11일

출처: <https://www.city.naha.okinawa.jp/nahahokenjyo/bosihoken/bosihoken/ninnpukennshinn.html>

3. 임신 여성을 지원하는 출산준비금

■ 출산준비금 개요

- 일본 정부는 임신 여성을 지원하는 출산준비금에 대해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나는 신생아 1명당 총 10만 엔 상당의 쿠폰(현금 지급도 가능)을 지급하기로 함. 지자체에 임신 신고서와 출생 신고서를 제출하면 각각 5만 엔을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현금 지급도 가능함.
- 또한 2022년에도 희망하는 지자체에 한하여 사전 도입이 가능함. 임신 신고서 제출이 2023년 1월 1일 전이라도 출산일이 2023년 1월 이후라면 임신과 출생 시 총 2회분(각 5만 엔)을 지급받을 수 있음. 2022년 4월부터 12월 사이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출생 시 5만 엔 분량만 지급됨.
- 아기 용품 구입비 외에 산전 산후조리, 임시 돌봄, 가사 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임.
- 일본 정부는 10월 28일에 결정되는 종합경제 대책의 핵심 중 하나로 실행하겠다는 방침임.

■ 도입 시기

- 2023년 1월이며,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신생아임.

■ 출산 준비금의 구조

- 지자체에 임신 신고서와 출생 신고서 제출 후 각각 5만 엔 분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2023년 1월 이후에 태어나는 신생아로, 임신 신고서가 2023년 1월 이후에 제출된 경우, 임신 신고 시 5만 엔, 출생 신고 시 각각 5만 엔이 지급됨.
- 2023년 1월 이후에 태어나는 신생아로, 임신 신고서가 2022년에 제출된 경우에는 출생 시에 임신 신고와 출생 신고 각 5만 엔이 더해져 총 10만 엔이 일괄 지급됨.
- 2022년 4월~12월에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금으로 5만 엔이 지급됨.

■ 도쿄도의 실시 예

- 실제로 출산 가정에 대한 육아 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은 여러 지자체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도쿄도는 코로나19 상황 속 '출산 응원 사업'으로써 21~22년도에 출산한 가정에 자녀 1인당 10만 엔 상당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음.
- 각 가정은 전용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음.
- 용품 예시
 - 서비스: 가사 지원, 베이비시터 등의 육아 지원 서비스,
 - 아기 용품: 우유나 분유 등의 식품, 물티슈, 기저귀, 젖병, 유모차 등
 - 가전제품: 청소 로봇, 가습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주방 가전 등
 - 장난감: 놀이용 완구, 레고, 그림책 등
 - 위생용품: 마스크, 에탄올 소독제 등
- 상기와 같이 다양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음. 정부는 이러한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전개할 예정임.

2022년 10월 31일

출처: https://www.ikuhaku.com/mains/systemdetail/tokyo/nerima_ku/37194/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kodomo/shussan/tokyo_shussanouen.files/shussanouen_leaf2022.pdf

❖ 코로나19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관련 어린이집 등의 대응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로 인한 등원 자제(2022년 1월 25일 업데이트)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급증으로, 후나바나 시(船橋市) 내에서도 복수의 보육 시설 관계자들의 감염이 확인되고 있음.
- 2022년 1월 21일부터는 치바현에 '만연방지 등 중점 조치'(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제한 조치)가 적용됨.
- 감염 확산 방지, 보육 체제 확보라는 관점에서 가정 내 보육이 가능한 경우는 가정 보육을 협조 요청함.
- 가정 보육에 협조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등원하지 않은 일수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함.

■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때

- 어린이집 등은 원칙적으로 운영하지만, 감염 예방,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가정 보육이 가능한 경우 가정 보육을 하도록 권고함.
- 보육이 필요한 경우라도 필요한 날짜 및 시간에 맞춰 어린이집 등을 이용할 것(부모 중 한 명이 휴가인 경우에 등원을 자제하고, 재택근무 시에는 통근에 필요한 시간대를 제외하고 근무시간에 맞게 이용할 것).
- 가정 보육 협조 요청은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등원을 자제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협조 가능한 범위 내에 가능함. 시설 보육을 희망하는 경우는 필요한 시간 동안 보육을 제공하도록 요청해 둬.

■ 등원 자제 기간

- 2022년 1월 26일 ~ 2022년 2월 13일

■ 보육료의 감면

- 감면 대상 기간은 등원 자제 기간
- 등원을 자제한 일수만큼 보육료는 1일 단위로 계산하여 감면함.
- 감면 적용 시 보호자의 별도의 절차는 불필요. 후나바나 시가 각 시설별 원아의 등원 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육료를 감면함.
- 원칙상 먼저 전체 보육료를 납부해야 하며, 감면 적용 후의 환급금 취급에 대해서는 다시 공지함.
- 이용 중인 시설에 보육료를 직접 납부하고 있는 인정 어린이집, 소규모 보육사업소, 가정적 보육사업을 이용하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환급 방법 등이 시설마다 다르니 이용 중인 시설에 확인해야 함.
- 감면은 후나바나 시에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됨. 해당 지역 외 거주자는 해당 지자체에 문의

■ 부(副) 식비에 대하여

- 각 시설에서 실비를 징수하는 부식비에 대해서는 월정액 징수가 기본이나, 이번 등원 자제 부탁 관련 상세 내용은 각 원별로 다르므로, 등원하는 원에 확인할 것.

■ 행사 등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라 행사 등을 중단 및 축소할 수 있음. 각 시설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상황을 지켜보면서 행사 등을 할 수 있을지, 내용을 변경해 실시할 수는 없는지, 매일 검토하고 있음.
- 후나바나 시 내 보육 시설은 시설 환경이나 직원 수, 재적 아동 수 등이 다르기때문에 행사 내용은 다르지만, 각 시설의 직원은 감염 확산 방지에 힘쓰면서 영유아의 원 생활이 이어지도록 매일 고군분투하고 있음. 따라서 보호자들도 각 시설의 대응에 대해 이해하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함.

■ 기타

- 휴일 보육도 가정 보육이 가능한 분은 가정 내 보육을 요청함.
- 향후 정부 및 지자체의 동향, 지역의 감염 상황 등에 따라 대응이 변경될 수 있음.

■ 감염 확산 방지에 대해서

- 보호자는 등 하원 픽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 픽업을 삼갈 것.
- 아동의 건강 상태에 더욱 유의하고, 발열 및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을 자제해야 함. 또한 열이 났을 때는 정상 체온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해열 후 24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 등원해야 함.
- 동거 가족 중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자가 있을 경우 등원을 삼갈 것.
- 동거 가족이 밀접접촉자로 특정되는 등의 사유로 PCR 검사를 받게 된 경우, 음성이 확인 될 때까지 자녀 등원을 자제할 것.
- 동거 가족, 자녀가 PCR 검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등원하지 말고 원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결과도 보고해야 함. 원에 공유된 내용은 지자체, 보건소와도 정보를 공유할 예정임.
- 감염 확산 위험의 요인 중 하나인 '통합 보육'의 인원수를 가능한 한 줄이기 위해, 최대한 아침, 저녁 보육 시간을 단축하는 사항에도 협조를 요청함.

2022년 01월 25일

출처: <https://www.city.funabashi.lg.jp/kodomo/hoiku/002/p077842.html>

❖ 기타

1.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등 자립 지원 사업

■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등 자립 지원 사업

- 만성 질병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아동 등의 건전 육성 및 자립 촉진을 위해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등 및 그 가족에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정보 및 조언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함. 이와 동시에 관련 기관과의 연결을 조정하는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등 자립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본 제도는 인정 NPO 법인 난치병 어린이 지원 전국 네트워크에 위탁 실시함.

■ 상담 지원

- 아동과 그 가족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화 상담이나,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등의 양육 경험자가 주도하는 또래상담(peer counseling)을 실시함. 환자·가족 모임 소개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또래(peer)를 찾아 연결해 주기도 함.
- 또래상담: 아동 본인과 가족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등의 양육 경험자가 일상생활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상담 및 조언을 실시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을 고려하여 중단하고 있었으나, 2020년 9월부터 실시 방법 등을 변경해 일부 재개하였음.

■ 소아 만성 특정 질병 아동 등 자립 지원원(員)을 통한 지원

- 자립·취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지역의 사회 자원을 활용하여 각종 지원 제도의 이용 계획을 작성, 지원 또는 관련 기관과의 연락을 조정함으로써, 이용자의 환경 등에 맞는 지원을 실시함.

■ 놀이 봉사 파견

- 장기 입원 중이거나 재택 요양 중인 아동과 놀이를 통해 즐겁게 활동하는 놀이 봉사를 파견함. 질병과 치료에 대한 불안을 덜어주고, 일상생활이 즐거워지도록 일정 연수를 수료한 자원봉사자가 병동이나 자택으로 방문함.

■ 교류 모임 개최

- 아동 본인이나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호 교류하는 기회를 위해 교류 모임을 개최함.

2022년 02월 04일

출처: <https://www.fukushihoken.metro.tokyo.lg.jp/kodomo/kosodate/josei/syoman/syoumanziritsu.html>

2. 중층적(重層的, Multi-layered) 지원 체제 정비 제도

■ 사회복지법 개정을 통한 새로운 제도 도입 배경

- 사회복지법 개정에 의거하여 중층적 지원 체제 정비 제도가 도입됨. 본 제도의 도입 배경은 복지제도·정책과 실제 국민이 직면하는 어려움·괴로움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이”에 있음.
- 일본의 사회보장은 인생에서 전형적으로 여겨지는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는 기본 접근 방식 하에 발전해 옴. 따라서 일본의 복지제도·정책은 아동, 장애인, 노인이라는 대상자 속성이나 간병, 학대, 빈곤이라는 위험요소 별로 제도를 마련하여 현금·현물 지급과 함께 전문적 지원체제를 구축해옴. 양적, 질적인 내용을 모두 확충해 왔음.
- 그러나 일본사회의 특성이 변화하면서, 이로 인해 국민의 생활도 변화해왔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아동, 장애인, 노인, 빈곤 계층의 대상자 별 지원 체제만으로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워짐.
- 한편, 인적네트워크나 다양한 참여기회로 인해 지역사회활동이 지금까지의 공동체와는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그 중에는 특정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하는 활동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흥미나 관심에서 시작된 활동이 이어지면서 관계성이 풍부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있음.
- 후생노동성은 이처럼 사회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과제와 향후 가능성이라는 두 요소를 모두 고려한 중층적 지원 체제 정비 제도를 설계해 옴.

■ 중층적 지원 체제 정비 제도의 개요

- 중층적 지원 체제 정비 제도는 지자체 전체와 지역 관계자가 끊임없이 소통하고 연결되는 지원 체제의 구축을 컨셉으로 ‘대상자의 속성을 따지지 않는 상담 지원’, ‘참여 지원’, ‘지역 만들기를 위한 지원’의 세 가지 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것을 필수로 함.
 - 중층적 지원 체제 정비 제도에서 각 제도의 내용은 사회복지법 제106조의 4 제2항에 규정하고 있음. 세개의 지원을 제1~3호에 규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규정을 제4호 이후로 규정하고 있음. 각 제도는 개별적, 독립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화되어 종합적으로 진행 될 때 더욱 효과적임.
- 1) 포괄적 상담 지원 사업(사회복지법 제106조 4 제2항 제1호)
 - 지원 대상자의 속성과 세대를 불문하고 포괄적으로 상담에 응함.
 - 지원 기관의 네트워크에서 대응함.
 - 복잡·복합적인 과제는 적절한 다기관 협동 사업으로 연결함.
 - 2) 참여 지원 사업(사회복지법 제106조 4 제2항 제2호)
 - 사회와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을 함.
 -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한 세심한 매칭, 메뉴를 마련함.
 - 본인에 대한 정착 지원과 수용처를 지원함.
 - 3) 지역 조성 사업(사회복지법 제106조 4 제2항 제3호)
 - 세대나 속성을 초월하여 교류할 수 있는 장소나 거처를 정비함.
 - 교류, 참가, 배움의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개별 활동이나 자원을 정비함.
 - 지역 플랫폼 형성과 지역 활동 활성화를 지원함.
 - 4) 아웃리치(Outreach) 등을 통한 지속적 지원 사업(사회복지법 제106조 4 제2항 제4호)
 -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자에게 도움을 줌.
 - 회의나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속에서 잠재적인 상담자를 찾아냄.
 - 본인과의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한 지원에 중점을 둬م.

5) 다기관 협동 사업(사회복지법 제106조 4 제2항 제5호)

- 지자체에서 포괄적인 상담 지원 체제를 구축함.
- 중층적 지원 체제 정비 사업의 핵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함.
- 지원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을 도모함.

2022년 01월 10일

출처: <https://www.mhlw.go.jp/kyouseisyakaiportal/jigyou/>

3. 아동 복지 주간

■ 아동 복지 주간 제정

- 일본 후생노동성은 아동과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국민 전체가 노력한다는 목적 하에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1주일을 아동 복지 주간으로 제정함.
- 아동 복지 주간의 표어는 매년 새로 모집하고 있으며, 건강하고 열심히 생활하는 아동에게 보내는 응원과 아동이 미래사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주제로 선정함. 선정된 표어는 아동 복지 주관을 상징하는 역할로, 홍보·계몽 포스터를 비롯해 정부 및 전국 각지에서 실시하는 사업과 행사 등에서 폭넓게 활용됨.

■ 아동의 건강한 성장

- 본 캠페인의 취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임. 이는 사회의 보배인 아동에 대한 국민 전체의 소망으로, 모든 아동이 가정과 지역에서 충분한 애정을 받으며 꿈과 희망을 갖고 미래를 짊어질 인재로서, 개성 있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함.
- 따라서 정부는 모든 아동과 육아를 소중히 여기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또한, 이러한 ‘사회 만들기’를 성인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회가 이상적인지를 아동 개개인이 각각의 주체가 되어 판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뒷받침할 환경을 정비해 나가는 것도 필요함. 이와 같이 아동과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해 국민

전체가 고려한다는 목적으로, 매년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1주간을 ‘아동 복지 주간(5월 5일~5월 11일)’으로 정하고, 아동 복지의 이념의 보급·계발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하고 있음.

■ 아동 복지 주간의 주최 기관

- 후생노동성, 전국 사회복지 협의회, 아동 육성협회임.

■ 지자체의 아동 복지 주간 활동

- 아동 복지 이념의 보급: 저출산, 핵가족화 진행에 따른 육아 불안, 육아의 고립화와 더불어 아동학대 증가, 인터넷과 SNS 보급에 따른 아동에게 미치는 악영향 등 아동이나 가정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다음 세대를 담당할 아동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를 인식함. 아동은 아동 권리에 관한 조약 정신에 따라 적절한 양육을 받고 심신의 건강한 성장·발달, 자립 등을 보장받을 권리를 갖고 있음. 이에 정부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연령과 발달에 맞게 의견이 존중되고 이익을 우선시 한 아동복지 이념의 보급에 노력함. 이를 위해 행정 뿐만 아니라, 기업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일과 생활의 조화, 사회 전체의 아동 및 육아 가정 지원에 대해 언론, 민간단체, 기업 등의 협조를 받아 홍보·계몽 활동을 추진함.
-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녀 간 교류 촉진: 아동의 불안과 고민, 꿈, 장래 희망 등에 대해 가족이 함께 대화하는 등 부모와 자녀가 대화할 기회 및 정보 제공에 노력함. 또한 ‘식사’를 통해 부모와 자녀가 교류할 기회를 만들도록 하는 계몽 활동을 추진함.
- 지역의 아동 건전 육성 활동 촉진: 놀이방(아동관, 兒童館) 등에서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아동이 다른 연령 집단에서도 놀이 및 문화 체험 활동, 사회 참여 활동을 통해 자주성, 사회성 및 창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또한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나 지역 단체의 활동을 촉진함. 더불어, 비행·괴롭힘·자살·왕따 문제 등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중·고등학생 등의 거처 마련을 촉진함.
- 아동학대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정부, 지자체, 지역 관련 기관, 주민이 협력하여, 아동이 학대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함.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아동학대 방지책을 확대함.

- 모자 보건, 건강 증진: 보호자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은 평생에 걸쳐 진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검진을 향상과 모자 보건에 관한 지역 활동 추진에 힘쓰며, 지역 보건센터, 육아세대 포괄 지원센터 등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에 관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도록 함.
- 다양한 보육 수요 등에 대한 대응: 여성의 취업, 취업형태의 다양화 등에 따른 보육 수요의 증대 및 다양화, 취업 희망자의 잠재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기 위한(특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기아동 해소나 어린이집의 연장 보육, 긴급 보육 등 다양한 보육프로그램 확충을 위해 노력함.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취학 후에도 방과후 아동 클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른바 ‘초등 1학년의 벽’을 해소하고, 육아 불안, 고민 등에 대해 지역의 가까운 시설에서 육아 상담 및 교류를 실시하는 지역 육아 지원 거점의 역할을 홍보하고 확충함.
- 장애 아동과 가족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 조성: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일상생활과 놀이를 통해 주체성을 가진 건강한 아동으로 자라고, 가족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지역을 목표로 함.

2022년 04월 08일

출처: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odomo/kodomo_kosodate/jidouweek/index.html

4. 삿포로시의 의료적 케어 아동 보육 모델 사업

■ 삿포로시 의료적 케어 아동 보육 시범 사업

- 일본 삿포로시(札幌市)는 ‘삿포로시 의료적 케어 아동 보육 시범 사업’을 실시함. 일상적으로 객담(咯痰)* 흡입이나 경관영양(經管營養)* 등의 의료적 케어(※)을 필요로하는 아동과, 집단보육이 가능한 아동 돌봄 시설을 대상으로 함.

※ 주치의가 지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의료 행위로서, 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님.

* 객담(咯痰): 가래

* 경관영양(經管營養): 위장관에 튜브를 삽입하여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뜻함.

- 본 시범 사업은 삿포로시에 거주하며 보호자의 취업 등으로 인해 보육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 어린이집 등록과 마찬가지로 보육 필요 사유가 있고, 의료적 케어가 필요한 자녀가 있는 가정이 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시범 사업 내용

- 삿포로시 시라이시구(白石区) 보육·육아지원센터와 삿포로시 아쓰베쓰구(厚別区) 보육·육아지원센터에서 실시하며, 대상연령 및 보육 관련 정보는 다음과 같음.
- 대상 연령: 0세~초등학교 입학 까지
- 보육일: 월요일~금요일(공휴일 제외)
- 보육 시간: 오전 9시~오후 4시
- 수용 인원수: 각 시설 당 1명(*최대 총 2명)
- * 대상이 되는 아동의 연령이나 필요한 의료적 케어 내용에 따라서는 추가 수용(1명)이 가능할 수 있음.
- 보육료는 일반 어린이집과 비슷한 수준임. 의료적 돌봄 실시에 필요한 의료기기, 의료용 도구, 의약품 및 소모품 등은 보호자가 준비해야 함.

■ 이용 신청 및 등록 결정 절차

- 이용 신청: 7월 19일(화)~8월 12일(금)까지, 거주지 구청의 건강·아동과 아동가정복지(담당)계에 필요 서류 제출
- 후보자 조정(8월 중): 제출한 관련 서류는 구청에서 작성한 어린이집 등 이용조정기준표와 함께 어린이미래국 육아 지원부로 회송됨. 그 후 어린이미래국이 공청회 또는 신청서류를 바탕으로 검토 진행.
- 등록 검토(9월 초~중순): 검토 결과, 후보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시범사업 어린이집에서 일정 기간 동안(약 1~2일), 보호자 동석 하에 보육을 경험해 봄. 의료 케어 내용, 집단 보육 가능 여부, 주치의 소견서, 보육 체험 실시 결과, 보육 필요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 아동을 결정함.

- 이용 결정 안내 및 의료적 케어 실시 내용 확인(9월 말): 의료적 케어 보육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된 경우, '의료적 케어 실시 내용 통지서'를 보호자에게 발송함.
- 등원 결정(10월): 시범 사업 실시 어린이집에서 보육 및 의료 케어를 시작함.

2022년 07월 19일

출처: <https://kosodate.city.sapporo.jp/mokuteki/azukeru/hoiku/8237.html>

5. 고베 아동 건강 플랜 2024

■ 개요

- 본 제도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육아 지원을 추진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차세대 육성 지원 대책 추진법 및 아동·육아 지원법에 근거하여 책정한 실행 계획임.
- 보호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과 불안, 고립감을 해소하고 아동의 특성,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임신·출산기 부터 학령기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육아 지원을 제공할 것임.

■ 계획 기간

2020년~2026년(5년간)

■ 계획 개요

- 본 계획은 향후 5년간 실시하는 6개의 주요 시책과 방향성을 정하고 있음. 더불어, 각각의 목표 실현을 위해 심화 정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유연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검토해 갈 것임.

■ 6개 주요 시책 및 방향성

- 일과 육아의 병행 지원 : 유치원 돌봄 보육, 보육 서비스 정보 제공 센터, 보육 서비스 코디네이터의 확충, 패밀리 서포트 센터 증설 등

- 임신·출산·육아기 지원: 구청 전문 상담원의 지원, 임신부 SOS 제도 확충, 산후 돌봄 사업, 산전·산후 홈 헬프 서비스 확충, 아동 건강 조사·산부 건강 조사 확충, 주택 리모델링 지원 확충 등
- 특별 지원이 필요한 아동·가정에 대한 지원: 고베시 아동 학대 방지 조례 재점검, 양부모 제도·한부모 가정·장애아동 등에 대한 지원 확충, 육아 세대의 주거지 확보 지원 등
- 지역 내 육아 지원·청소년 건전 육성: 방과후 아동 건전 육성 사업, 방과후 교실 추진 사업의 확충 등
- 영유아기의 교육·보육 질 향상·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
- 육아가 수월한 사회 환경 조성 및 개발: 고베 육아 응원단, 육아 응원 사이트 적극 활용 등

2022년 09월 13일

출처 : <https://www.city.kobe.lg.jp/a57667/kosodate/shien/support/kobekkosukoyakaplan2024/index.html>

<https://www.city.kobe.lg.jp/a57667/kosodate/shien/support/kobekkosukoyakaplan2024/torikumi06.html>

6. 어린이 의료비 지원

■ 배경

- 아동의 의료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하고 아동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의료비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17년 11월 진료부터 해당 제도의 대상 연령을, 15세(중학교 수료)에서 18세(18세가 된 날 이후 첫 3월 31일)까지 확대하고, 2018년 4월부터 복지 의료비 지원 제도가 변경됨. 최근 관련 내용이 추가, 정리에 따라 제도에 대한 공지를 게재함.

■ 병원, 진료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보험 진료에 적용된 의료비 및 방문 간호 이용료의 자기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일부 자기 부담액: 의료기관 1곳당 1일 최대 500엔(월 2일 한도)

- 3일차 이후의 부담은 없음.
 - 복수 의료기관을 이용한 경우, 의료기관 1곳당 하루 최대 500엔 부담. 또한 동일 의료기관이라도 ‘입원’과 ‘통원’, ‘치과’와 ‘치과 외’는 각각 별도 계산됨.(1일 부담액이 500 엔 미만인 경우는 전액)
 - 원외(院外) 처방전으로 약국을 이용한 경우, 약국에서 부담할 금액은 없음.(단, 용기(容器)비 등 보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은 제외)
 - 입원실 요금의 차액, 소견서 없이 대형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 발생한 비용, 기타 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입원 시 식사 요양에 드는 자기부담(표준 부담액)
- ※ 단, 신체장애인 수첩 1급·2급을 교부받은 자, 고도의 지적장애인 및 신체장애인 수첩(3급~6급)을 교부받은 중등도의 지적장애인은 별도의 제도를 통해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음.(2018년 11월부터 지원 대상자 범위가 변경되어 과세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 의료비 환급

- 다음 6가지의 경우, ‘오사카 시 의료 조성비 등 상환 사무 센터’에 필요 서류를 제출하면 관련 내용 심사 후, 자기 부담액에서 일부 자기 부담액을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환급 신청은 의료기관에 지불한 날의 익일부터 5년간임.
- ※ 단, 의료비를 100% 부담하고 있는 경우, 먼저 건강보험을 적용을 받아야 함. 건강보험 신청기한은 2년이라는 점을 유의할 것.
- 1) 오사카부 외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았을 경우
- 2) 의료증 신청~교부될 때까지 기간 중에 의료증(환자가 공비 부담 의료 제도 수급 자격이 있음을 제시하기 위한 증명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부담금을 지불했을 경우
- 3) 긴급 시나 여행지 등에서 부득이하게 의료증을 사용하지 못하고 진료를 받게 됐을 경우
- 4) 의사의 동의를 얻어 침구사, 안마사의 시술을 받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한 경우, 유도정복사(접골사)의 시술을 받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한 경우
- 5) 치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보조 의료 기구, 소아 약시(弱視) 치료용 안경 등의 비용을 지불한 경우
- 6) 동일 진료월에 지불한 일부 본인 부담액 총액이 2500 엔(한도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 일단 한 번 환급 절차를 밟으면, 그 후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을 해주는 자동 상환을 2019년 4월 진료분부터 시작함. 상세 내용은 ‘오사카 시 복지 의료 제도의 자동 상환’을 확인 바람.

※ 오사카부 외 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등, 의료증을 사용하지 않고 부담한 의료비 등에 대해서는 자동 상환할 수 없음. 자동 상환이 불가능한 의료비의 환불은 오사카 시 의료 조성비 등 상환 사무 센터에서 접수함.

■ 지원 대상자: 오사카시에 거주하는 국민 건강보험이나 피용자 보험에 가입된 0세~18세(18세가 된 날 이후 처음 맞이하는 3월 31일)까지의 아동.

- 0세~12세(초등학교 수료)까지는 소득제한 없음.
- 12세(중학교 입학)~18세(18세가 된 날 이후 처음 맞이하는 3월 31일)까지는 대상 아동의 부 또는 모 등(소득이 높은 쪽)의 소득 제한 있음.(아래 표 참조)

※ 대상 아동이 국민 건강보험의 세대주나 국민 건강보험 조합의 조합원, 기타 건강보험의 피보험자, 조합원 또는 가입자인 경우나 혼인한 경우는 부 또는 모 등의 소득 확인 불필요.

소득제한액		
부양인원	소득제한액	수입액(기준금액)
0명	622만 엔 미만	833만 3천 엔
1명	660 만 엔 미만	875만 6천 엔
2명	698 만 엔 미만	917만 8천 엔
3명	736 만 엔 미만	960만 엔
4명 이상인 경우	부양 인원이 3인인 경우 소득제한액에 1인당 38만 엔씩 가산한 금액	

■ 지원 제외 대상

- 생활보호를 받고 있는 자
-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한 자
- 기타 국가 등의 공비 부담으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자

- 중증 장애인 의료비 조성 제도로 의료증을 교부받은 자 가운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
- 한부모가정 의료비 조성 제도로 의료증을 교부받은 자 가운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
- 보호자의 소득이 상기 소득제한액 이상인 자

2022년 10월 07일

출처: <https://www.city.osaka.lg.jp/kodomo/page/0000369443.html>

미국

양육지원		
1	현금 지급이 취약 계층 아기의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 발표	49
2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이용 자격 기준 확대	49
3	영유아 가정방문 프로그램 재승인 지지서한에 서명	51
4	기저귀 배포 시범 사업 발표	51
5	분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 법안 통과	52
유아교육·보육		
1	교육부, 교사의 질 제고 프로그램에 3,500만 달러 투입	53
2	유아교육이 고등학교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	54
3	2020~2021 어린이집(Preschool) 정책 보고서 발간	55
4	유아교육 공적투자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 발간	57
5	2023년 영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예산안 발표	58
6	실내외 자유놀이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실행기능	59
7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유아교육 종단연구 결과	60
8	보육 및 교육 인력 개발에 3억 달러 투자	62
9	보육 안정화 프로그램(Child Care Stabilization)을 통해 200,000개 보육시설 지원	63
10	2021년 보육개발기금 보고서 발간	64
11	아동가족부, 가족의 보육 지원 신청을 돕는 안내서 출시	65
12	교육부, STEM 교육 강화 계획 발표	65
코로나19		
1	6개월~4세 영유아 화이자 백신 승인 논의	66
2	코로나19 기간 동안 보조금 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하다	67
3	6개월~5세 영유아의 코로나 백신 접종 승인	69
기타		
1	제 31호 아동학대 보고서 발간,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아동 사망률 감소	69
2	2022 영유아 보고서 발간	71
3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양육 지원	72
4	위탁 양육 아동 수 4년 연속 감소	73

☞ 양육지원

1. 현금 지급이 취약 계층 아기의 두뇌 활동을 활발하게 한다는 연구 결과 발표

- 취약계층 어머니에게 자녀의 생후 1년 동안 현금을 지급한 결과 아기의 인지발달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됨.
- 미국 6개 대학의 노블(Noble) 박사와 연구진은 자녀 출생 후 며칠이 지난 모자 천 쌍을 모집하고, 이들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눔. 실험집단은 한 달에 \$333을 받았고 대조집단은 한 달에 \$20을 받아서 현금을 원하는 곳에 사용함. 실험 참여자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2만 달러로, 미국 평균 가족 기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으며 한 달에 \$333를 받은 참여자들은 현금 지급으로 인해 소득이 약 20% 증가한 효과가 나타남.
- 연구진은 1세 아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뇌전도 패턴을 관찰함. 관찰 결과 현금을 많이 받은 그룹에 속한 아기들의 두뇌 활동이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모든 아동에게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참여자들에게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관찰되었음. 특히 인지발달과 가장 관련이 있는 뇌 부분의 차이가 두드러짐.
- 연구진은 현금 지급이 두뇌 활동을 촉진시킨 이유를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취약계층 어머니들은 지급된 현금으로 질 좋은 음식을 구매할 수 있었으며 건강관리에 투자할 수 있었음. 현금 지급은 어머니들의 양육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노동시간을 줄이고 아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
- 해당 연구 결과는 사회 안전망 정책에 있어 현금 지급이 가지는 잠재적인 의미를 시사함. 이 연구는 아기들이 최소 4세가 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며 연구진은 추가 테스트를 계획 중임.

2022년 01월 24일

출처: <https://www.nytimes.com/2022/01/24/us/politics/child-tax-credit-brain-function.html>

2.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이용 자격 기준 확대

- 4월 21일, 헤드스타트 사무국은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수혜자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혜자 범주를 확대한다고 밝힘.

- 해당 조치로 더 많은 가정에서 태아부터 5세까지 학교 준비도, 영양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이는 4월 14일 Maggie Hassan 상원의원이 이끄는 보건복지부의 변화 촉구 서한에 이은 발표임.
- 헤드스타트 법 645(a)(1)(B)에는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 이하인 가정,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자격 기준을 명시되어 있음. 또한 가정의 소득과 관계없이 노숙 아동과 위탁 아동에 대한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음.
- 헤드스타트 사무국은 법령에 따라 “공공부조”를 정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여기에는 빈곤가정 임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및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이 포함됨.
- 2022년 4월 21일 발표에 따르면 헤드스타트 사무국은 “공공부조” 정의를 확장하여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을 포함시킬 예정임. 기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이용 가정에 대한 변경 사항은 없으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은 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의 등록을 계속해서 우선시할 예정임.
- 이전 공공부조 정의를 따르게 되면, 지원이 필요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수혜가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음. 실제로 헤드스타트 사무국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공공부조를 받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등록한 가정의 비율은 16%에서 2019년 10%로 감소함. 동일 기간 공공부조의 필요성과 공공부조를 받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비율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며, 헤드스타트 수혜자의 거의 절반이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고 있었음.
- 영양보충 프로그램 수혜자 아동의 대다수는 소득 빈곤선이 100%미만이고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수혜자 아동과 동등한 수준의 가정에 속해있음. 따라서 이번 수혜자 확장은 영양보충지원 프로그램 아동이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에 보다 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과정을 단일화 하여 가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또한 다수의 중앙정부 프로그램 자격기준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프로그램 간 조정을 통해 더 나은 지원이 가능함.

2022년 04월 25일

출처: <https://www.ffyf.org/administration-expands-eligibility-for-head-start-programs/>

3. 영유아 가정방문 프로그램 재승인 지지서한에 서명

- 2022년 8월 상원 재정 위원회의 상원 의원으로 구성된 초당파 그룹은 모(母), 영유아 가정 방문 프로그램(Maternal, Infant, and Early Childhood Home Visiting, 이하 MIECHV)에 대한 5년 재승인을 지지하는 서한에 서명함. MIECHV는 연방 기금을 주 정부와 지자체에 제공하여 가정방문 서비스를 운영함.
- MIECHV는 취약계층 가정을 간호사, 사회복지사, 교육자 등 훈련된 인력과 연결함. 가정 방문 전문 인력은 임신부터 자녀의 유치원 입학까지 부모와 일대일로 소통하며, 가족 전체의 건강, 교육, 발달, 경제적 자립의 토대를 마련함. 기존 MIECHV는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음.
- 상원 의원은 상원 재무 의장 Ron Wyden과 Mike Crapo의원에게 MIECHV 지지서한을 보내어 MIECHV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은 “연방 기금의 건전한 투자”임을 강조함. 근로자 및 가정 지원에 관한 하원 세입 소위원회는 2022년 3월 청문회에서 MIECHV를 지지했으며 전국 가정과 어린이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많은 가정이 MIECHV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음. 코로나19 이전에는 MIECHV 수혜가능 가정 중 3% 만이 서비스를 누렸음. 수혜 가정을 늘리기 위해 FFYF(First Five Years Fund)는 전국 가정 방문 연합(National Home Visiting Coalition, 이하 HVC)과 함께 MIECHV 재승인을 요청하고 있음. HVC의 3가지 주요 재승인 요청은 다음과 같음. 향후 5년 동안 MIECHV 기금을 연간 2억 달러씩 증액하여 총 14억 달러에 도달, 원주민 계층을 위한 별도 기금을 3%에서 6%로 증가, 가장 가정방문 서비스 유지.

2022년 08월 26일

출처: <https://www.ffyf.org/bipartisan-group-of-senators-sign-letter-in-support-of-timely-miechv-reauthorization/>

4. 기저귀 배포 시범 사업 발표

- 전국 기저귀 인식 주간(National Diaper Awareness Week)인 2022년 9월 27일, 미국 보건복지부는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신규 시범 사업을 발표함. 보건복지부는 아동가족부를 통해 기저귀 및 관련 용품 제공 비용 약 800만 달러를 지역 서비스 교부금(Community Service Block Grant) 형태로 지원 할 예정임.

- 아동가족부는 7개의 교부금을 지역 사회 서비스국의 시범 사업 부서에 지급 예정임. 시범 사업 부서는 지역 사회 자원을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 사회 활동 기관, 사회 서비스 기관 및 지역 기저귀 은행과 협력할 것이며, 이를 통해 기저귀가 필요한 가족을 지원 할 예정임. 기저귀 배포 사업은 빈곤 퇴치 전략으로서 저소득층을 위해 이미 존재하는 돌봄 서비스에 추가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 기저귀 구매비용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잠재적으로 영유아의 보육 시설 이용 및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여 빈곤의 악순환이 고착됨. 미국의 3가구 중 1가구는 기저귀 부족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기저귀 지원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정소득을 늘리고, 가족구성원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밝혀짐.
- 기저귀 배포 시범 사업 및 연구 지표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기타 빈곤 퇴치 전략에 대한 정보는 <https://www.acf.hhs.gov/ocs/help> 에서 확인 가능함.

2022년 09월 27일

출처: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2/hhs-announces-new-diaper-distribution-pilot-program-families-need>

5. 분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자금 지원 법안 통과

- 미국 하원은 분유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긴급 자금 2,800만 달러(한화 약 350억원)를 지원하는 추가 세출예산 법안 H.R. 7790을 투표 결과 231 대 192로 통과시켰음.
-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분유 부족문제는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지 않은 결과임. 영유아는 취약한 존재이며, 이들 부모들은 절망적인 상황임. 오늘 통과시킨 법안으로 지급될 비용은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승인한 분유 배송 및 생산법 발동과 함께 미국의 분유 부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고 이러한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임. 식품의약국은 분유 생산량을 늘리고 해외에서 분유를 조달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자원이 필요한 상황임. 의회는 이러한 요구를 해결할 의무가 있음. H.R. 7790법안은 부모와 영아에게 안전한 분유를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하원 의장 텔라우로)”

- “H.R. 7790법안을 통해 가족이 영아를 위해 안전하고 구매 가능한 영양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음. 가짜 분유 판매를 방지하고 영아용 조제유 시장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더 많은 데이터를 의회에 제공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소위원회 의장 비숍)”
- H.R. 7790법안은 식품의약국의 검사 직원 수를 늘리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여야 함을 강조함. 분유 수급 관련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자원을 제공하고, 가짜 분유가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고, 분유 시장에 대한 데이터 수집을 도울 예정임. 해당 법안의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함.

https://appropriations.house.gov/sites/democrats.appropriations.house.gov/files/FY22FORM_Supplemental_xml.pdf

2022년 05월 18일

출처: <https://appropriations.house.gov/news/press-releases/house-passes-supplemental-funding-legislation-to-address-infant-formula-shortage#:~:text=WASHINGTON%20%E2%80%93%20on%20a%20bipartisan%202021,the%20urgent%20infant%20formula%20shortage.>

❖ 유아교육·보육

1. 교육부, 교사의 질 제고 프로그램에 3,500만 달러 투입

- 미국 교육부는 Teacher Quality Partnership(이하 TQP) 프로그램의 지원자 선발 공모 하였음. 본 프로그램은 학사 졸업 또는 “5학년” 수준(Pre-Baccalaureate Models) 교사 준비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3,500만 달러를 수여하는 프로그램으로, 학문적 내용과 임상 경험을 통합하는 교육 레지던시 프로그램임. 선발 과정시 우선되는 기준은 교육자의 다양성, 학생의 사회적, 정서적, 학업적 필요, 학생의 교육기회 평등임.
- 연구에 따르면 TQP 프로그램과 같은 양질의 레지던시 모델은 준비된 예비 교사를 교육 현장에 배치하고, 인력의 다양성을 촉진하며, 교실에 광범위한 경험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짐. TQP 프로그램은 예비 교사를 교육하는 대학과 학군 간의 파트너십을 통해 교육 내용과 현장이 밀접하게 연계되도록 함.

- 교육부는 TQP 지원자가 Grow Your Own(이하 GYO) 프로그램 파트너십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독려함.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교사 파이프라인 강화, 교사 부족 문제 해결, 교사 성장 지원을 위해 GYO 프로그램을 포함한 고품질 교사 준비 프로그램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힘. 레지던시 교육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GYO 프로그램은 교사 유지율을 높이는 동시에 교육자의 다양성을 향상시켜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또한 TQP 프로그램 중 리더십 프로그램은 교육감, 교장, 유아교육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기타 학교 지도자 양성을 위한 것으로, 개인에게 효과적인 학교 리더십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2022년 02월 24일

출처: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education-department-announces-35-million-competition-improve-teacher-quality>

2. 유아교육이 고등학교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과

- 차일드트렌드(ChildTrends), 조지타운 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 위스콘신 대학교(University of Wisconsin)의 연구원들은 2006년 오클라호마 주 툴사(Tulsa) 지역 유치원에 입학한 4,000명 이상의 아동을 추적 연구함. 이들의 44%는 공립학교 또는 다른 유아교육기관(유치원/어린이집)에서 만 4세 프로그램을 이용함. 14%는 헤드스타트 프로그램을 이용했으며 그 외는 기관 경험이 없거나 사립기관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함.
- 연구결과, 유아교육 프로그램 이용으로 나타난 아동의 수리 및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고등학교 입학 시점에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아교육 페이드아웃(fade-out) 효과와 일맥상통함. 반면, 유아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아동의 학교출석이 좀 더 규칙적이며 헤드스타트를 이용하거나 기관 경험이 없는 아동보다 고등학교 상위수업(Advanced Placement/International Baccalaureate courses)을 수강하는 것으로 나타남.
- 유아교육 프로그램 이용과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관계는 인종마다 다를 수 있으며 유색인종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또한, 프로그램 종류별 비교 결과 공립

학교에 위치한 유아교육 프로그램이 취약계층 아동의 학업실패 비율을 낮추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22년 03월 29일/ 2022년 3월 25일

출처: <https://www.edweek.org/teaching-learning/early-education-pays-off-a-new-study-shows-how/2022/03>

<https://nieer.org/online-newsletter/march-25-2022-volume-21-issue-12>

3. 2020~2021 어린이집(Preschool) 정책 보고서 발간

■ 2021년 어린이집 현황 보고서를 발표

- NIEER(국립유아교육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는 어린이집(Preschool) 정책에 관하여 매년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 어린이집 현황 보고서를 발표함.
- 해당 보고서는 19번째 발간물로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20-2021학년도 주정부의 공적 자금으로 운영된 주립어린이집(State-funded Preschool)의 아동 등록현황, 자금 운용, 인력 배치, 품질 관리에 대한 정보를 포함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등록(Enrollment)

- 전국적으로 주립어린이집(State-funded Preschool) 등록 아동은 298,000명(18%) 감소함. 등록 아동이 감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임. 등록 아동을 포함한 많은 아동이 일부 기간 동안 원격 학습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6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등록률이 감소했으며 일부 주에서는 등록률이 5%p 이상 감소함.
- 2020-2021년도 어린이집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한 44개 주, 컬럼비아 특별구, 괌에서 4세 아동 29%와 3세 아동 5%가 기관에 등록하였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에서 상당히 감소한 수치임.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2020-2021년의 기관 참여 감소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훨씬 두드러지게 나타남.

■ 자금 운용(Funding)

- 2020-2021년도 주정부는 평균 90억 달러(한화 약 11조 4천억 원)를 유아교육(pre-K)에 지원함.
- 지원 총액은 2014년 이후 처음으로 26개 주에서 감소함. 많은 주에서 연방 구호자금을 사용하여 감소한 어린이집 지원금을 상쇄함.

■ 질 관리(Quality)

- 코로나19는 심각한 건강 위기를 초래하고, 인력부족을 일으켰으며,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 면제 및 기타 조정을 요구받는 등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줌. 이는 프로그램 운영 예산을 압박하고, 아동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방해함.
- 5개 주에서 어린이집 프로그램 품질 기준을 모두 충족했으며, 14개 주는 기준의 절반 이하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19 영향

- 이 데이터는 중앙정부 구호 기금이 부재했다면 코로나19가 아동에게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주었을 시사함. 하지만 연방 구호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를 완화하고 조기 치료 및 교육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뿐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
- 본 보고서의 연구결과는 주 정부와 의회의 협력 중요성과 5세까지의 아동을 위한 연방 자금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함.
- 본 보고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nieer.org/wp-content/uploads/2022/04/YB2021_Executive_Summary.pdf

2022년 04월 28일

출처: <https://www.ffyf.org/national-report-examines-state-preschool-policies-in-2020-2021/>

4. 유아교육 공적투자에 따른 파급효과 보고서 발간

- 최근 정부의 정책 제안들은 유아교육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음. 이러한 정책들은 양질의 보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서 가정이 부담하는 보육 비용을 완화하고,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며, 아동발달을 촉진하고자 하며, 특히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됨.
- 이번 보고서는 다양한 정책 체제 아래에서의 가족 지출, 유아교육 서비스 이용, 모(母)의 경제활동, 교사 급여, 유아교육 시장 가격, 프로그램 비용 산출을 위한 유아교육 서비스 및 교사 유형에 대한 수요 공급 모델을 제안함.
- 연구 결과, 중위소득 250% 가정의 유아교육 비용 지분을 소득의 7% 이하로 제한하는 확대된 보조금 정책 파급효과는 모(母)의 고용률 6% 상승, 정규직 고용률 10% 상승이었으며, 저소득 가정의 상승폭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함. 해당 정책은 기관을 이용하지 않거나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이 양질의 기관 및 가정 기반 어린이집으로 등록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이 또한 저소득 가정의 전환이 클 것으로 예상함.
- 확대된 보조금 정책 시행 시, 기관 및 가정 기반 어린이집의 공식 돌봄 사용이 증가하더라도 대부분 가정의 유아교육 비용 지출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 예를 들어, 소득 하위 3분위 가정은 각각 76%, 68%, 55%의 지출 감소를 경험할 것으로 예측함. 또한, 교사 임금과 유아교육 시장 가격의 인상으로 교육 수준이 높은 양질의 근로자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봄. 연구진은 가정 소득이 중위 소득 85% 이하인 가정을 위한 축소된 보조금 정책 파급효과도 추정함.
-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nber.org/system/files/working_papers/w30140/w30140.pdf

2022년 06월

출처: <https://www.nber.org/papers/w30140>

5. 2023년 영유아교육보육 프로그램 예산안 발표

■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

- 2022년 7월 28일, 상원 세출위원회는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발표함. 계획안에는 0-5세 영유아 프로그램(Preschool Development Grant Birth through Five), 보육발전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 헤드스타트(Head Start and Early Head Start) 등 핵심 연방 유아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비롯하여 노동, 보건복지서비스, 교육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예산안이 포함됨.

■ 상원에서 발표한 2023년 예산은 다음과 같음

- 보육발전 기금: 71억 6500만 달러(한화 약 9조 3천억원) - 2022년 대비 10억 달러 증액
- 헤드스타트 및 영유아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120억 3600만 달러(한화 약 15조 7천억원)
 - 2022년 대비 10억 달러 증액(헤드스타트와 영유아 헤드스타트 파트너십 확장에 1억 4천만 달러, 생활비 지원에 5억 9600만 달러 포함)
- 0-5세 영유아 프로그램: 3억 5000만 달러(한화 약 4568억원) - 2022년 대비 6000만 달러 증액
- 장애아동 보조금: 4억 4천만 달러(한화 약 5800억원)- 2022년 대비 3545만 달러 증액
- 장애영아 및 가족 보조금: 5억 9천만 달러(한화 약 7700억원) - 2022년 대비 9500만 달러 증액
- 학생부모 보육료 지원(Child Care Access Means Parents in School Program): 9천 5백만 달러(한화 약 1239억원) - 2022년 대비 3000만 달러 증액

■ 하원 세출위원회 법안 통과 의결

- 지난 6월, 하원 세출위원회는 2023년도 노동, 보건복지, 및 교육 세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함. 177명의 민주당원과 28명의 공화당원으로 구성된 약 200여명의 하원의원은 연방 유아 교육 및 보육 프로그램에 대한 기금 확대를 요구함. 특히, 보육발전기금에 대해 상원 공화당이 요청한 예산 증액은 이번에 공개된 계획안에서 제안된 예산 지원규모보다 큼.

■ 2023년 상원 기금운용계획안 요약본 원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appropriations.senate.gov/imo/media/doc/LHHS%20FY%2023%20Summary.pdf>

2022년 07월 29일

출처: <https://www.ffyf.org/senate-releases-proposed-fy2023-funding-levels-for-ece-programs/>

6. 실내외 자유놀이에 따른 취학 전 아동의 실행기능

■ 실내외 놀이의 취학 전 아동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 측정

- 취학 전 아동의 대집단 이야기 나누기 활동 중에 보이는 집중도는 실내놀이 1시간보다 실외놀이 1시간 후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연구진은 실내외 놀이가 취학 전 아동의 실행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했으며 신체 활동의 “골디락스(Goldilocks)” 영역(즉,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은)이 아동의 과제 기반 활동에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타남.

■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실외놀이와 비교하여 실내놀이 후 취학 전 아동의 실행기능을 조사하기 위해 준 실험설계(quasi-experimental design)를 사용함.
- 총 72명의 아동(평균 연령 4.5세, 여아 46%, 비히스패닉계 백인 73%)의 주의전환 및 자기통제 기능을 알아보기 위한 작업 기반 평가와 교실 관찰을 진행함.
- 51명의 하위 표본은 실외놀이가 실내놀이보다 실행 기능을 더 잘 예측하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가속도계를 사용하여 신체활동 평가를 진행함.

■ 연구 결과

- 아동은 실내놀이 후와 비교하여 실외놀이 후 교실에서 더 높은 집중도를 보임. 실내놀이 중 신체활동은 아동의 실행기능과 관련이 없었지만, 교실 내 실행기능에는 부정적인 연관성을 보임.

- 아동이 실외놀이 중 활동적인 신체활동의 비율은 자기 통제 기능과 이차적 연관성을 보였으며, 교실 내 집중과 자기통제 기능과 선형 연관성을 보임.
- 결론적으로 신체활동이 포함된 실외놀이는 아동이 교실로 돌아온 뒤 실행 기능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2022년 07월 29일

출처: <https://nieer.org/online-newsletter/july-29-2022-volume-21-issue-30>

7. 미국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유아교육 중단연구 결과

- 미국은 국립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의 유아기 중단연구(Early Childhood Longitudinal Studies, 이하 ECLS) 일환으로 유치원생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20년간 수집해옴.

■ ECLS-K

- 첫번째 ECLS-K는 1998-99학년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함. ECLS-K가 시작될 당시 국가 연구는 유치원 입학부터 초등학교까지 추적하지 않았음. ECLS-K는 유치원생의 초기 사회성 및 학업 능력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보여줌. ECLS-K는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된 연구로, 다양한 배경 요인에 따른 아동의 지식과 기술의 차이를 강조하는 통계를 제공한 최초의 연구였음.

- 교우관계가 원만함(77%)
- 친구의 의견을 잘 받아들임(74%)
- 다른 사람을 위로함(51%)
- 다른 사람과 논쟁함(11%)
- 다른 사람과 싸움(10%)

- 글자를 인식함(66%)
- 단어의 첫번째 소리를 인식함(29%)
- 크기를 비교할 수 있음(57%)
- 숫자와 모양을 인식함. 10까지 셀 수 있음(94%)

■ ECLS-K:2011

- 두번째 ECLS-K:2011은 ECLS-K 연속연구로, 2010-11학년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함. ECLS-K의 10년 후 연구로서, ECLS-K:2011은 서로 다른 정책, 교육 및 인구통계학적 환경을 경험하고 있는 유치원생들을 비교할 수 있음. 예를 들어, ECLS-K와 ECLS-K:2011 사이에 발생한 주요 변화에는 No Child Left Behind 법안 통과, 학교 선택지 증가, 영어 학습자 증가 등이 있음. ECLS-K:2011은 부모 설문조사를 통해 자녀가 유치원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줌. 또한, 학습에 기여할 수 있는 자녀의 가정 학습 환경 및 학교 밖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유치원에 가는 것을 기대함(85%)
- 유치원에 가는 것을 불평함(10%)
- 교사를 좋아함(71%)
- 유치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함(85%)
- 도서관을 방문함(59%)
- 동물원, 수족관, 농장을 방문함(47%)
- 스포츠 경기를 관람함(45%)
- 문화 공연을 관람함(40%)
- 사진관, 박물관, 역사관광지를 방문함(34%)

■ ECLS-K:2024

- 국립교육통계센터는 ECLS-K:2024 연구에 착수할 예정임. 2022년 하반기에 2023-24학년도 정보 수집에 앞서 연구 도구 및 절차를 테스트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2022년 08월 23일

출처: <https://ies.ed.gov/blogs/nces/post/what-do-nces-data-tell-us-about-america-s-kindergartners>

8. 보육 및 교육 인력 개발에 3억 달러 투자

- 2022년 9월, 미국 보건복지부 아동가족부는 주 정부 및 지자체에 보육 및 교육 인력 보상/혜택 확대,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새로운 지원을 발표함. 아동가족부는 상향된 보상/혜택, 개선된 근무 조건, 보육 노동의 가치 증진 등을 통해 영유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념하고 있음.
- 약 3억 달러에 달하는 이번 지원 자금은 다양성,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영유아 보육교육 현장에 유치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원이 포함됨.
- 2억 6,600만 달러 규모의 0~5세 보육개발교부금은 두 번의 기회를 통해 35개 주와 지자체에 인력보상체계 구축 및 실행, 자격증 및 학위 취득 경로 개발 등 인력투자에 초점을 둠. 이러한 노력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교준비도를 갖추는데 목표를 둠.
- 3천 만 달러 규모의 국립 보육교육 인력센터 기금은 보육교육기관에 다양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배치하고 고용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 기관 설립 비용에 5년 동안 투자될 예정임. 이 기관은 주 정부 및 지자체에 기술을 제공하고, 지식 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보육 인력에 필요한 기술과 정책을 알리는 사업을 할 예정임.

2022년 09월 13일

출처: <https://www.acf.hhs.gov/ecd/fact-sheet/us-department-health-and-human-services-administration-children-and-families>

9. 보육 안정화 프로그램(Child Care Stabilization)을 통해 200,000개 보육시설 지원

- 10월 21일, 미국 백악관은 240억 달러 규모의 보육 안정화 프로그램(Child Care Stabilization)을 통해 200,000개 이상의 보육 시설을 지원했으며, 최대 950만 명의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근로활동을 지원했다고 발표함. 보육 안정화 기금은 100만 명 이상의 보육교직원 고용유지에도 사용됨.
- 보건복지부는 미국 구조 계획(American Rescue Plan)의 보육 안정화 프로그램에 대한 주별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지원금을 받은 보육기관의 수를 발표함. 보육 안정화 프로그램은 대부분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보육기관의 운영지속, 운영재개, 유색인종의 교직원 고용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 보육 안정화 기금은 임금 및 복지, 임대료, 기타 용품 등 기본 운영 비용에 사용됨. 많은 주에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보육 기관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임.
- 보육안정 프로그램은 보육기관 폐업을 막아 부모의 근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그 성과는 아래와 같음.
 - 보육안정기금을 받은 기관의 90% 이상이 보육기관 지속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함.
 - 6세 미만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고용률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됨.
 - 농촌 지역 보육 프로그램 약 30,000개, 인가 받은 보육기관 80% 이상이 지원받음.
 - 취약 계층 거주지역에 위치한 보육기관 약 98%이 지원받음.
 - 지원받은 보육기관의 약 44%는 유색인종에 의해 소유 및 운영 중임.
 - 보육안정기금을 받은 센터기반 보육기관의 약 88%는 인건비 지불에 기금을 사용함.
 - 보육안정기금을 받은 가정기반 보육기관의 약 86%는 임대료, 담보대출에 기금을 사용함.
 - 메인(Maine)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코로나19 이전 보다 보육기관 수용 아동 수가 증가함.
 - 이 외 취약계층 가정의 보육비 지원, 세금 감면을 통한 보육비 지원, 지방 교부금을 사용한 지원 등이 있음.

2022년 10월 21일

출처: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2/10/21/fact-sheet-american-rescue-plan-funds-provided-a-critical-lifeline-to-200000-child-care-providers-helping-millions-of-families-to-work/>

10. 2021년 보육개발기금 보고서 발간

- 보육개발기금(Child Care and Development Fund: CCDF)은 저소득 가정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모든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연방정부 기금임. 보육개발기금은 주정부와 지자체에 지급되어 저소득 가정에 바우처, 증명서, 시설 기금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정에 제공됨.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기획평가차관실(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lanning and Evaluation)의 가장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도 기준 13세 미만 아동 190만 명이 보육개발기금 등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추산됨. 해당 수치는 연방정부 규정에 따르면 모든 아동의 15%, 주정부 규정에 따르면 모든 아동의 23%에 해당함.
- 연방정부 규정에 의하면 2018년도 기준 월 평균 1,280만명의 아동이 보육보조금을 받을 자격이 있었으며, 이는 13세 미만 아동 총 5,290만명 중 24%에 해당함. 이 중 840만명의 아동이 주정부 규정에 따라 보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보육개발기금 제공 연령대 전체 아동 5,290만명 중 16%, 연방규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아동의 66%임.
- 가장 최근 연도인 2020년 행정 데이터에 따르면, 매달 약 149만 명의 아동과 900,300개 가구에 보육개발기금을 지원했으며 이는 2019년보다 약간 증가한 수치임. 보육개발기금 프로그램은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며 아동은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음. 2020년 기준 보조금을 받은 아동의 72%는 센터 기반 시설을 이용했으며 22%는 가정 기반 시설을 이용함. 2%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했으며 4%는 데이터가 보고되지 않음. 가정 기반 시설을 이용률은 2019년도 대비 약간 증가한 반면 센터 기반 시설 이용률은 약간 감소함. 코로나 대유행 기간 동안 보육 산업은 큰 변화를 겪었으며 이번에 발간된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는 코로나 기간 동안 부분적으로 수집되었다는 점은 주목해야함.
- 보고서 전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acf.hhs.gov/sites/default/files/documents/occ/priorities_report_fy_2021.pdf

2022년 11월 16일

출처: <https://www.acf.hhs.gov/occ/report/priorities-report-2021>

11. 아동가족부, 가족의 보육 지원 신청을 돕는 안내서 출시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부와 디지털 서비스국(United States Digital Service)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가족 친화적인 보육지원 신청 안내서를 발표함. 해당 안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childcareta.acf.hhs.gov/creating-family-friendly-child-care-assistance-application?utm_source=redirect&utm_medium=webinar&utm_campaign=vanityOCCjuly2022.

- 해당 안내서는 보육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가족이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 단축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아동가족부와 디지털 서비스국의 이번 협력은 미국 국민의 경험 및 서비스 제공 개선에 대한 바이든-해리스 행정부 행정 명령의 일환임.
- “보육지원 신청이 복잡하고 신청서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음. 새로운 방식은 가족과 주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임. 주정부는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 보육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지원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으로 아동가족부 차관보 콘트라라스(Contreras)가 밝힘.
- 디지털 서비스국 관리자 미나(Mina)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안내서 개발에 앞서 디지털 서비스국과 아동가족부는 가족이 보육지원을 받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파악함. 신청 절차를 단순화 및 단축하고, 보육지원이 가장 시급한 가족에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함.”

2022년 12월 14일

출처: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2/media/acf-launches-new-tool-states-make-child-care-assistance-easier-families>

12. 교육부, STEM 교육 강화 계획 발표

- 2022년 12월 7일, 미국 교육부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핵심 계획으로 “YOU Belong in STEM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임. “Raise the Bar: STEM Excellence for All Students”는 전국적으로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임.

- 본 계획은 유아부터 고등학생을 포함하는 모든 아동에게 공평하고 수준 높은 STEM 교육을 제공하여 21세기 커리어 준비와 경쟁력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됨.
- 교육부는 1,200억 달러 지원으로 STEM 교육 목표 세 가지를 설정함.
 - 첫째, Pre K부터 고등교육을 받는 모든 아동이 명확하고 즐거운 STEM 학습을 통해 성과를 거두도록 보장함.
 - 둘째, STEM 교육자들의 성장과 교육개발을 지원함.
 - 셋째, 중앙정부, 주정부, 지자체 기금을 사용하여 전략적으로 충분한 비용을 STEM 교육에 투자할 것.
- 교육부는 Dear Colleague Letter를 통해 주 정부와 지자체 담당자에게 STEM 교육 및 학습 향상을 위한 연방 기금 사용방법을 안내했으며, Beyond100K와 MOU를 체결하여 STEM 교사 충원을 돕기로 함.
- 또한 전국 90개 이상 공공 및 민간 부분 단체가 STEM 교육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움. 예를 들어, DiscoverE는 1,000만 건의 K-12 공학 경험 기회를 창출 할 것이며, 그 중 500만 건은 여학생과 취약계층에게 제공 예정임. New York Hall of Science는 매년 뉴욕 퀸즈 지역에서 STEM테마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으로 300명 이상의 3~4세 학생이 STEM 교육을 경험하게 됨.

2022년 12월 07일

출처: <https://www.ed.gov/news/press-releases/us-department-education-launches-new-initiative-enhance-stem-education-all-students>

❖ 코로나19

1. 6개월-4세 영유아 화이자 백신 승인 논의

- 미국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은 생후 6개월에서 만 4세 영유아의 화이자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을 논의하기 위해 2월 15일 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 “생후 6개월-만 4세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을 제공하는 것이 FDA의 최우선 과제임.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급증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화이자에 요청했으며, 해당 자료를 면밀히 검토 중임.”(FDA 청장 대행 자넷 우드콕)
- FDA는 2021년 10월 화이자 백신을 만 5세-11세 아동에게 사용하도록 승인했으며 최근에는 만 12세-15세 아동의 추가 접종을 승인함. 질병통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에 따르면 2021년 12월 19일 기준 만 5-11세 아동 870만명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음. 미국 내 만 5-11세 아동은 약 2,400만 명이므로 3명 중 1명이 접종을 완료함. 이번 회의 안건 대상인 5세 미만 아동은 약 1,800만명 임.
-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 가운데 아동 중증환자 입원건수가 현저히 증가함. 오미크론과 같은 변이 바이러스는 백신 미접종자에게 심각한 중증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 이번 회의를 통해 FDA가 백신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 관련 자료와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는 과정을 대중에게 보여줄 것임. 외부 고문의 의견을 포함하여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생물 의약품 평가 및 연구 센터 소장 피터 막스)

2022년 02월 01일

출처: <https://www.fda.gov/news-events/press-announcements/coronavirus-covid-19-update-fda-advisory-committee-meeting-discuss-request-authorization-pfizer>

2. 코로나19 기간 동안 보조금 정책을 유연하게 집행하다

- 코로나19 대유행은 많은 저소득 가정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운영에도 전례 없는 어려움을 주었음.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는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주요 프로그램임. TANF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에 지급하는 일괄보조금으로 주정부의 자체 보조금과 결합하여 프로그램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됨. 각 주는 수혜가정 선정기준, 수혜금액, 수혜기간 등에 대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함. 연방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TANF 정책 변경을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각 주에서는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일시적으로 유연하게 정책을 집행함.

- 2020년 7월 기준 TANF 지급 사항은 다음과 같음.
 - 3인 가정이 TANF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월 소득은 알라바마 주(\$268)부터 미네소타 주 (\$2,359)까지 다양함.
 - 17개 주는 실업 상태인 신청자가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 활동을 해야한다는 조건을 둠.
 - 2명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의 월 최대 보조금 범위는 미시시피 주(\$170)부터 뉴햄프셔 주(\$1,086)까지 다양함.
 - 25개 주는 TANF 혜택 만료 후 1~24개월을 과도기 기간으로 여기고 지원을 지속함.
- 2021년 3월까지 코로나19로 인해 주정부 TANF 정책에 유연성을 적용한 경우는 다음과 같음.
 - 30개 주는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실업보험혜택의 일부를 계산하지 않음 .
 - 41개 주는 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함.
 - 19개 주는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기존 업무 관련 제재를 해제하여 가정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함.
 - 3개 주는 구직 관련 선행 요건을 유예함.
 - 1개 주는 수혜자의 자산 한도를 상향함.
 - 9개 주는 일시적으로 수혜기간 제한에 따른 개월 차감을 중단함. 12개 주는 개월 차감을 중단하진 않았지만 수혜기간을 연장함. 1개 주는 수혜기간이 끝난 가정이 보조금을 재신청하는 경우 조건에 맞으면 보조금을 지급함.

2022년 03월 08일

출처: <https://www.acf.hhs.gov/opre/report/state-tanf-policies-during-covid-19-pandemic>

<https://www.acf.hhs.gov/opre/report/graphical-overview-state-tanf-policies-july-2020>

3. 6개월~5세 영유아의 코로나 백신 접종 승인

- 6월 18일 질병통제예방센터(CDC: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 국장 윌린스키는 6개월 ~ 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예방접종자문위원회(ACIP: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권고를 승인함. 이로써 코로나 예방 접종 자격은 거의 2천만 명에 달하는 영유아로 확대되었으며, 생후 6개월 이상인 모든 미국인이 코로나 예방 접종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의미함.
- 영유아의 부모와 보호자는 6개월 ~ 5세까지의 자녀에게 화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여 코로나19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수 있음. 과거에 이미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한 모든 영유아는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함.
- 코로나19 백신은 미국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안전성 모니터링을 거쳤고, 이러한 절차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 부모와 보호자는 문자 메시지와 웹 설문조사를 통해 v-safe에 자녀를 등록함으로써, 백신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
- 영유아를 위한 소아 예방 접종 배포는 전국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이번 주에 수천 개의 소아과 진료소, 약국, 연방보건소, 지역보건소, 진료소 및 기타 장소에서 제공될 것임. 6개월~5세 영유아는 모더나 또는 화이자 중 접종 가능한 백신으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음. 부모는 의사, 간호사, 지역 약국 또는 보건부에 연락하거나 웹사이트(vaccines.gov)에 방문하여 영유아용 백신 접종이 가능한 장소를 확인할 수 있음.

2022년 06월 18일

출처: <https://www.cdc.gov/media/releases/2022/s0618-children-vaccine.html>

❖ 기타

1. 제 31호 아동학대 보고서 발간,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한 아동 사망률 감소

-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부는 2022년 1월 21일 제 31호 아동학대보고서(Child Maltreatment Report)를 발간함.
-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아동복지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은 314만 5,000명으로 2019년 65만 6,000명에서 61만 8,000명으로 늘어남. 이 중 76.1%가 방임 또는 다른 학대 유형과 결합한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16.5%는 신체적 학대를 동반한 학대를 겪음.

-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우리는 방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아동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빈곤과 관련된 이유로 문제가 더욱 악화되기 전에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 아동가족부는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여 전 세계 모든 아동의 안전과 웰빙을 보장하도록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다.”(아동가족부 차관부 대행 장주연)
-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많은 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아동학대 및 방임 상황을 제대로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후 법률과 아동복지 정책 및 관행이 변경됨.
- “코로나19는 아동복지시스템에 관련된 아동과 가족, 그리고 이들을 위해 일하는 현장 전문가에게 영향을 미침. 코로나19 이전에 존재했던 격차가 심화되었으며, 인적서비스 제공 시스템에도 격차가 생긴. 팬데믹 동안 아동학대 및 방임 피해자로 판단되는 아동의 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현장 전문가가 가정방문을 시행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음. 많은 아동복지기관은 연방정부의 보조금 및 유연성 덕분에 오랫동안 지속된 시스템 간 문제를 해결하여 취약 아동 및 가족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더욱 포괄적인 지원을 모색할 수 있었음.”(아동국 부국장 에이샤 샴버그)
- 2018년도부터 아동학대 목록에 성매매와 태아기 물질 노출이 포함됨. 2020년도 데이터에 따르면 아동 성매매 피해자는 35개 주에서 953명이었으며 태아기 물질 노출 피해 아동은 42,821명이었음. 이는 2019년 47개 주에서 보고된 38,625명보다 증가한 수치임.
- 2020년도 아동학대 및 방임으로 사망한 아동 수는 약 1,750명으로 2019년 약 1,830명보다 다소 감소함. 사망자 수와 비율은 지난 5년 동안 변동됨.
- 아동학대보고서는 2020년도에 수집된 가장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함.

<https://www.acf.hhs.gov/cb/report/child-maltreatment-2020>

2022년 01월 21일

출처: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2/child-fatalities-due-abuse-and-neglect-decreased-fy-2020-report-finds>

2. 2022 영유아 보고서 발간

■ 「States of Babies Yearbook: 2022」를 발간

- ZERO TO THREE는 코로나19, 주정부와 연방정부 정책이 가족과 영유아의 삶에 미친 영향에 대한 심층 보고서인 「States of Babies Yearbook: 2022」를 발간함.
- 이 보고서는 각 주의 영유아 프로필을 건강, 가정, 교육경험의 세 가지 주요 지표에 대한 성과를 중심으로 보여줌.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Access to Early Learning Programs)

- 보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7개 가정 중 1개 미만 가정만이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음. 보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 경험하는 보육의 질이 주마다 크게 상이함.
- 또한 조기 헤드스타트 프로그램(Early Head Start Program)에 등록 가능한 영유아 중 11%만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남.

■ 보육시설 이용(Use of Child Care)

- 부모가 아닌 센터 기반 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가구는 1월 기준 53.3%에서 12월 66%로 증가함. 그러나 센터 기반 시설로의 복귀는 저소득 가정에서 더 낮았음.

■ 장애/발달 지연 이동을 위한 서비스(Services for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Developmental Delays)

- 발달 지연을 조기에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한 개입은 중요하지만 영유아 3명 중 1명만이 발달 검진을 받았으며, 7.2%만이 장애인 교육법에 따른 서비스를 받음. 최근 12개월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0~2세 장애 영유아는 2021년 6.8%에서 2022년 7.3%로 변동 폭이 크지 않음.

■ 아동기 부정적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 저소득 가정의 영유아가 2개 이상 부정적 경험을 한 비율은 12.7%로, 그 외 가정 아동(3.6%)과 비교하여 거의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식품 영양 불안정(Food Insecurity)

- 저소득 가정(40.5%)은 그 외 가정(8.4%)에 비하여, 식품 영양 불안정 발생률이 약 5배 높음. 인종별로 분석했을 때, 식품 영양 불안정 발생률은 라틴계 및 흑인 가정이 평균보다 더 높았으며, 이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및 코로나19 발발 기간 동안 동일하게 나타남.

■ 취약 가구를 위한 임시 지원(Access to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 현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정 중 18.5%만 보조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는 전년 보고서에 비해 3% 감소한 수치임.

2022년 05월 05일

출처: <https://www.ffyf.org/zero-to-three-releases-state-of-babies-2022-yearbook/>

3. 가정폭력 피해자 자녀 양육 지원

- 10월은 가정 폭력 인식 및 예방의 달로,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부는 자녀 양육 지원이 필요한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개 부족(tribal)과 12개 주의 아동 지원 기관에 1,120만 달러를 지급함.
- SAVES(Safe Access for Victims' Economic Security)은 자녀양육 및 양육 시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모범 사례를 발굴, 평가 및 구현하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국가 시범 모델임. 양육시간 서비스는 각 부모가 자녀와 머무는 일정과 조건을 결정함.
- SAVES 시범 기금을 제공 받는 기관은 포괄적인 가정 폭력 안전 정책 및 지원을 시행하여 현재 자녀 양육비 지원이 부재한 부모에게 자녀양육 및 양육시간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임. 재정적 의존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학대를 하는 배우자와 지내거나 돌아가는 주된 이유임. 자녀 양육비 지원은 가정 폭력 피해자의 주요 수입원이 되어 경제적 안정을 통해 학대 관계를 벗어나도록 돕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 SAVES 프로젝트는 정책 개발 및 구현, 가정폭력 프로그램 직원 교육, 자녀양육 지원 확대, 피해자 교육 및 아웃리치 전략 제공, 증거 기반 대응 방안 구현, 가정 폭력 전문가를 통한 사례 처리, 전문 가정 폭력팀 구성 및 평가 등을 포함함. 교육 및 기술 지원 외에 주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포괄적인 서비스 구축을 지원하고,

가정 폭력 피해자의 필요와 고충에 대한 국가 연구를 수행 할 예정임. 해당 프로젝트는 향후 5년 동안 진행 될 예정임.

2022년 10월 04일

출처: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2/acf-awards-112-million-grantees-domestic-violence-survivors-safely-access>

4. 위탁 양육 아동 수 4년 연속 감소

- 2022년 11월 4일 발표된 전국 위탁 양육 및 입양 데이터에 따르면 위탁 양육 아동의 수가 4년 연속 감소했으며, 위탁 양육에서 입양된 아동의 수가 2년 연속 감소했음. 아동가족부(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는 안전한 가족 재결합을 지속적으로 장려하였으며, 위탁 보호 종료 아동의 절반 이상이 성공적으로 가족과 재결합하였음.
-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ACF에서 발표한 데이터는 연간 입양 및 위탁 양육 분석보고서에 따른 수치임.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 양육 아동의 수는 2020년도 말 407,000명에서 2021년도 말 약 391,000명으로 감소함. 복지 관련 입양 수는 2020년 57,900명에서 52,400명으로 감소함.
- 해당 감소 추이는 가족 재결합을 지지하고 친족 돌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아동 및 가족 관리국(ACF)의 우선 순위와 일치함. ACF는 지역사회에서 제공되는 예방 및 친족 돌봄 서비스를 강조해 왔으며, 이는 전체 위탁 양육 이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있음. ACF는 주정부에 친족 보호 등 입양 외 영구적으로 가족 분리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장하고 있음.
- 11월 14일에 발표된 아동복지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위탁 양육을 받는 아동 수는 2020년 217,000명에서 2021년 207,000명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이는 지난 20년 동안 최저 수치임. 입양 대기 아동 수는 2020년도 117,000명에서 2021년도 114,000명으로 감소함.

2022년 11월 04일

출처: <https://www.acf.hhs.gov/media/press/2022/focus-prevention-and-kinship-care-number-children-entering-foster-care-decreases>

독일

일·가정 양립		
1	모두에게 이로운 아버지를 위한 가족친화적인 정책	77
양육지원		
1	양육비 지급 지원(또는 선지급) 환급 금액이 증가	78
2	아동, 가족 그리고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지원금 증가	79
3	국회에서 아동을 위한 즉시/즉각 아동수당 지원에 관해 논의함	81
4	독일 조기지원 기금 10주년 행사 개최	83
5	독일 내각, 가족 구호 정책 확정	84
6	돌보미 육아의 지속적 발전과 지원	85
7	2023년부터 지원되는 가족 정책	86
유아교육·보육		
1	가족부 장관(Anne Spiegel), 디지털 전문가 회의 개최	87
2	종일학교(Ganztagsschule)의 질 개선을 위한 공동작업	88
3	어린이집과 학교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영양 급식 증진	89
4	가정 외 돌봄의 지속적 증가	90
5	어린이집 교사 전문 인력 강화에 관한 전국적인 표준이 마련됨	91
6	아동과 청소년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	93
7	독일 연방내각, 「어린이집 환경개선법」 초안 발의	94
8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법안 초안 논의	95
출산·임신지원		
1	브레멘시와 자란트주의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97
코로나19		
1	코로나 시기의 가족 지원 정책	98
2	가족 휴양 숙박시설 신청접수	100
3	팬데믹과의 투쟁에서 최우선 되어야 할 아동 복지	101
기타		
1	내각, 낙태 광고 금지 해제 승인	102
2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정착과 참여를 위한 정책 마련하기	104
3	연방 가족부 예산 증가	105
4	엄마로서의 자기 주도적 삶 지원	107
5	갈등가정 및 이혼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108

❖ 일·가정 양립

1. 모두에게 이로운 아버지를 위한 가족친화적인 정책

■ ‘가족을 위한 성공 요인(Erfolgsfaktor Familie)’

-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일-가정 균형이 아버지에게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꺼이 직장을 옮길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음. 본 연구는 프로그노스 에이전시(Prognos AG)가 실시한 연구로 “가족을 위한 성공 요인(Erfolgsfaktor Familie)”이라는 주제의 연구임.
- 독일 경제가 아버지에게 얼마만큼 가족 친화적인지에 관해 연구한 본 연구는 두개의 대표적인 그룹의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짐. 인사부와 총괄관리부에 근무하는 600명과 미성년 자녀를 둔 1000명의 남성 직원들이 설문에 참여함.
- 가족부 장관인 리사 파우스는 “회사가 유지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정을 둔 아버지에게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강조함. 남자 직원을 위한 회사의 가족친화적인 정책으로 육아에 더 많이 참여함으로써 어머니의 고충을 덜 수 있으며, 가사 일을 공동으로 하면서 파트너십이 강화 될 수 있음. 또한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음. 이런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자녀 출산 후 2주간 파트너휴가(Partnerfreistellung)라는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을 계획 중임.

■ 주요 연구 결과

- 연구에 따르면 독일 내 약 45만명의 가정을 둔 남자 직원이 일-가정 균형을 위해 한 번 이상 직장을 바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170만명 이상의 아버지가 일-가정 균형을 위해 자주 혹은 가끔 직장을 옮기는 것을 고민한다고 함. 이러한 이직에 대한 의지는 전문 인력 부족의 현시점에서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음.
- 연구의 또 다른 결과는 아버지를 위한 회사의 가족 친화적 정책에 대해 회사와 직장인의 의견이 상이하다는 점임. 가정을 둔 남성 직원들은 회사 운영자보다 회사의 가족 친화적인 면을 낮게 평가함.
- 일반 직장인의 38%만이 자신의 직장을 가족 친화적이라고 한 반면, 회사 관리자들은 63%라고 응답함. 가족 친화적인 정책이 회사 내에 존재 하더라도 이것을 가정을 둔 남자 직원

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회사 내 문화 조성이 필요함. 회사 운영자는 아버지가 지닌 어려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책을 함께 제시할 때 가족 친화적 정책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임.

- 기업 프로그램인 “가족을 위한 성공 요인”은 독일 기업이 아버지에게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기업의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이는 사회, 인구 통계학적 변화를 고려했을 때 기업의 미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임. 따라서 가족 친화적인 인사 정책은 구인 시장에서 확실한 회사의 장점이 될 것임.
- 기업 프로그램인 “가족을 위한 성공 요소”를 통해 연방 가족부는 독일 산업 및 노동조합의 중앙협회와 함께 가족 친화적인 직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또한 이 프로그램은 가족 친화적인 인사 정책을 실현하는 회사를 지원하고 있음.

2022년 12월 19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lisa-paus-von-einer-vaeterfreundlichen-personalpolitik-profitieren-alle-207908>

❖ 양육지원

1. 양육비 지급 지원(또는 선지급) 환급 금액이 증가

- 한부모 가정이 전 배우자에게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양육비 선지급(Unterhaltsvorschuss)을 통해 지원해 주고 있음. 선지급금은 정부가 지불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인에게 환수 받을 수 있음. 2021년 환급 받은 양육비 선지급 액수가 2020년 보다 증가한 440,000,000유로임.
- 2021년 정부가 환급받은 양육비 선지급 액수는 440,000,000유로로, 2020년 환급액보다 55,000,000유로가 증가함(14.4%의 증가율).
- 2021년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지출액은 2,450,000,000유로이며, 2020년은 2,310,000,000유로로 약 6% 증가함. 이는 양육비 선지급 지불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임. 양육비 선지급은 자녀의 나이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는데, 현재 지불되는 양육비 선지급 액수는 한 달 최소 177유로에서 최대 314유로임.

- 코로나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증가율로만 봤을 때 환급액 증가율이 지출액 증가율보다 높았음. 이는 정부와 지자체가 환급받는 체제를 더욱 강화한 결과임. 정부가 지출한 액수 대비 환급받은 액수 간의 비율을 환산한 환급율은 독일 전체적으로 18%의 향상된 비율을 보였으며, 지난 2년간 약 17% 향상함. 가장 높은 비율의 23%를 보인 지역은 바이에른(Bayern)주와 바덴 뷔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주이며, 그 뒤로 22%의 라인란트-팔츠(Rheinland-Pfalz)주로 나타남.
- 양육비 선지급 담당부서(Unterhaltsvorschuss-Stelle)는 양육비 선지급 뿐만 아니라, 양육비를 내야 하는 부모로부터 정부 지급 양육비를 다시 되돌려 받는 일도 함.
- 2017년에 양육비 선지급법(Unterhaltsvorschussgesetz UVG)에 의해 양육비 선지급 체계가 개선되었고, 이로 인해 한부모 가정의 여러 자녀들이 양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지난 4년간 양육비 선지급 지원의 혜택을 받는 가정이 약 두 배로 증가함.

2022년 01월 27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einnahmen-beim-unterhaltsvorschuss-steigen-deutlich-192658>

2. 아동, 가족 그리고 강한 시민사회를 위한 지원금 증가

- 독일 연방 내각은 2022년 두번째 예산안을 승인함. 연방 가족부에 125억 유로 이상이 투입됨. 이는 특히 아동, 가족 및 시민사회 강화를 위해 사용 될 것임.
- 지난 3월 20일 승인된 예산안에 따르면 가족부는 총 125억 8,000만 유로의 예산을 제공 받을 예정임. 이는 2021년 6월 첫 정부 초안이 계획한 금액 보다 1억 4,700만 유로 더 많음.
- 연방 가족부 예산 초안의 중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음.

■ 아동과 부모들을 위한 지원금

-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이 7월 1일 부터 아동바로지급수당(Kindersofortzuschlag)을 통해 아동 당 20유로가 추가적으로 지급 됨. 이를 위해 3,100만 유로가 추가로 제공될 예정임. 아동추가수당에 배당되는 총 예산은 13억 7,000만 유로임. 육아수당(부모수당

Elterngeld)은 가장 인기 있고, 성공적인 가족정책 중 하나임. 출산율의 증가와 함께 육아수당 수혜자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추가적으로 1억 유로가 수요에 따라 육아수당이 조달 될 수 있도록 지원되며, 이로 총 77억 3,000만 유로의 예산이 증가할 예정임.

■ 가족정책 강화

- 2,740 유로는 아동기본생활 보장(Kindergrundsicherung) 도입 및 독일 아동들의 새로운 기회 보장을 위한 국가적 액션플랜 기관(Einrichtung des National Aktionsplans Neue Chancen für Kinder in Deutschland)과 여러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국가적 액션 플랜 기관(Einrichtung des National Aktionsplans für Akzeptanz und Schutz sexueller und geschlechtlicher Vielfalt)에 사용될 예정임.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안보다 260만 유로가 증가함.

■ 코로나 이후 회복 프로그램(Aktionsprogramm “Aufholen nach Corona”)

- 2022년에는 약 2억 7,200만 유로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코로나 이후 회복”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에 사용될 예정임. 특히 독일 아동청소년 재단(Deutsche Kidner-Jugendstiftung)에 추가적으로 약 8,100 유로, 자격 교육 집중 지원(Qualifizierungsoffensive)에 추가적으로 6만 유로, 연방 조기 지원 재단(Bundesstiftung Frühe Hilfen)에 3,500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임. 그 외 다른 여러 정책들을 위해 총 약 9,600만 유로가 제공될 예정임.

■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강화, 극단주의 타파

- 연방 프로그램인 “민주주의는 살아있다(Demokratie Leben!)”는 2021년에 비해 추가로 1,500만 유로가 증가한 총 1억 6,550유로를 받게 됨. “사람과 사람의 연대(Menschen stärken Menschen)”프로그램은 1,800유로의 예산이 책정됨.
- 우익 극단주의와 인종차별 타파를 위해 내각 위원회는 2020년 광범위한 정책을 취하기로 결정함. 추가로 740만 유로가 독일과 이스라엘 간의 정치적 청소년 활동 및 청소년 교류 확대를 위해 쓰여 질 예정임. 또한 독일 융합(통합) 및 이민 센터(das Deutsche Zentrum für Integrations- und Migrationszentrum)는 인종 차별 감시 장치 개발 기금을 통해 더욱 지원이 강화됨.

- 정부 초안(예산안)에 따르면 독일 자원봉사 재단(die Deutsche Stiftung für Engagement und Ehrenamt)의 자금은 연간 천만 유로로 이는 영구적으로 확보 되어 있음. 평등을 위한 연방 재단(die Bundesstiftung Gleichstellung) 또한 영구적으로 매년 500만 유로를 지원 받음. 또한 독일 자원봉사 재단은 2022년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코로나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을 받을 예정임. 자원봉사재단이 올 해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총 2,000만 유로가 지원 될 예정임.

■ 국제 청소년 교류 확장

- 청소년 관련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첫 정부 예산안에 비해 50만 유로가 추가적으로 제공됨. 청소년 단체를 위해 총 약 2,500만 유로의 예산이 책정됨. 이 자금으로 독일-폴란드 청소년 기관과 독일-프랑스 청소년 기관의 자금 조달은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됨. 또한 아직 설립 완료가 되지 않은 두 개의 청소년 단체인 독일계 미국인 및 독일계 이스라엘 청소년 단체 창업 자금으로 조성될 예정임.
- 독일 G7 이사회 의장직 기간 동안 운영 및 행사를 위해 200만 유로가 계획 되어 있으며, 그 중 가장 많은 부분인 127만 유로는 Y7 청소년 정상 회담에 사용될 예정임.

■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공동체(Mehrgenerationshaus)에 대한 안정적 자금 조달

- 2022년에는 여러 세대가 함께 하는 공동체 주택에 4만 유로가 계속 지원됨. 이를 위해 초안 예산에 545만 유로가 추가로 배정됨. 또한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에 사용될 수 있도록 “코로나 이후 회복 연방 프로그램”(Aktionsprogramm Aufholen nach Corona)을 통해 총 650만 유로가 지원될 예정임.

2022년 03월 16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mehr-geld-fuer-kinder-familien-und-eine-starke-zivilgesellschaft-194204>

3. 국회에서 아동을 위한 즉시/즉각 아동수당 지원에 관해 논의함

- 지난 4월 28일 연방하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의해 만들어진 아동들을 위한 즉각 아동수당과 사회최소보장 시스템(Mindestsicherungssysteme)의 수혜 권리가 있는 성인들에게 일시불 지급되는 지원에 관한 법안 초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매달 아동 1인당 20유로가 즉각 지불되는 아동수당이 7월 1일에 도입될 예정임. 연방정부는 지난 3월 법안을 발의함. 이 지원의 목표는 아동 기초생활보장(Kindergrundsicherung)이 시행될 때까지 그들의 기회를 개선하고자 하는데 있음. 이 법안은 향후 심의를 위해 노동사회위원회(Ausschuss für Arbeit und Soziales)에 회부될 예정임.
- 즉각 지불되는 아동수당(Sofortzuschlag)은 다음과 같이 수혜를 받고 있는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 청소년임.
 - 사회 보장법(SGB II 또는 SGB XII) 항목에 따른 수혜자
 - 망명 신청자 혜택 법률에 따른 수혜자
 - 추가 생활 수당 수혜자
 -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을 받는 자
- 즉시 지불되는 아동수당의 도입으로 아동추가수당의 최대 금액은 한 아동 당 월 209유로에서 229유로로 20유로 증가됨. 아동추가수당은 저소득층 가정 받을 수 있음. 이 가족정책은 부모의 소득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할 만큼의 소득은 있지만 가족 전체의 필요를 충족하기엔 충분하지 않은 소득층의 가정들을 위한 지원임.
- 양부모 또는 한부모 가정은 가정재무서(Familienkasse)의 키즈-롤첸(KiZ-Lotsen)을 통해 아동추가수당 수혜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음. 가정재무서에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음. 아동추가수당을 받는 사람도 교육 및 참여지원(Leistungen für Bildung und Teilhabe)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집 비용 또한 면제 받을 수 있음.
- 4월 28일 연방 하원에서 논의된 법안 초안에 의하면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성인들에게 100유로를 일시불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 금액은 사회보장법 제2항과 제12항 해당 수혜자, 망명 신청자 수혜법에 의거하여 수혜를 받거나 연방복지법(Bundesversorgungsgesetz)에 따라 생활비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음. 본 일시금은 팬데믹으로 인해 상승한 생활비와 지출을 보상하기 위한 지원임. 7월에 지원될 예정임.

2022년 04월 28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estag-beraet-ueber-sofortzuschlag-fuer-kinder-193758>

4. 독일 조기지원 기금 10주년 행사 개최

■ 조기지원이 왔어요!(Frühe Hilfen sind da!/Early Help is here)

- 조기지원 기금의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베를린에서 기념 행사가 개최됨. 이와 동시에 ‘조기지원이 왔어요!(Frühe Hilfen sind da!/Early Help is here)’라는 모델 프로젝트가 시작됨. 이 프로젝트는 독일 연방 5개 주에서 버스로 이동하며 조기지원을 홍보 하는 투어임.
- 본 행사의 참가자는 연방가족부, 국립조기지원센터(das Nationale Zentrum Frühe Hilfen NZFH), 연방보건교육센터(Bundeszentrale für gesundheitliche Aufklärung, BZgA), 독일청소년연구소(das Deutsche Jugendinstitut, DIJ)와 연구 및 실천에 종사하는 전문가임.
- 연방가족부는 2012년 「연방아동보호법(Bundeskinderschutzgesetz)」의 일부로 조기지원 기금과 조기지원 촉진을 통합함. 연방 조기지원 재단(Bundesstiftung Frühe Hilfen)와 함께, 어려운 상황에 처한 어린 자녀를 둔 가족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것임. 본 기금의 목표는 모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고, 학대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조기지원 기금 10주년 행사의 일환인 ‘조기지원이 왔어요!(Frühe Hilfen sind da!/Early Help is here)’ 모델 프로젝트는 버스를 타고 연방 5개 주를 순회하는 것임. 이를 통해 인구 밀도가 낮은 지방 소도시 시민에게 조기지원 혜택에 관한 홍보를 하고자 함.
- 본 프로젝트는 2023년 말까지 실시되며, 조기지원 연방재단의 기금으로 자금이 조달됨. 바이어른(Bayern),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헤센(Hessen),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및 슐레스비히 홀슈타인(Schleswig-Holstein)주가 본 프로젝트에 참여함.

■ 조기지원 연방재단(Bundesstiftung Frühe Hilfen)

- 아동은 학대 없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있으며, 생후 초기는 아동 발달에 중요한 시기임. 따라서 이 시기 아동의 부모를 지원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함. 2018년 1월부터 조기지원 연방재단은 「연방아동보호법」의 중요한 부분을 실행에 옮기고자 함.
- 구체적인 목표는 조기지원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영유아 및 출생에서 3세까지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사회, 심리적으로 지원하는 것임. 연방재단은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연간 5100(51밀리언)유로를 지원함.

■ 국립 조기자원 센터(Nationales Zentrum Frühe Hilfen, NZFH)

- 본 센터는 연방보건교육센터(BZgA) 산하이며, 독일청소년연구소(DJI)와 함께 협력하여 운영되고 있음. NZFH의 자금은 연방가족부가 지원함.
- 센터는 가정의 어려움과 가능성을 조기에 파악하여,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며,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2022년 08월 22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zehn-jahre-fonds-fruehe-hilfen-200812>

5. 독일 내각, 가족 구호 정책 확정

- 지난 9월 14일 독일 정부 내각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 등의 재정 문제 해결을 위해, 그리고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Kindergeld)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친 가족정책을 법적으로 마련함.
- 연방 가족부 장관인 리사 파우스(Lisa Paus)는 “독일의 현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가족과 아동에 포커스를 두고 있음. 현재의 물가 상승은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음. 따라서 연방 정부 내각은 가계 부담을 덜고, 생계가 어려운 가정을 위해 세번째 가족 구호 정책을 결정함”을 언급함.
- 인플레이션 보완법(Inflationsausgleichgesetz)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물가 상승분이 임금 인상에 반영되고, 이것이 세금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세금인상(cold progression)을 규제하는 법안임. 이 법안으로 모든 납세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자녀가 있는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보다 지출이 더 높으며, 따라서 아동 수당 인상은 가족 구제 정책의 일환임. 예를 들어 세 자녀를 둔 가정은 각 자녀 당 매월 237 유로를 수당 받을 수 있음(총 711유로).
- 정책의 보완은 미래의 국민 기본 근로소득(Bürgergeld) 개선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함. 기본 근로소득에 준하여 아동 연령별 월 33~44 유로가 지급 됨. 학생, 대학생 그리고 직업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세금 면제(Freibeträge)가 520유로로 인상됨. 이로써 젊은이들이 자신이 번 돈을 더 많이 소유할 수 있게 됨.

-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지원 정책임. 가족 전체를 부양 하는데 소득이 부족하거나 넉넉하지 않은 가정을 위한 것으로 현재 아동 당 월 229유로의 아동추가수당이 지원됨. 정부는 250유로로 인상안을 체결함. 정부는 앞으로 아동수당, 아동추가수당 그리고 교육 및 참여 수당의 지원으로 아동이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가 충당 될 수 있도록 할 것임.

2022년 09월 14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kabinett-beschliesst-entlastungen-insbesondere-fuer-familien-201604>

6. 돌보미 육아의 지속적 발전과 지원

- 10월 10일, 연방 어린이 보육 협회(Bundesverband für Kindertagespflege)의 주최 하에 “돌보미를 통한 아동 돌봄 즉 돌보미 육아(Kindertagespflege)의 질적 향상과 개선 방안(Qualifizierte Kindertagespflege – Der Weg zum Erfolg)” 이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됨. 본 행사는 “돌보미 육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격 매뉴얼 개발에 대한 지원 및 개선방안”과 연방 프로그램인 “돌보미 육아 지원(ProKindertagespflege)”에 대해 보고하는 자리임.

* 돌보미 육아: 일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돌보미가 그의 가정에서 3-5명의 취학전 아동을 돌보는 형태

- 관계자들은 돌보미 육아에 관한 현황 보고와 향후 과제에 관해 토론하였고, 연방 가족부 장관의 환영사가 이어짐. “돌보미 육아는 유아교육의 초석이며, 저희는 돌보미의 직업 전망을 더욱 향상 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좋은 교육 과정과 적절한 보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좋은 어린이집 법(Gute KiTa-Gesetz)’의 일환으로 이미 돌보미 육아를 지원할 수 있었으며, 6개 연방 주가 이를 시행하였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새로운 ‘어린이집 환경개선법(KiTa-Qualitätsgesetz)’을 통해 돌보미 육아를 7개의 개선방안 중 하나로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돌보미 육아의 중요성이 강화 될 것이다.”
- 8월 24일 연방 내각은 독일 전역의 영유아교육 보육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법의 초안을 통과 시켰음. 이 초안에는 연방 정부가 향후 2년 동안 돌보미 육아와 유아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40억 유로를 지원할 것이라 명시함.

- 돌보미 육아는 많은 부모에게 매력적이고 적절한 가정 외 육아의 해결책이 될 것임. 독일 전국에 약 43,000명의 돌보미가 있으며, 약 166,000명의 아동이 돌보미의 돌봄을 받고 있음.

2022년 10월 10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kindertagespflege-weiterentwickeln-und-staerkeren-202420>

7. 2023년부터 지원되는 가족 정책

■ 가족 지원을 위한 포괄적인 정책

- 독일 연방 정부는 포괄적인 정책을 통해 가족을 지원하고자 함. 2023년 1월부터 다양한 정책들이 적용 될 예정임. 본 정책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지원, 세금 감면 그리고 지불 가능한 에너지 비용 등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임.
-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해,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생활비 지출의 증가로 재정적 어려움에 놓여 있음.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특별 지원이 시급한 실정임. 독일 정부에 의해 지원되는 여러 구호(수혜) 혜택들이 이미 시행 되고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 2023년부터 시행되는, 육아 관련 가족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아동수당(Kindergeld)은 각 아동 당 매달 250유로로 상승됨.
-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의 최고 수당은 아동수당 외에 저소득층 가정을 위해 매달 아동 당 250유로로 증가함.
- 새로운 시민수당(Bürgergeld: 실업수당)이 성인 1인당 매달 502유로(이는 53유로가 더 많아진 것임), 아동 기본 수당(*Regelsätze für Kinder: 실업수당을 받는 이 중 자녀가 있을 경우 받는 수당으로 예를 들어 만 7세에서 14세까지 2022년부터 348 유로를 받음) 또한 현저히 상승하여 매달 자녀의 나이에 따라 33유로에서 44유로까지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음.

- 한부모 가정을 위한 세금 감면 금액은 2020년에 252유로 추가되어 4260유로로 증가됨.

2022년 12월 21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weitere-entlastungen-unterstuetzen-familien-ab-januar-2023-spuerbar-208100>

● 유아교육·보육

1. 가족부 장관(Anne Spiegel), 디지털 전문가 회의 개최

- 좋은 어린이집 법(das Gute Kita Gesetz)은 지난 2019년 이후로 연방 정부가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해 주정부를 지원하는 정책임. 이 정책의 실행과 성공 여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관해 디지털 전문가 회의가 개최됨.
- 본 회의에는 어린이집 현장, 학계, 정치 분야의 대표 전문가가 모여 좋은 어린이집 정책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와 현황 그리고 앞으로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과 발전에 관해 논의하였음. 본 회의의 주제는 “좋은 어린이집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임.
- 정부는 2022년 말까지 좋은 어린이집 법에 따라 총 55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법 시행에 관한 모니터링을 통해 어린이집 환경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 예를 들면 아동 대비 교사 수의 증가를 들 수 있음. 그러나 아직까지도 지방마다 차이가 있음. 연방 가족부는 이번 정부 말기까지 독일 전체가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에 관한 국가수준의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좋은 어린이집 법에 따르면, 각 지방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10개의 기본 항목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지원금을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부모들의 어린이집 비용 부담을 감소하는데 사용할 것인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

2022년 02월 11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anne-spiegel-eroeffnet-digitale-fachkonferenz-193050>

2. 종일학교(Ganztagsgrundschule)의 질 개선을 위한 공동작업

- 새로 만들어진 ESF Plus 연방 프로그램의 주목표는 종일학교(Ganztagsgrundschule)*에 참여하는 아동들과 함께 종일학교 수업의 질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것임. 종일학교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는 5월 2일 부터 프로그램 참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종일학교(Ganztagsgrundschule): 초등학교의 방과후 수업으로, 오전에 이루어지는 의무교육 후에 이루어지며, 돌봄과 여가활동에 중점을 둠. 학교 내에서 또는 학교 외 비영리 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함.

- 이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은 유럽연합의 ESF(Europäische Sozialfonds: 유럽 사회펀드)의 공동 재정지원에 의한 것이며, 목적은 초등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고 그들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함임.

- 우선 시범단계로, 2024년까지 150곳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될 예정이며, 이후, 구현단계는 2027년 말까지 진행됨. 이를 위해 8,150만 유로가 지원될 것임. 연방 가족부는 초등학생의 종일학교에 대한 법적 권리를 도입하는 것 외에도 ESF Plus 연방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생 종일학교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

- ESF Plus 연방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음.

- 교사는 “참여”라는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함.
- 아동의 참여 활동을 설계하고 이를 종일학교 수업 내용에 정착시킴.
- 종일학교 수업을 통해 학교와 사회복지단체 간의 협업을 강화함.

- 아동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와 기회를 강화하는 것이 좋은 종일학교 수업의 전제 조건임. 동시에 “참여”는 아동과 종일학교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의 민주적 행동을 촉진함.

- 종일학교 대한 법적 권리

- 초등학생을 위한 온종일 돌봄은 독일 교육 환경의 중요한 부분임. 온종일 돌봄은 부모가 가정과 일을 조화롭게 병행하도록 도움을 줌. 부모는 자녀의 성장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양질의 유연한 온종일 보육 기회를 원함. 이를 위해 연방 가족부와 연방 교육부는 초등학

생을 위한 중일학교를 도입하고 법적 자격을 부여한 것임. 2026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임.

2022년 05월 02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gemeinsam-fuer-qualitaet-kinder-beteiligen-im-ganztag-195912>

3. 어린이집과 학교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영양 급식 증진

- 5월 3일 ‘어린이집 급식의 날(Tag der Kitaverpflegung)’ 행사가 진행됨. 이 날 연방 가족부의 수석비서관인 에킨 델리괴츠(Ekin Deligöz)와 연방 식품부의 수석비서관인 마누엘라 로트만(Mauelela Rottmann) 등은 브란덴부르크 쾨니히스 부스터하우젠(Brandenburg, Königs Wusterhausen)에 있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어린이집의 일반적인 급식문화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영유아에게 영양적으로 좋은 어린이집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의견을 교류함.
- 독일의 영유아 약 250만명이 매일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고 있음. 따라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영양 급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연방 가족부는 ‘좋은 어린이집 법(Gute-Kita-Gesetz)’을 통해 질 높은 급식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음. 본 법에 의하면, 영양과 보육을 담당하는 연방부처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에서 급식 및 영양공급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됨.
- 2018년 연방 식품부(Bundesernährungsministerium)는 어린이집과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급식의 날’을 지정함. 어린이집 및 학교 급식을 위한 네트워크 기관을 설정하여, 어린이집과 학교가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급식의 포괄적인 정보 제공, 급식에 관한 교육 행사 기획, 급식과 관련된 유능한 전문가를 연결시켜주며, 교사와 학부모, 급식 제공자, 관리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함.
- 연방정부는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통해 네트워크 기관을 지원하고, 어린이집 및 학교의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에 관한 조치와 계획을 조정하는 ‘어린이집과 학교의 영양 급식을 위한 국가 품질 센터(Nationale Qualitätszentrum für Ernährung in Kita und Schule NQZ)’를 지원함. 본 센터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영양 급식과 이를 통한 아동의 성장발달을 목표로 함.

2022년 05월 03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gesunde-und-nachhaltige-ernaehrung-in-kita-und-schule-foerdern-197032>

4. 가정 외 돌봄의 지속적 증가

- 어린이집 또는 돌보미에 의한 가정 외 돌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연방 가족부가 제시한 공식 수치에 의하면, 가정 외 돌봄의 수요는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임.
- 6월 9일에 가족부는 “가정 외 돌봄에 관한 보고서(Kindertagesbetreuung Kompakt)”를 발간함. 어린이집과 돌보미에 의한 돌봄의 확대에 인하여 가정 외 돌봄을 받는 아동의 수는 증가함. 이런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 이런 현상은 아동의 모든 연령대에서 나타나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수요와 공급 사이의 차이가 19%에 달함. 따라서 앞으로 가정 외 돌봄의 지속적인 공급 증가가 필요함.
- 어린이집을 다니는 만 3세~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는 총 2,613,058명임. 전년도 보다 48,343명 증가함. 2021년 3월 기준, 만 3세 미만의 가정 외 돌봄 비율은 34.4%이며, 만 3세에서 취학 전까지는 92.2%임. 이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0.6%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는 이 연령대의 아동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음.
- 가정 외 돌봄을 받는 초등학생의 수는 전년도에 비해 소폭 감소함. 2021학년도 초기에 1,621,000명의 초등학생이 방과후 수업 및 종일학교에 등록함. 이는 전년도 보다 초등학생의 수가 13,000명 감소했기 때문에, 약 0.5% 감소한 수치임. 어린이집, 방과후 및 종일반 이용 아동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최근의 어린이집 확대에도 불구하고 가정 외 돌봄의 수요는 공급을 지속적으로 초과하고 있는 상황임. 새로 발표된 가정 외 돌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 중 46.8%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길 희망함.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12.4% 인 것으로 나타남.
- 만 3세에서 취학 전 아동의 경우, 돌봄에 대한 수요는 95.8%이고,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73%가 가정 외 돌봄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54%의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돌봄 센터 또는 종일반에 다님. 19%에 달하는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존재함.
- 가정 외 돌봄의 수요는 현재 우크라이나 아동과 가족으로 인해 더욱 증가하고 있음. 전쟁 이후 독일에서 보호 받는 우크라이나 아동과 가족의 수가 증가함. 어린이집은 그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빨리 적응하고, 독일어를 배우는데 큰 기여를 함. 보호가 필요한 1세 이상의 모든 아동들은 독일에 도착한 첫날부터 어린이집 또는 돌보미에 의해 양질의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음. 난민 아동과 가족이 독일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됨. 2022년 연방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

추가로 총 20억 유로를 연방 주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예정임. 이 예산안에는 어린이 집과 학교를 위한 자금도 포함됨.

- 2026년부터 온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이 부여됨. 어린이집 졸업 후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돌봄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 온종일 돌봄에 대한 권리를 부모에게 부여함. 우선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행될 예정임. 그 다음해에는 2학년까지 확장하고, 2029년 8월부터는 모든 학년(독일의 초등학교는 4학년까지임)이 종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짐. 연방주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자치체가 초등학교 종일돌봄의 질적, 양적 확대을 위해 35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임. 2026년부터, 종일돌봄 운영을 위한 비용 지원도 점차적으로 늘려갈 예정임.
-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 보육의 질적 향상 및 참여에 관한 법인 “좋은 어린이집 법(Gute-Kita-Gesetz)”에 따라 2022년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55억 유로를 지원함. 좋은 어린이집 법에 의한 긍정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연방 주 간의 격차가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 법이 향후 당면한 과제임.
- 사회당(SPD), 녹색당(Grün)과 자유민주당(FDP)이 이끌어나가는 정부는, 좋은 어린이집 법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연방 주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도 국가 표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그 외 가족부는 추가적으로 다양한 연방 프로그램을 지원할 것임. 2022년에는 연방 프로그램인 “아동과 함께 하는 융합 과정(Integrationskurs mit Kind)”을 시작할 예정임.

2022년 06월 09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zahl-der-kinder-in-der-kindertagesbetreuung-steigt-weiter-198574>

5. 어린이집 교사 전문 인력 강화에 관한 전국적인 표준이 마련됨

- 어린이집 교사 양성 프로그램인 “어린이집 교사 전문인력 강화(Fachkräfteoffensive für Erzieherinnen und Erzieher)”는 현재까지 2,500명의 훈련생이 참여하였음.
- 어린이집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3년 과정으로, 본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교사 수급과 교사의 질적 향상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냄. 무엇보다도 어린이집 교사라는 직업에 관한 이미지 개선에 영향을 미쳤으며, 다른 분야 종사자들의 직업 전환 기회가 되기도 함.

- 어린이집 교사 전문 인력 강화 프로그램은 신입 교사 양성과 현존하는 전문 인력 재교육을 위해 연방 가족부가 지방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기관 운영자가 함께하며, 교사 영입과 지속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어린이집 교사들의 질적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연방 가족부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약 1억 6천만 유로를 지원함. 2021년 2월에는 코로나 19로 인해 증가한 어린이집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지원 모듈을 포함 하도록 프로그램을 확장함.
- 특히 교육 외의 업무를 담당하는 어린이집 보조 인력(Kitahelferinnen) 지원이 강화 되었음. 이러한 보조 인력은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뿐 아니라, 향후 교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
- 전문 인력 강화 프로그램의 평가
 - 어린이집 현장 실습통합훈련(PiA)은 전국적으로 교육과정의 기준 모델로 자리 잡게 됨. 일부 주정부는 자체 재정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문인력 강화 프로그램의 교사 양성 과정 모형을 영입하여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음.
 - 연방 정부의 전문인력 강화 프로그램이 제시한 교사대비 아동 수, 교육 실제 지침과 급여 수준 등의 표준 기준을 연방주에서 대부분 채택함.
 - 실전 교육이 통합된 교육 과정 형태는 고학력의 집단을 영입하는데도 기여함.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과정 참여자의 60%가 아비투어(Abitur: 우리나라 수능과 같은 대학입학 자격시험)를 마쳤거나 35%는 사회교육학 전공 이상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음.
 - 프로그램 참가자 즉 어린이집 교사, 교육과정 수련생 그리고 기관 운영자는 본 프로그램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함. 수련생은 교육과정, 근무조건 그리고 공익단체 종사 협약에 (공무원이 아닌 시 또는 도시가 운영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자들 예: 병원, 어린이집 등) 따른 보수(Tarifvertrag des öffentlichen Dienstes TVöD) 그리고 전문 교사의 코칭에 따른 현장 학습에 매우 만족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함.
 - 어린이집 보조인력(도우미) 지원으로 교사의 업무 부담이 감소하였고, 이러한 보조인력은 향후 교사가 될 수 있는 잠재 인력임. 이들 중 64%가 유아교육 관련 교육 양성 과정을 수료하고자 하며, 23%가 기관 운영자로부터 이미 교사 제안을 받았거나, 어린이집 교사 양성 직업학교에 등록된 상태임.

2022년 06월 09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fachkraefteoffensive-fuer-erzieherinnen-un-d-erzieher-setzt-bundesweit-standards-198502>

6. 아동과 청소년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

- 지난 7월 5일 가족부 장관인 리자 파우스(Lisa Paus)는 독일 체육 청소년부(Die Deutsche Sportjugend)와 독일 올림픽단체(Der Deutsche Olympische Sportbund) 행사에 참석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운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눔.
- 본 행사에는 스포츠, 정치, 의료 및 아동 청소년 사회 복지 관련 대표자가 참석하였으며, 행사의 모토인 “건강을 위해서 운동이 필요하다!(Gesundheit braucht Bewegung!)” 대한 의견을 교환 함.
-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체육활동에 제한이 있었고, 이는 건강 상의 다양한 문제를 야기 하였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연방 가족부는 독일 체육 청소년부와 함께 “코로나 회복 패키지(Corona-Aufholpaket)”를 내세워, 아동과 청소년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체육활동 지원 캠페인인 “MOVE”는 연방 청소년부(Bundesjugendministerium)가 자금을 지원하며, 가수 빈센트 바이스가 홍보대사를 맡아 널리 홍보할 예정임.
- 수년 동안, 연방 청소년부는 독일 스포츠청소년부(dsj)를 지원했으며,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협업 작업을 확대시킴. 이는 연방정부 프로그램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코로나 회복”의 일환임. 본 프로그램을 위해 연방 청소년부는 2021년과 2022년에 10억 유로를 지원받음. 이로써 독일 체육청소년부 외에도 독일에 있는 9만개의 스포츠 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 운동 및 체육 지원 프로그램 “MOVE”
 - 본 프로그램은 어린이집, 학교 또는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의 운동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야외 활동 행사 등을 통해 운동 및 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액션데이 M: 최소 20명의 아동이 참여하는 최소 2시간 가량의 체육 활동을 계획할 경우 (1시간 수업은 45분), 500유로를 지원함.
 - 액션데이 L: 최소 1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하며 최소 6시간 체육활동을 계획할 경우, 1000유로 지원함.

2022년 07월 05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kinder-und-jugendliche-fuer-sport-und-bewegung-begeistern-198810>

<https://www.move-sport.de/foerderung>(추가자료)

7. 독일 연방내각, 「어린이집 환경개선법」 초안 발의

■ 유아교육 질적 향상을 위해 40억(4 빌리언)유로 투자

- 연방정부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법」(KiTa-Qualitätsgesetz)에 따라, 2023년과 2024년에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40억(4 빌리언)유로를 투자할 예정임. 독일 모든 지역의 어린이집이 교육환경 기본 표준에 달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어린이집 환경개선법」 초안 발의에 대한 연방가족부 장관의 입장

- 연방가족부 장관 리사 파우스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법」 초안 발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함. “평등한 기회는 어린이집에서 시작되며, 교육, 건강한 발달 및 사회 참여를 위한 기초를 마련한다. 독일의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소득이나 주거지에 상관없이 양질의 유아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 확보, 우수한 교육 장비, 건강 및 영양 그리고 체육 활동 등 유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향후 2년 동안 40억(4빌리언)유로를 투자하고자 한다. 특히 언어교육 부분의 지원 강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어린이집 환경개선법」에 따라, 독일 모든 지역의 어린이집이 좀 더 나은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도모할 것이다. 입법 기간이 끝날 때 까지 독일 전국 어린이집 환경 개선 표준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시행하고자 한다.”

■ 7개 분야에 투자(기금의 50% 이상) 규정

- 수요에 기반한 어린이집 제공
- 적절한 교사 대비 아동 수
- 자격을 갖춘 전문가 채용 및 확보
- 원장 및 부원장의 역할 강화
- 언어 교육 강화
- 아동 발달, 건강, 영양 및 체육 활동 강화
- 데이케어(Kindertagespflege 아동 돌보미) 강화

■ 어린이집 비용은 사회적 형평성에 맞게 산정

- 어린이집 비용에 관한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연방 주정부의 새로운 조치는 새로운 「어린이집 환경개선법」에 의해 자금이 조달되지 않음. 이전의 「좋은 어린이집 법」(Gute-Kita-Gesetz)의 일부로 도입된 어린이집 비용 부담 축소에 관한 것은 위의 7개 분야가 제대로 충족될 경우 다른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함. 어린이집 비용 산정 기준은 부모의 소득, 형제자매 수, 기관에서 보내는 시간 등이 고려되어 전국 보육료 납부 의무 체계에 의해 산정되어야 함. 저소득층 가정 즉 사회급여, 아동 추가 수당 및 주거급여 등을 받는 가정은 앞으로도 독일 모든 지역에서 어린이집 비용 면제를 받을 것임.

■ 실무그룹의 제안서 개발

-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대한 제안서 개발을 위해 실무그룹이 마련됨. 본 실무그룹은 연방, 주 및 지방 정부 대표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번 입법기간에 시행될 어린이집 환경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개발하고자 함.

■ 「어린이집환경개선법」의 배경

- 「어린이집환경개선법」은 「좋은 어린이집 법」을 대체하는 것임. 「좋은 어린이집 법」은 연방 정부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약 55억(5.5 빌리언)유로를 주 정부에 지원하여 어린이집 환경개선과 어린이집 참여를 촉진 하고자 만들어진 것임.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좋은 어린이집법」에 의해 시행되었던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는 「어린이집 환경개선법」 시행 시 참고 될 것임.

2022년 08월 24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eskabinett-gibt-entwurf-fuer-das-kita-qualitaetsgesetz-auf-den-weg-200716>

8.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한 법안 초안 논의

- 어린이집 환경개선법에 따라 연방정부는 2023년과 2024년에 40억 유로를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투자할 계획임. 지원 목적은 독일 연방주 모든 지역에 동일함.

- 연방주들은 아래 7개 환경개선 부분을 우선적으로(지원금의 50% 이상) 개선해야 함.
-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자리 공급
- 적절한 교사-아동 비율
- 전문인력 확보와 유지
- 원장과 부원장의 역할 강화
- 언어교육
- 아동 발달, 건강, 영양과 운동 분야의 적절한 조치
- 돌보미 육아의 강화
- 연방 주정부는 정부가 새로운 어린이집 환경 개선법에 의해 지원하는 예산을 부모들의 어린이집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이전 “좋은 어린이집 법”의 일부로 도입된 어린이집 비용 절감 또는 해지는 위에 언급된 7개의 우선 분야가 충족된다면 이행 할 수 있음.
- 어린이집 비용은 앞으로 사회적으로 더 공정하게 책정되어야 할 것임. 부모의 소득, 형제자매 수, 어린이집 이용 시간 등이 어린이집 비용 책정에 고려되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사회급여(Sozialleistung),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 주거급여(Wohngeld)등을 받는 저소득층 가정은 앞으로 어린이집 이용 비용을 면제 받음.
- 어린이집 환경개선법은 좋은 어린이집법의 후속으로, 좋은 어린이집법은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해 55억 유로의 지원이 이루어졌음. 어린이집 환경 개선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좋은 어린이집법의 평가와 모니터링의 결과가 반영 될 것임.

2022년 10월 13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estag-beraet-gesetzentwurf-fuer-bessere-qualitaet-in-kitas-200716>

●● 출산·임신지원

1. 브레멘시와 자란트주의 난임 부부를 위한 지원

- 연방 단체인 “난임 부부를 위한 도움과 지원”(Bundesinitiative “Hilfe und Unterstützung bei ungewollter Kinderlosigkeit”)은 임신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는 단체이며, 브레멘시와 자란트주도 본 단체에 합류함.
- 브레멘시와 자란트주에 거주하는 난임부부는 치료 또는 인공수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됨. 지난 1월 1일 이후로 연방 가족부 산하에 속한 이 단체는 총 12개의 연방 주가 소속되어 있음. 인공 수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의 경우, 이성 부부일 경우 혼인 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체외 수정(IVF) 또는 정자 직접 주입법(ICSI) 치료를 4주기까지 지원함. 지원은 본 단체에 속한 연방 주에 거주하는 부부로, 전체 치료 부담금의 50%까지 지원 받을 수 있음.
- 독일 전체의 만 25세~ 59세 성인 중 약 1/3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자녀 부부임. 약 1/10의 부부는 임신을 위해 인공수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 브레멘시와 자란트주 외에도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연방 단체에 속한 연방 주는 바이어른(Bayern), 베를린(Berlin), 메클렌부르크-보아폼머른(Mecklenburg-Vorpommern), 니더작센(Niedersachsen), 노르트라인-페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라인란트-팔츠, 작센(Sachsen), 작센-알할트(Sachsen-Anhalt)와 튀링엔(Thüringen)임.
- 베를린, 브레멘, 라인란트-팔츠, 자란트주의 경우, 동성 부부에게도 난임치료를 지원하고 있음.

2022년 01월 04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unterstuetzung-fuer-ungewollt-kinderlose-paare-in-bremen-und-im-saarland-191484>

❖ 코로나19

1. 코로나 시기의 가족 지원 정책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해, 독일 정부가 2022년에 시행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음.

- 1) 만 12세 자녀들을 가정에서 돌봐야 할 경우, 20주까지 재정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2) 자녀 병가일 확장
- 3) 부모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공제

■ 어린이집과 학교

- 정부와 지자체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해 대면 수업을 하기로 결정함. 새로운 감염병에 의해 학교의 전반적인 폐쇄는 없을 것임.
- 팬데믹 현상은 각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학교 및 어린이집은 해당 지역 즉 지자체의 코로나 대응 규칙에 따름. 2021년 12월에 정부, 지자체는 독일 전체 모든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 하도록 함.

■ 자가격리 규칙

- 정부는 2022년 1월 7일 새로운 자가격리 규칙안을 발표함.
- 학교 및 어린이집에 다니는 학생 및 아동이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코로나 검사를 받기 때문에 접촉자일 경우 PCR 검사나 신속 항원 검사로 5일 후 격리를 종료할 수 있음. 매일 검사가 이루어지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높은 수준의 방역이 이루어진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
- 부스터 접종을 하지 않은 성인의 경우, 접촉자일 경우 7일 후 검사를 통해 격리를 종료
- 부스터 접종을 한 경우 격리 면제

■ 학교와 유치원이 코로나로 문을 닫아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나?

- 2022년, 부모의 '아동 병가일'은 각각 30일씩 주어지고(즉, 1자녀 가정의 경우 부모 각각 30일) 한부모 가정의 경우 60일 사용 가능. 다자녀 가정의 경우 각 부모가 최대 65일 아동 병가일 신청이 가능하며, 한부모의 가정일 경우 130일.
- 아동 병가 일은 아동이 아플 경우 외에도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 닫았거나 한 시적으로 열었을 경우 아이를 돌볼 곳이 없어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봐야 할 경우에도 해당 됨. 이런 코로나 팬데믹의 특수 상황에 따른 아동 병가일 수의 확장에 대한 정책은 2022년 3월 19일까지 시행될 예정임.
- 공보험에 가입한 모든 부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아동 병가로 손실된 세후 소득(세금을 제외한 소득)의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음. 보험회사는 이런 경우 어린이집과 학교가 코로나로 인해 대면 수업 부재 상황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아동 병가일 확장 외에도 보험 종류에 상관없이 직장인 그리고 자영업 종사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 돌봄으로 인해 생긴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음.
- 코로나로 인해 학교나 어린이집이 폐쇄하거나 대면 수업의 부재, 방학의 장기화 등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가정에서 돌보는 경우 2022년 3월 19일까지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음.
- 부모 및 한가정 부모들이 자녀 돌봄으로 인해 생긴 소득 손실의 67%, 최대 2,016유로까지 매달 보상 받을 수 있음. 총 20주까지 받을 수 있으며, 즉 부모 각각 10주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20주 받을 수 있음. 최대 10주 또는 20주는 한 번에 모두 신청하지 않고, 여러 달에 걸쳐 나눠서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은 만 12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양육권자 또는 장애 및 도움이 필요한 자녀를 가진 양육권자가 할 수 있음. 전제 조건은 어린이집과 학교가 닫는 동안 부모 외 다른 돌봄의 여지가 없는 경우여야 함.

■ 그 외 정책들

- 아동 및 청소년 회복 프로그램(Aufholprogramm für Kinder und Jugendliche)
-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손상된 학업, 체력 및 정신의 회복이 필요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으로, 정부가 2빌리언 유로를 회복 프로그램에 지원함. 뒤쳐진 학업을 회복하고, 방학 동안의 휴가 그리고 학교 외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함.
- 한부모 가정의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해 소득 공제 가능 최고 소득 기준이 두 배로 증가함. 즉 1,908유로에서 4,008유로로 정해짐.
- 아동 보조금(Kinderzuschlag)은 주로 한부모 가정과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임. 자녀 1인당 매달 최대 209유로를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음. 자격 조건과 지원 금액은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과 같은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부모 소득 및 자산 정도에 대한 검사가 일시적으로 간소화됨. 이로 인해 큰 자산이 없는 경우 자산에 대한 정보를 밝힐 의무가 없어짐. 이 규정은 2022년 3월 말까지 적용됨.

2022년 01월 10일

출처: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themen/coronavirus/unterstuetzung-fuer-familien-1738334>

2. 가족 휴양 숙박시설 신청접수

- 2022년 말까지 가족이 저렴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한 코로나 휴식기(Corona-Auszeit)” 정책이 도입됨. 비영리 단체의 가족 숙박시설(펜션과 같은 가족 단위로 머물 수 있는 곳)이 휴식장소로 제공되며, 2022년 1월 24일 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함.
- 2022년 1월 24일 부터 2월 27일까지 가족 숙박시설은 콜핑하우스협회(Verband der Kolpinghäuser e. V.)에 “가족을 위한 코로나 휴식기” 정책에 따른 지원금을 청구할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정책)의 목적은 저소득층 가정이 휴식(휴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참여 조건이 충족되는 가정은 이 프로그램(정책)에 참여하는 숙박시설 중 한 곳에서 최대 일주일간 저렴한 비용으로 휴가를 보낼 수 있음. 숙소에서의 숙박과 식비 등의 전체 비용 중 10% 정도 가족 본인이 부담하며, 나머지는 정부에서 부담함.

-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고 부모와 자녀를 위한 교육 활동을 제공하는 비영리 단체의 숙박시설이 이 프로그램 참여에 신청할 수 있음. 참여 전제 조건은 2019년 12월 1일 이후로 비영리 숙박시설을 운영 및 제공하고 있으며, 독일에 등록된 곳이어야 함.

2022년 01월 22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neue-antragsrunde-fuer-familienerholungseinrichtungen-192478>

3. 팬데믹과의 투쟁에서 최우선 되어야 할 아동 복지

- 독일 가족부 장관은 지난 11월 2일 ‘코로나19-어린이집 연구(Corona-Kita Studie)’ 결과를 발표함. 본 연구는 어린이집의 코로나19 예방 및 대처 방안의 결과에 관한 것임.
- 독일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적 불평등이 더욱 확대해 짐.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인 아동들은 감염 또는 어린이집 폐쇄에 있어 여러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었고, 이러한 취약계층 아동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 함.
- 가족부 장관은, 팬데믹 동안 아동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문제 외에도 어린이집 폐쇄로 인한 여러 문제를 갖게 되었으며, 특히 사회적 취약 계층의 아동들에게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에 유감을 표함.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정신적 문제와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음. 특히 무엇보다 취학 전 유아교육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안타까워 함.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아동의 복지가 최우선 되어야 하며, 독일의 아동과 청소년 모두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
- ‘코로나19-어린이집 연구(Corona-Kita Studie)’는 로버트-코흐 연구소(Robert-Koch-Institut) 독일청소년연구소(das Deutsche Jugendinstitut)가 함께 수행하였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어린이집의 역할과 아동, 가정 그리고 어린이집에 미친 영향에 관하여 조사함. 2022년 봄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언어, 운동 및 사회정서 발달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을 볼 수 있음. 사회적 취약 계층의 아동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에서는, 지원의 필요성이 40%로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적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20%로 나타남.
- 연구 결과에 의하면, 마스크 착용 또는 소그룹 운영 등과 같은 안전 및 위생에 관한 대처 방안은 좀 더 지속적인 안전 유지를 가능하게 하지만, 인력 소모가 크고, 교육활동에 있어 제약적인 측면이 있음.

- 지난 11월 2일 발표한 연방 부서간 실무그룹(Interministerielle Arbeitsgruppe IMA)의 아동건강(Kindergesundheit) 보고서에서도 연방, 주 및 지방정부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유지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하며, 특히 취약 계층 아동 및 청소년이 팬데믹 조치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함.
- IMA는 지난 2021년 9월에 팬데믹으로 인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 훼손 방지 및 회복을 위한 지침서를 발표하였고, 지방정부 및 지자체가 이에 따라 지원에 나섬. 그 예로 연방 청소년부(Bundesjugendministerium)는 연방 프로그램인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코로나 회복(Aufholen nach Corona für Kinder und Jugendliche)”을 통해 각 지방 정부에 스포츠, 여가활동 및 유아교육과 아동 청소년 복지 활동과 사회 정신적 지원 활동에 기금을 조달함.
-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 이미 팬데믹 이전에 스트레스를 받던 아동 및 청소년이 팬데믹으로 인해 건강이 더욱 악화된 것을 보여 줌. 따라서 IMA의 “아동건강”에 관한 추가 연구로 건강에 미치는 2차적 스트레스와 사회 취약층 아동 및 청소년에 초점을 맞추어 2023년 2월에 행동지침(해결방안)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임.
- ‘코로나19-어린이집 연구(Corona-Kita Studie)’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음.

<https://www.bmfsfj.de/resource/blob/203080/65a4536cafd23d9b13e82c89dc42ea71/corona-kita-studie-data.pdf>

2022년 11월 02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lisa-paus-kindeswohl-muss-bei-der-pandemiebekaempfung-an-erster-stelle-stehen-203056>

❖ 기타

1. 내각, 낙태 광고 금지 해제 승인

- 의사는 낙태 시행 여부와 어떤 낙태 시술 방법을 사용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음. 연방 내각은 지난 3월 9일 형법(Strafgesetzbuch: StGB) 291a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함. 형법 291a조항은 낙태 광고 금지에 관한 것임. 형법 개정 초안에는 의약품 광고법 개정안 또한 포함 되어 있음. 앞으로 의사들이 웹사이트에서 낙태

시술 여부와 시술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허락됨(합법화 됨). 지금까지는 인터넷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정보를 알릴 경우 형사 기소가 될 수 있었음.

- 가족부 장관인 안네 슈필겔(Anne Spiegel)은 오랜 시간동안 미뤄왔던 형법 219a이 폐지됨으로써, 의사들이 형사 기소를 두려워하지 않고 낙태와 관련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강조함. 이 형법의 폐지는 여성의 의사결정권을 강화하는데 기여한다고 봄.
- 임신 중절을 고려중인 임산부는 각 개인 사정에 맞는 조언과 지원이 필요함. 임산부가 낙태에 관한 결정을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며, 그럼으로 더욱 낙태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 즉 낙태 시술법, 기한과 규정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는 이 복잡한 문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가족계획에 관한 자기 의사 결정권에 대한 위원회(Kommission)을 설립하고자 함. 가족계획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인권에 관한 문제임. 독일은 이 인권을 옹호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할 의무가 있음.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가족부 장관은 언급하였음.
- 낙태에 관한 정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초안은 연방 법무부가 제출 하였으며, 이는 여성의 가족계획에 관한 자기 의사 결정권 개선을 위한 중요한 첫 단계라 볼 수 있음. 임신 유지에 대해 고민인 여성들은 상담, 정보 및 지원이 필요함. 이런 많은 여성들은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 함. 여성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 선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들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정보와 지식이 충분히 제공 되어야 함. 낙태를 고민 중인 여성은 금지가 아닌 도움이 필요함.
- 낙태와 관련된 부정적이고 불쾌한 광고는, 엄격한 의약품 광고법에 따라 사라질것임. 또한 형법 219a 조항에 의해 형벌을 과거에 선고 받은 의사들은 다시 복직 할 수 있음. 형법 개론법의 새로운 조항은 형법 219a항에 근거하여 1990년 10월 3일 이후에 내려진 모든 형사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하며, 진행 중인 소송은 중단하게 됨.

2022년 03월 09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kabinett-billigt-aufhebung-des-werbeverbotts-fuer-schwangerschaftsabbruch-193830>

2.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정착과 참여를 위한 정책 마련하기

■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 개최

- 지난 4월 25일 연방총무실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가 개최됨. 본 회의는 우크라이나 난민의 정착과 참여에 관한 것이었으며, 연방가족부 대표로 Ekin Deligöz가 참여함.
- 독일 수상 Olaf Scholz와 국무장관 Reem Alabalo-Radovan이 본 회의에 참석함. 회의에는 연방, 지방정부와 지자체의 대표,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여, 독일로 피난 온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수용 및 통합에 관한 논의를 함.

■ 연방가족부 대표로 참석한 Ekin Deligöz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함.

- 회의는 긴급한 상황 뿐 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가져가야 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서로 교류하는 형식임. 우리 시민사회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지원 하고 또 통합(융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난민을 지원하고 융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체계적인 작업이 필요함.
- 어린이집은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들이 우리사회에 융합되고 언어를 습득하는데 매우 중요한 장소임. 연방가족부가 제시한 필요와 요구에 기반한 지원정책 실현이 현 상황을 고려할 때 무엇보다도 시급함. 또한, 융합 과정 수업이 병행 되는 보육은 난민 아동에게 특히 중요함. 연방정부는 연방프로그램인 언어-어린이집(Sprach-Kitas) 투자 기금 마련과 좋은 어린이집 법(Gute Kita Gesetz)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융합 과정에 필요한 수십억 유로 자금을 지원할 것을 합의함.
- 연방가족부는 보호자 없이 탈출한 미성년자와 보육원 출신의 우크라이나 아동들에게 특별히 더 큰 주의를 기울일 예정임. 연방가족부가 설립한 국가 등록 및 조정 사무소(nationale Melde- und Koordinationsstelle 동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무소)는 3월 말부터 우크라이나 아동들이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와 함께 독일에서 지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본 지원의 초점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고 숙소를 마련하는 것임. 그 중에는 유대인 청구 회의(Jewish Claims Conference)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탈출할 수 있었던 홀로코스트(유대인 수용소) 생존자들도 포함되어 있음. 약 60명이 독일로 이송 되었고, 독일 전역에 나뉘어서, 보살핌 지원을 받고 있음.

■ 우크라이나 관련 회의 4가지 결과

- 난민 등록, 지역 분포, 숙소(거주지) 마련
- 취약계층 및 아동 돌봄(보육)
-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노동시장 상황
- 학교 교육 및 고등/대학 교육

2022년 04월 25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perspektiven-und-teilhabe-fuer-gefluechtet-e-aus-der-ukraine-schaffen-196216>

3. 연방 가족부 예산 증가

- 2023년 연방정부 예산계획안에 따르면, 연방 가족부의 예산이 증가함. 총 129억 유로가 예산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2022년 대비 총 2억 8천만유로 증가한 예산으로, 이를 연방내 각이 승인하였음.

■ 예산안의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음.

- 가족을 위한 법적 서비스(Gesetzliche Leistungen für Familien)
- 양육수당(Elterngeld)의 사용과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따라서 총 82억 8천 만(8,28 빌리언)유로가 양육수당에 배정될 예정임.
- 아동추가수당(Kinderzuschlag)은 지난 2022년 7월 1일부터 즉시 지불(Sofortzuschlag) 지원으로 추가 됨. 2023년에는 아동추가수당에 총 14억 6650만유로가 지원될 것이며, 이는 2022년 대비 1억 백만유로가 증가한 수치임. 2022년보다 4천만 유로가 증가한 10억 6천만 유로가 양육비 선지불 지원 혜택(Unterhaltsvorschussleistungen)에 사용될 예정임.

- 운동, 문화, 건강을 위한 미래패키지(Zukunftspaket für Bewegung, Kultur und Gesundheit)
 - “코로나 회복 패키지”를 통해, 아동, 청소년, 가족이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지원하고자 함. 아동 및 청소년이 겪은 어려움은 정신적, 육체적 질병으로 연결될 수 있음.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코로나 회복 패키지”에 이어, 2023년에는 운동, 문화 및 건강을 위한 미래패키지를 계획 중이며, 5천만유로를 지원 할 예정임.
- 자선 청소년 복지 사업을 위한 기금(Mittel für Aufgaben der freien Jugendhilfe)
 - 2023년 자선 청소년 복지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2억 2천4백 유로를 책정함. 이는 약 7,600만 유로 증가한 것이며, 예산 확보를 통해, 수많은 연방단체 및 기관들이 업무를 수월히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게 됨.
-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주택(Mehrgenerationenhäuser)
 - 코로나 회복 패키지가 종료된 후 2023년에 여러 세대가 함께 사는 주택을 지원하기 위해 2,300만(23밀리언)유로가 예산안에 책정됨.
- 자선단체(Wohlfahrtsverbände)
 - 사회복지 자선단체(freie Wohlfahrtspflege) 기관 및 중앙 조직을 위해 총 약 3900만 (39 밀리언) 유로가 책정됨.
-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의 질 향상(Frühkindliche Bildung und Qualität in der Kindertagesbetreuung fördern)
 - 영유아 교육 및 보육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영유아교육 보육 발전을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연방 예산에서 최대 20억 유로가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임.

2022년 07월 01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bundeskabinett-beschliesst-hoeheren-etat-fuer-das-bundesfamilienministerium-199462>

4. 엄마로서의 자기 주도적 삶 지원

- 독일 모성보호(Mutterschutz) 위원회는 직장에서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과 자녀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발견하고, 안전과 보건 및 위생 규칙을 규정함.
- 4년마다 갱신되는 독일 모성보호 위원회의 위원 15명은 공공 및 민간 기관에 종사하는 교육과정 종사자 협회, 노동조합, 대학생 대표 등 주 당국 공무원 및 학문계를 대표하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됨.
- 위원회가 작성한 규칙과 조사 결과는 고용주가 최신 기술, 사내 의료 및 위생과 같은 항목을 최신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좀 더 수월하게 규정할 수 있게 해 줌. 위원회는 2018년 모성보호법 개혁과 함께 설립 되었으며, 연방 가족부에 기반을 두고 있음.

[추가 자료] 독일 모성보호 위원회

<https://www.bmfsfj.de/bmfsfj/ministerium/behoerden-beauftragte-beiraete-gremien/ausschuss-fuer-mutterschutz/ausschuss-fuer-mutterschutz-155274>(2022년 9월 19일 게시자료)

- 2018년 모성보호법(Mutterschutzgesetz)이 근본적으로 변경됨. 임신 중, 그리고 출산 후 및 모유 수유 중인 여성과 그들의 자녀가 직장 또는 직업교육과정 및 대학에서 보호 받아야 함. 변경된 법에 의해 여성이 이 기간 동안 본인과 출산 될 자녀의 건강이 위협 받지 않는 한 직장 생활 또는 다른 활동들을 계속 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임신 중, 출산 후 그리고 모유 수유 기간 동안 받게 될 단점을 상쇄 하는데 있음.
- 모성보호법 제 30조는 모성보호 위원회의 구성을 규정하고 있음. 그들의 임무는 고용주가 모성 보호법에 맞게 수월하게 직장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신 기술, 직장의료 및 위생과 같은 부분에 신뢰할 만한 학문적 결과를 기반으로 한 규칙을 정하는 것임. 임신 또는 모유 수유중인 여성과 자녀에게 직장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의 특징, 정도, 범위 및 기간 등을 규정하는 것 또한 위원회의 임무임. 모성 보호 위원회는 연방 산업 안전 보건 연구소의 산업안전 보건 위원회(Bundesanstalt für Arbeitsschutz und Arbeitsmedizin BAuA)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음.

2022년 09월 14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margit-gottstein-selbstbestimmtes-leben-als-mutter-ermoeglichen-201596>

5. 갈등가정 및 이혼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은 가족 간 갈등과 별거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맞춤형 정보와 조언을 제공하고자 함. 가족 간 갈등과 이혼 절차 중 심리적, 재정적 또 법률적 조언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이 플랫폼은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것임.
- 온라인 플랫폼인 슈타르크(STARK: 갈등과 이혼을 이겨내는 방법, 상담 및 갈등해결법, Streit und Trennung meistern-Alltagshilfe, Rat & Konfliktlösung) 웹사이트는 "은 지난 11월 1일부터 가족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음. 가족 간의 갈등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음. 특히 아동 및 청소년에게는 커다란 스트레스이며, 이후 성장 발달과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 별거 및 이혼 시 발생하는 갈등 등의 복잡한 문제를 과소평가하고, 제때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음.
- 슈타르크(STARK) 웹사이트는 위기 상황의 부부에게 예방적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거 및 이혼 과정에 처한 부모와 자녀들을 위한 심리 교육적 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무엇보다도 자녀를 둔 가족을 중점으로,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분야가 따로 마련되어 있음.
- 부부관계 위기와 이혼에 관한 여러 다양한 정보와 지원 외에도 부부간의 대화법, 양육비에 관한 질문과 답 또는 아동의 감정 조절법 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 및 조언도 이루어지고 있음. 이 외에도 별거 및 이혼으로 인한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질문과 답 또한 이루어지고 있음.
- 이 웹사이트 개설 후 사용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도록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트레이닝이나 그 외 다른 항목들도 추가 되어 지고 있음.
- 슈타르크(STARK) 웹사이트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함께 개발하였음. 하이델베르크 대학 병원(Universitätsklinikum Heidelberg), 괴팅엔 대학(Georg-August-Universität Göttingen), 독일 청소년 연구소(das Deutsche Jugendinstitut), 뮌헨 대학(Ludwig-Maximilians Universität München), 울름 대학병원(Universitätsklinikum Ulm)과 울름 대학(Universität Ulm)이 참여하였음.
- 슈타르크(STARK) 웹사이트 <https://www.stark-familie.info/de/>

2022년 11월 09일

출처: <https://www.bmfsfj.de/bmfsfj/aktuelles/alle-meldungen/neue-online-plattform-staerkt-familien-bei-streit-und-trennung-202708>

영국

양육지원		
1	2세 영아의 발달 점검을 위한 새로운 지침	111
유아교육·보육		
1	교육부, 유아교육 및 보육 관계자 리더십 훈련을 위한 재정 지원	112
2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NCSC)의 권고 사항	114
3	2022년 3월 기준 잉글랜드 보육 제공 현황	115
4	잉글랜드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의 교육 회복에 관한 교육기준청(Ofsted) 보고서 발간	116
5	영유아보육 및 교육 시스템에 관한 비교 문헌 고찰	118
6	어린이집 폐업: 보육시설 없이 남겨진 부모들	119
7	육아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Better Childcare' 보고서	121
8	보육 부문의 규제 완화를 촉구한 IEA 보고서에 대한 영국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협회의 제안	122
9	잉글랜드 아동 위원, "보육을 위한 비전" 보고서 발표	123
10	초기 아동의 발달을 위하여 1억 8천만 파운드 지원	124
코로나19		
1	교육부, 아이돌보미를 위한 추가 지침 웹페이지 게시	125
2	현행 코로나 방역지침 '플랜 B' 종료 후 '플랜 A'로 복귀 발표	126
3	보육시설,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 사례 보고할 필요 없음	127
4	코로나 시기, 보육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128
5	영국 정부, 워드 코로나(Living with COVID)를 위한 지침 발표	129
6	교육부, 아이돌보미 멘토 프로그램 개설	130
7	교육기준청(Ofsted) 연차 보고서: 아동의 교육 및 돌봄 인력 부족으로 인해 더뎠고 있는 팬데믹 회복	131
기타		
1	지속가능성과 기후 변화: 교육 및 아동 서비스 체계를 위한 전략	132
2	교육기준청(Ofsted), 새로운 5개년(2022-2027) 전략 발표	133
3	5세 미만 아동에 관한 왕립 재단의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	134

☞ 양육지원

1. 2세 영아의 발달 점검을 위한 새로운 지침

- 교육부는 잉글랜드의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자를 위한 2세 발달 점검에 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함. 이 지침은 2-3세 영유아 관계자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 기관의 교사와 등록된 아이돌보미를 위한 것임.
- 이 지침은 EYFS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학습 및 발달의 3가지 주요 영역에서 영아의 발달 상태를 점검하고, 영아의 관심영역 및 추가적 발달 요구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원과 개입을 위해 부모와 기타 전문가와 협업하는 것에 관한 것임.
- 지침 내용은 정보와 제안을 제공하는 것이며, 실무자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음. 이 지침은 아동의 발달과 학습에 관한 <Development Matters*>와 함께 살펴봐야 함.
- Guidance Development Matters(아동 발달 사항에 대한 지침)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Guidance Development Matters>는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교직원, 아이돌보미와 같이 모든 영유아 대상 실무자를 위한 안내서로서 아동이 어떻게 학습하고 발달하는지에 관한 견해를 제공함.
 - 이를 통해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영유아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교육과정은 교사가 영유아들이 경험하고 학습하길 바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YFS 법률 규정에 제시된 교육 프로그램 요구사항을 충족해야만 함.
 - <Development Matters>는 다양한 연령과 단계에 따른 아동 발달 경로를 제시함. 이 안내서는 영유아가 다음 단계에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보기반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임. 단순히 다량의 정보 생산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사용되도록 고안된 것이 아님.
 - 안내서의 관찰 체크포인트(Observation checkpoint)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위험 여부를 파악하여 대처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음. 유아의 발달 진행을 모니터링하여 어떠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 양육자와의 세심한 대화를 통해 유아를 더 잘 이해하고 가정 내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제안을 제공할 수 있음. 특히 방문 건강지도사, 언어치료사와 같이 유아의 건강과 관련된 직종에게 중요한 지원이 될 수 있음.

- 효과적인 실제의 7가지 핵심 기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1. 모든 아동을 위한 최선
2. 양질의 돌봄
3. 교육과정: 아동이 배우기를 바라는 것
4. 패다고지: 아동이 배울 수 있도록 돕기
5. 평가: 아동이 무엇을 배웠는지 확인하기
6. 자기조절 및 집행기능
7. 부모와의 파트너십

- 아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 할 수 있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development-matters--2/development-matters>

2022년 05월 11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progress-check-at-age-2>

❖ 유아교육·보육

1. 교육부, 유아교육 및 보육 관계자 리더십 훈련을 위한 재정 지원

-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는 잉글랜드의 유아교육 및 보육 실무자들이 새로운 'NPQ(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국가 전문 자격) in Early Years Leadership(NPQEYL)'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계획을 발표함. NPQEYL은 2021년 정부의 교육 회복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것임.
- 장학금 지원은 2022~23학년도 및 2023~24학년도에 더 많은 범위의 유아교육 및 보육 실무자들, 이를테면 리더십 책무를 지닌 등록된 아이돌보미를 포함하여 3급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관계자 까지 범위가 확장됨.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을 이끌고 모든 유아의 필

- 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데에 요구되는 기술 및 역량 개발과 향상을 위한 훈련과 지원을 제공할 것임.
- NPQEYL은 17-21개월의 과정으로 매주 평균 1-2시간 개인 학습과 집단교육의 혼합 형태로 운영되며, 교직원의 자신감 향상과 기술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교육/훈련 내용을 제공함.
 - 양질의 영유아기 교육 및 보육 제공
 - 조직 관리 및 직원 개발
 - 학부모 대상 건설적 피드백 제공
 - 추가적 또는 특수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영유아에 관한 업무
 - 개선사항 시행
 - 비슷한 책무를 지닌 동료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 되며, 훈련과정의 내용은 교사가 자신의 역할에서 직면하는 주요 과제에 중점을 두고 있음. 전문가 집단은 훈련과정을 현장 실무자의 바쁜 일정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설계하여 그들의 업무량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함.
 - 본 과정은 3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사립(private), 자발적(voluntary), 독립(independent) 보육시설 관리자, 리더십 책무가 있는 아이돌보미, 학교기반 및 공립 보육시설장이 해당됨.
 - 훈련과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환경의 전략적 방향 수립 및 유지
 - 증거기반 교육 문화 확립
 - 아동발달 지원을 위한 보육과 양질의 교육과정 계획 및 제공
 - 아동의 학습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언어 및 문해 교육 시행
 - 효과적인 영유아의 행동 관리 및 개별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지원
 - 평가를 통한 교수(Teaching) 및 전환(Transition)의 개선

- 모든 지도자, 실무자, 교사가 어떠한 추가적 요구사항을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하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관한 것임.

2022년 05월 27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department-for-education-funding-for-early-y/>

<https://professional-development-for-teachers-leaders.education.gov.uk/early-years-leadership>

2.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의 사이버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NCSC)의 권고사항

■ 사이버 보안 강화 권고

-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국가 사이버 보안 센터(National Cyber Security Centre, NCSC)는 모든 기관들에 대하여 사이버 보안을 강화할 것을 권고함.
- 교육 및 보육 부문에 사이버 공격이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지만, 교육 및 보육시설들은 잠재적 위협에 대한 지침을 미리 숙지하고 만일 사이버 공격을 경험할 경우 취해야 할 조치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 함.

■ NCSC는 유용한 몇 가지 유용한 링크를 제공함.

- 1) CSC: Actions to take when the cyber threat is heightened
<https://www.ncsc.gov.uk/guidance/actions-to-take-when-the-cyber-threat-is-heightened>
- 2)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CISA) advisory(United States)
<https://www.cisa.gov/uscert/ncas/current-activity/2022/01/18/cisa-urges-organizations-implement-immediate-cybersecurity>
- 3) Microsoft blog(우크라이나 정부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악성소프트웨어 정보)
<https://www.microsoft.com/security/blog/2022/01/15/destructive-malware-targeting-ukrainian-organizations/>

■ 교육 및 보육시설을 위한 사이버 보안 지침

-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전문협회(PACEY)는 NCSC와 함께 사이버 보안 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히 교육 및 보육시설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음.
- 이 지침은 현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은 없으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위하여 유용하며, 다음과 같이 네 가지 주요 지침을 다루고 있음: 1) 중요한 정보 백업하기, 2) 개인 컴퓨터 및 정보 접근을 제어하기 위하여 비밀번호 사용하기, 3) 바이러스와 악성 소프트웨어로부터 기기 보호하기, 4) 수상한 메시지(피싱공격)에 대한 조치

2022년 03월 10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national-cyber-security-centre-advises-setti/>

3. 2022년 3월 기준 잉글랜드 보육 제공 현황

- 잉글랜드 교육기준청(Ofsted)은 유아교육 및 보육에 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였음. 자료에 의하면 잉글랜드에서 등록된 보육 제공 현황 수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지난 1년 동안(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 등록된 보육 공급자 수는 약 4,000명 감소하여 2015-16년 이후 가장 큰 감소를 보임.
- 주요 내용은 교육기준청에 등록된 보육 제공 및 장소의 수, 2022년 3월 31일 기준 가장 최근의 점검 결과, 그리고 교육기준청에 등록된 보육 제공의 수, 2021년 8월 3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에 교육기준청에 등록 그리고 탈퇴한 보육 제공의 수에 관한 것임.
-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약 4,000명/기관의 보육 제공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15-16년 이후 가장 큰 감소세를 나타냄. EYR(Early Years Register) 등록 보육 장소 수는 2015년 8월 이후 광범위하게 안정적인.
 - 2022년 3월 31일 기준, 잉글랜드 교육기준청에 등록된 보육 제공 수는 68,000명/기관으로 2021년 8월 31일 마지막 발표 이후 4% 감소하였고, 2015년 8월 31일 이후 22% 감소함.

- 아이돌보미(Childminders)의 경우, 2022년 3월 31일 기준 31,400명으로 2021년 8월 31일 이후 2,300명(7%) 감소하였고, 2015년 8월 31일보다 16,600명(35%) 감소함. 가장 최근 평가에서 '매우 우수' 판정을 받은 아이돌보미 비율은 13%였으며, 취약한 지역에서는 아이돌보미의 '매우 우수' 판정 비율이 낮음.
- 비가정 보육(Childcare on non-domestic premises)의 경우, 2022년 3월 31일 기준 보육 제공은 27,300개로, 2021년 8월 31일 이후 1% 미만 감소함. 보육 제공의 수는 2015년 8월 31일 이후 1% 감소로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 가정 보육(Home childcarers, 아동의 가정에서 돌봄 제공)은 2022년 3월 31일 기준 9,100명으로 2021년 8월 31일 이후 6%(600명) 감소하였으며, 이는 2015년 8월 31일과 비교하여 20% 적은 수치임.
- 가정 내 보육(Childcare on domestic premises, 아동의 가정이 아님) 제공은 2022년 3월 31일 200개로 나타났으며 2015년 8월 31일 이후 대체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

2022년 06월 29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statistics/childcare-providers-and-inspections-as-at-31-march-2022/main-findings-childcare-providers-and-inspections-as-at-31-march-2022>

4. 잉글랜드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의 교육 회복에 관한 교육기준청(Ofsted) 보고서 발간

- 7월 20일 잉글랜드 교육기준청(Ofsted)은 여름 학기 점검 결과와 점검 담당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의 교육 회복: 2022년 여름 (Education recovery in early years providers: summer 2022)'이라는 제목의 최신 보고서를 발표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아동 발달 및 학습: 교육기준청은 영유아가 다양한 방식으로 팬데믹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함.
- 담화, 의사소통, 언어 발달 관련 문제는 여전히 우려되는 점으로 남아 있으며 이에 관한 전문적 지원을 요청하는 영유아가 많아지는 상황임.
- 공유 및 교류와 같은 정서적, 사회적 능력의 감소, 낮은 자신감,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근육 발달을 위한 중요한 신체 활동 기회를 놓친 영유아들에게서 신체발달과 건강의 저하가 나타남.
 - 2세 아동(팬데믹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은 대상)을 위한 재정지원 수혜 자격에 적합한 가족의 수가 적은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일부 보육 제공자들은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을 피한다고 보고함.
- 공급자에 대한 영향
- 팬데믹이 영유아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유아교육 및 보육 인력은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한 개입과 전략을 실행해 오고 있음. 다른 그룹과의 네트워크, 학교 및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구축하기도 함. 팬데믹으로부터 회복 중인 영유아를 지원하기 위해, 많은 실무자들은 추가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외부 전문가로부터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격차 메우기(fill the gap)’ 위해 특정한 훈련을 받고 있음.
- 한편,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자들은 다양한 압력에 계속 직면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감염병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두려움과 불안감, 정부 지침 철회에 대한 우려
 - 저임금으로 인해 우수 인력 채용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로 인해 업무 관리 및 영유아를 위한 최상의 교육 및 보육 제공에 문제가 발생함.
 - 지역 당국의 방문 빈도가 감소하였고, 영유아를 적절하게 지원하기 위한 환경에 필요한 재정과 자원 지원이 감소함.
 - 디지털 교육에 지속적으로 의존하며, 보육 제공자와 부모 그리고 기타 전문가 간의 대면 상호작용이 부족함.
-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의 교육 회복: 2022년 여름(Education recovery in early years providers: summer 2022)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education-recovery-in-early-years-providers-summer-2022>

2022년 07월 20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ofsted-publishes-briefing-on-education-recov/>

5. 영유아보육 및 교육 시스템에 관한 비교 문헌 고찰

- 현재 영국 영유아보육 및 교육 시스템은 여성과 아동을 위해 적절하게 작동하지 않고 있음. 영유아보육 및 교육 전문가 협의회(PACEY)와 페이버스 재단(Pavers Foundation)이 후원한 보고서인 “영유아보육 및 교육 시스템(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ystems)”은 영국과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스위스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 시스템을 비교하였음.
- 각 국가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 시스템의 주요 특징과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 및 아동 발달 결과에 관한 문헌을 비교 고찰하였으며, 영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였음.
-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최근 또는 현재, 다른 국가들은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육 시스템을 혁신하고 개혁하고 있으나, 반면 영국은 2017년 이후로 같은 보육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음.
 - 영국의 영유아보육 및 교육 분야 종사자의 임금은 비교 국가들 중 가장 낮음.
 - 높은 수준의 교사 자격과 적절한 교사 대 아동 비율은, 근무환경의 가치를 높이고, 더 향상된 교육 결과를 창출하며, 장시간의 보육업무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완화함. 이는 일본과 뉴질랜드의 사례에서 볼 수 있음.
 - 5개의 비교국가에서, 소득 수준이 낮은 부모가 적은 보육료를 지불하는 반면, 영국에서는 소득수준이 적은 부모가 높은 보육료를 지불하는 반대 양상을 보임.
 - 적절한 보육비용은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킴. 1990년대 후반, 낮은 정액 보육료를 도입한 캐나다 퀘벡 사례가 이를 강력하게 입증함.
 - 영국의 보육에 관한 공공 지출은 스위스를 제외한 국가 중 가장 낮았음. 그러나 다른 국가들도 전 세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공공지출 자체가 낮은 실정임.
- 또한 본 보고서는 보육시스템의 국제 동향을 검토함으로써, 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고려해야 할 거리를 제공하고 있음.
 - 뉴질랜드는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또한 일하는 부모를 위해 연중 무료 보육을 제공함. 이는 영국의 기간 한정 보육 제공과는 대조적임.

- 호주, 캐나다 및 뉴질랜드는 수수료 보조금이 보육기관에 전달되므로, 부모의 부담이 없음. 이는 부모의 비용을 충분히 충당하지 못하는 영국의 유니버설 크레딧 내의 상환 제도와 대조됨.
 - 일본은 공공 공간을 활용하여 가족프로그램을 보다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영국의 'SureStart'와 유사함.
 - 호주는 직장의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육이 매우 일반적이며, 뉴질랜드는 아픈 아동을 위한 병원 기반 보육을 제공함.
 - 캐나다 퀘벡의 경우, 보편적 무상보육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모든 부모에게 1일 10달러의 보육료를 제공함. 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정책이 어머니의 노동 시장 참여율을 크게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남.
-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음.
- 영유아보육 및 교육 시스템: 자유복지국가의 비교문헌 고찰(Childcare and early education systems: A comparative literature review of liberal welfare states)

<https://www.fawcettsociety.org.uk/Handlers/Download.ashx?IDMF=88773740-12ac-40d8-9921-217f3228363d>

2022년 07월 05일

출처: <https://www.fawcettsociety.org.uk/childcare-and-early-education-systems>

6. 어린이집 폐업: 보육시설 없이 남겨진 부모들

- 잉글랜드 소재 보육시설이 재정적 압박과 교직원 부족으로 인해, 충분한 사전 예고 없이 문을 닫게 되면서 부모들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임.
- 모권 신장을 위한 캠페인 조직인 'Pregnant Then Screwed'는 지역 어린이집이 갑자기 문을 닫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부모들로부터 “침수되었다”라는 표현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함.

- 보육시설은 전기료, 식료품 구입비, 교직원 급여 등의 상승으로 인한 재정 어려움과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정부는 보육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잉글랜드 약 14,000여 명의 보육 제공자를 대표하고 자체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Early Years Alliance'는, 보육 부문이 20년 만에 고용과 비용 증가에 있어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언급함.
- Early Years Alliance의 대표인 Neil Leitch는, 현재와 같이 채용, 비용 압박이라는 위기에 직면한 적을 경험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제반 비용의 증가 뿐만 아니라 보육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 부족에 대해 비판함. 또한 잉글랜드에 거주하는 3-4세 자녀를 둔 부모는 주당 15시간의 무상보육 서비스를, 그리고 근로가정은 재정지원 보육을 주당 15시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정부가 충분하게 지원하지 않아 보육 제공자들이 그 손실분을 메꿔야 함을 지적함.
- 지난 3월, 2,000명의 보육 제공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30%가 손실을 입은 채 운영하고 있었으며, 34%는 12개월 후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
- Early Years Alliance는 3년 전에는 132개의 보육시설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65개를 운영하고 있음. 잉글랜드 보육시설의 수는 2015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2021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9개가 감소함.
- 전국어린이집 협회의 Jonathan Broadbery는 3월 이후 보육시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전함. 또한 4월에는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최저 임금과 국민보험 분담금이 인상되었으며, 팬데믹 기간 동안 도입되었던 임시 영업 요율 완화가 종료되어 상황이 더욱 악화됨.
- 정부는 보육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시간당 비용을 늘리기 위하여 지자체에 추가 예산을 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고용주의 비용을 위한 재정 지원 늘리고 있다고 덧붙임.

2022년 08월 15일

출처: <https://www.bbc.com/news/business-62496728>

7. 육아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Better Childcare’ 보고서

- 영국의 Policy Exchange에서 발행한 보고서 ‘Better Child care’는 보육사 직업을 확장하고 부모에 대한 비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영국의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의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본 보고서는 보육사를 위한 ‘규제 부담 제거’, 교육기준청(Ofsted)이 관할하는 보육 기관 모델로의 전환 비율 확대에 관하여 몇 가지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면세보육을 종료하고, 그 재정으로 아동수당을 인상할 것을 제안함.
- ‘Better Child care’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https://policyexchange.org.uk/publication/better-childcare/>
 - 영국의 보육 비용은 선진국 중에서 높은 수준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는 생활비 압박의 주요 요인이 되며, 결과적으로 다양한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
- 본 보고서는 정부가 보육 시장을 개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을 제안함.
 - 보육사 직업 확대
 - 부모에게 더 많은 유연성 제공
 - 아동수당 확대
 - 보육 부문에 대한 스마트한 규제 수용
-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협의체인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Childcare and Early Years(PACEY)’는 이러한 정책 제안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냄.
- PACEY의 최고경영자인 Liz Bayram은 1) 10년 동안 논의되고 있는 보육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2) 오랫동안 적은 예산이 투자되어 오고 있는 2-4세 보육사업이 겪는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을 언급하며, 오늘날 육아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함.

2022년 08월 10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policy-exchange-%E2%80%98better-childcare%E2%80%99-report-fa/>

8. 보육 부문의 규제 완화를 촉구한 IEA 보고서에 대한 영국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협회의 제안

- 영국 경제연구소(Institute for Economic Affairs, IEA)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CUTTING THROUGH: 생활비 위기 해결 방안(How to address the cost of living crisis)>를 통해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 주거, 고용 등에 관한 개선사항을 제안하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서는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의 ‘과도한 형식화(over-formalisation)’와 ‘과잉 규제(overregulation)’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사항을 제안함.
- 영국의 보육 비용은 선진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비용이 상승하였음. 주요 원인은 엄격하게 적용되는 교사 대 아동 최소 비율, 교육과정의 시행, 인증 비용 및 해당 부문의 과도한 형식화 때문임.
- 보육 부문의 규제 요건 완화는, 완전한 규제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다수의 유럽 국가의 기준 시행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이를 통해 약 40% 또는 유아 1인당 월 300파운드 이상의 비용 절감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제안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교육기준청(Ofsted)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부모와 가족구성원에게 유료 보육을 제공하도록 허용함.
 - 보육사가 되기 위한 공식 인증/등록 요건을 폐지하고, 대신 민간기관의 기준을 수립하고 인증을 주도하도록 허용함.
 - 규제 요건(예: EYFS framework)을 없애거나 완화하고, 온라인 품질 비교 웹사이트 및 학부모 감독을 통해 기준을 수립해 나가도록 함.
- 영국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협회(PACEY)는 정부의 전략 수립에 있어서 다음 세 가지의 핵심 영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함.
 - 가족 및 아동 지원 서비스의 통합 개선
 - 유아교육 및 보육 비용 지원 시스템 개혁
 - 유아교육 및 보육 인력 구축

-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pacey.org.uk/Pacey/media/Website-files/MyPACEY%20downloads/PACEY-full-response-IEA.pdf>

2022년 09월 01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ia-report-response/>

9. 잉글랜드 아동 위원, “보육을 위한 비전” 보고서 발표

- 10월 12일 영국 아동위원회 위원 Dame Rachel de Souza는 “보육을 위한 비전(A Vision for Childcare)” 보고서를 발표함. 본 보고서에는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이 직면한 과제를 담고있으며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에 대한 몇 가지 권장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유아교육 및 보육에 있어서 기관에 더 큰 역할 부여해야 함. 부모가 교육에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수업일을 연장하고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확대 제공을 위하여 학교를 개방하고 유아교육 및 보육 인력을 학교에 배치하도록 함.
- 아이돌보미 인원을 증원하고 그들이 유아교육 및 보육 시스템의 ‘선두’와 ‘중양’으로 위치하도록 함. 현재 교육기준청(Ofsted)은 아이돌보미의 질에 대해 충분한 확신을 하지 않고 있음. 대신 각 지역에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기관을 두어 부모와 관련 정보(돌봄 패턴, 보육 욕구 등)를 연결하고 있음.
- 보육비 시스템을 변경하여 잠재적으로 가족이 시간당 보육에 사용할 보육비에 관한 계정을 생성하도록 함. 또한 아동 발달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2세 유아 검사를 개선하기 위한 고유의 아동 식별자(identifier)를 도입하고 부모를 위해 육아휴직 시스템을 더욱 현대적으로 개선함.

2022년 10월 12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children%E2%80%99s-commissioner-in-england-publishes/>

10. 초기 아동의 발달을 위하여 1억 8천만 파운드 지원

- 영국 모든 지역은,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이해 향상과 강력한 리더십 기술 함양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 개발과 더불어, 아동의 초기 말하기, 언어, 수리 교육을 개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됨.
- 영유아 교사가 되려고 하는 졸업생과 유아 특수교육 코디네이터(SENCOs: 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s)로서 훈련을 원하는 교직원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될 것임.
- 연구자료에 의하면, 영유아교육에 대한 접근은 아동이 성인으로 성장하여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어 매우 중요함. 영유아의 취학 전 언어기술 향상은 그들의 생애 동안 최대 12억 파운드까지 경제적 이익을 산출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음.
- 3년 동안 최대 1억 8천만 파운드의 정부 자금이, 초기 아동 발달에 초점을 맞추어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에 지원될 것이며, 기존의 유아교육 및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의 고용과 유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임.
- 이는 부모가 적정 가격수준의 유연한 보육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보육 부문 개혁을 이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또한 약 9만 명 아동이 참여하였고, 아동의 말하기와 언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 NELI(Nuffield Early Language Intervention) 프로그램을 올해도 계속할 예정임.
- 교육부는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와 협력하여 '더 나은 건강 - 삶을 위한 시작(Better Health - Start for Life)'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하여, 0-4세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학령 전기 아동의 언어와 문해 능력 발달을 위한 실제적인 조언과 팁을 제공함. 또한 2023년 상반기에 도입 예정인 'Family Hubs'를 통해 부모들이 추가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임.
- 영국 전역의 미취학 아동에게 도움이 될 본 지원 사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됨.
 - PDP3(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me)를 통해 1만 명 전문가 양성을 위한 영유아기 수리, 언어, 사회성 발달 교육 훈련
 - 7,500개 유아교육 및 보육 기관과 아이돌보미에 대한 맞춤형 리더십 지원 제공을 위한 전문가 및 멘토 프로그램의 전국적 시행

- 대학원 수준의 전문가 양성 교육
 - 영유아기 리더십 국가자격 취득(NPQEYL: National Professional Qualification in Early Years Leadership)을 위한 전문가 양성 지원
 - 최대 5천 명의 특수교육 전문가(SENCOs: Special Educational Needs Coordinators)를 훈련
 - 18개의 Strong Practice Hubs의 새로운 네트워크
 - 새로운 보편적 온라인 아동 발달 교육 제공
 - NELI(Nuffield Early Language Intervention) 프로그램의 지속
- 이번 정부 자금 투자는 팬데믹 이후, 아동의 교육과 기술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지속적 과제를 수립, 시행하기 위함임.
- 정부는 초등학교 아동의 90%가 문해와 수리 능력의 기대 수준에 도달하도록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모든 청소년이 이러한 역량과 기술을 갖추고 학교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더욱 폭넓은 지원을 하고자 함.

2022년 10월 20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180-million-to-improve-childrens-development-in-the-early-year>

❖ 코로나19

1. 교육부, 아이돌보미를 위한 추가 지침 웹페이지 게시

■ 아이돌보미에 관한 추가 지침 웹페이지 게시

- 영국 교육부(DfE, Department for Education)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운영하는 아이돌보미에 관한 추가 지침을 웹페이지에 게시하였음.
- 아이돌보미의 가족 중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거나 밀접접촉자가 된 경우에, 아이돌보미가 숙지해야 할 사항과 아이돌보미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선택사항이 정리되어 있음.

- 지침 내용은 새로운 권고사항은 아니지만, 보육 제공자를 위한 행동 지침과 함께 열람하기 쉬운 웹 형태로 편집되었음.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협의회(PACEY,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Childcare and Early Years)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아이돌보미에게 최신의 권고사항과 행동 지침을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코로나19 관련 준수 요구 사항

- 지침과 별도로 교육부는 가정 내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가 있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양성 반응자가 적절한 별채에서 격리되어 있으면 본채에서 보육을 실시할 수 있음. 다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준수해야 할 요구사항을 제시함.
- 자가격리자는 격리 기간 중 언제라도 아이돌보미가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건물에 출입하지 않음. 확진자 또는 유증상자가 격리되어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은 거주하지 않음. 자가격리가 필요한 밀접접촉자는 보육 대상인 아동과 접촉하지 않음. 보육 시작 전 건물의 창문 개방을 포함하여 철저한 방역을 실시함.
- 자가격리가 실시되는 별채에는 자체 출입구가 있어야 하며 본채를 통해 접근하지 않도록 함. 개인이 별채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누군가가 그들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2022년 1월 13일

출처:<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dfe-publishes-specific-guidance-for-childminder/>

2. 현행 코로나 방역지침 '플랜 B' 종료 후 '플랜 A'로 복귀 발표

- 지난 1월 19일, 총리는 잉글랜드에서 오미크론 변종에 대한 임시 조치 해제와 함께 1월 27일부터 '플랜 A'복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플랜 B' 조치 종료를 발표함.
- 플랜 A 복귀 후 정부는 재택근무를 요구하지 않음. 고용주는 업무 현장 복귀에 관해 직원들과 협의해야 하며, 안전 근무 지침(Working Safely guidance)을 준수해야 함.
- 1월 27일부터 상점과 대중교통을 포함한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음. 정부는 밀폐된 장소나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 준수사항이 아닌 개인의 판단에 따르도록 함.

- 유아교육 기관 및 보육 시설 공동 구역에서의 마스크 착용 또한 권고사항이 아님.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보건 책임자가 임시 조치(예: 지역 발병)의 일환으로 공용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수 있음.
- 이러한 정부 방침 변경에 따라 영유아 보육 시설에 대한 교육부 지침 또한 업데이트 되었음. 본 지침에는 직원 부족과 출석 제한 상황에서 영유아 보육 시설 이용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됨.
- 우선 이용자는 핵심 근로자의 자녀 및 취약계층 영유아이며, 일부 영유아의 경우 법적 근거에 의해 공식적으로 취약계층에 속하지는 않으나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환경이라고 판단되면 지원해야 함.
- 다음으로 3, 4세 유아, 특별히 초등학교 입학 전 단계인 유아와 그 이하 연령의 영유아 우선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함.

2022년 1월 20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prime-minister-announces-a-return-to-plan-a/>

3. 보육시설, 더 이상 코로나19 확진 사례 보고할 필요 없음

- 교육부는 2022년 2월 21일부터, 각 보육기관에서 더 이상 해당 시설의 코로나19 확진 사례(영유아, 교직원 모두)를 교육기준청(Ofsted) 또는 등록된 아이돌보미 에이전시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결정함.
- 이는 해당 시설에 재원하는 영유아 및 교직원, 아이돌보미의 세대 구성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에 적용됨. 또한 지난 14일 동안 발생한 확진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보고할 필요가 없음.
- 그 외 심각한 중증 질병 사례를 보고하는 것은 EYFS(Early Years Foundation Stage) 법률 규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으로 남아 있음. 그러므로 신고대상 중증 질병이 발생하면 어떤 경우여라도 14일 이내에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해야 함.

- 일부 지자체는 여전히 코로나19 확진 사례를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므로 보육시설에서 확진자 발생할 시 해당 지자체에 연락을 취하여 보고가 필요한지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2022년 2월 21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childcare-providers-no-longer-required-to-tell-ofsted-about-confirmed-covid-19-cases>

4. 코로나 시기, 보육에 관한 연구 결과 발표

- 2월 23일에 코로나 시기의 보육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웨비나가 개최됨. 본 웨비나에서 연구팀은 최종보고서인 'Essential, but undervalued: early years staff and famil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을 발표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직면한 도전들과 잉글랜드와 웨일즈 유아교육 및 보육의 미래를 위한 기회에 관하여 논의함.
- 'Childcare During Covid-19'이라는 이번 연구 프로젝트는 잉글랜드와 웨일즈의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에 미친 팬데믹의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 수립된 연구임. 이 연구는 팬데믹이 보육부문에 제기한 다양한 과제와, 실무자와 가족에게 제공된 다양한 지원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함.
- 이 연구 프로젝트는 코로나19에 관한 UK Research & Innovation의 신속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Council(ESRC)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연구의 목표는 코로나19가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였는지 탐구하고, 보육시설과 학부모들이 어떻게 이러한 혼란을 대처하였는지 그리고 이것이 유아교육 및 보육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임.
- 보고서 원문은 다음 웹사이트에서 볼 수 있음.
(<https://childcare-during-covid.org/final-report-essential-but-undervalued-early-years-care-education-during-covid-19/>)

2022년 2월 10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join-the-launch-of-the-final-%E2%80%98childcare-duri/>

5. 영국 정부, 워드 코로나(Living with COVID)를 위한 지침 발표

- 영국 정부는 4월 1일부터 워드 코로나(Living with COVID-19)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변경사항을 발표함. 잉글랜드 전역에서 코로나 검사에 관한 새로운 권고사항과 함께 워드 코로나에 관한 지침이 시행될 예정임.
- 잉글랜드 전역에서 일반 대중을 위한 무료 검사는 4월 1일자로 종료되며, 이제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종사자들이 더 이상 무료 테스트 키트를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함.
- 다만 특정 대상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 또는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 에 관하여는 무료 검사가 가능함. 이 대상은 무증상이어도 검사를 계속할 수 있는데, 이들에게는 별도 통지될 예정이며 테스트 키트를 사용할 수 있음.
- 4월 1일부터 시행될 공중보건 지침에 의하면 잉글랜드 거주자 중 코로나를 포함하여 호흡기 감염과 고열 증상이 있는 자, 또는 몸이 불편한 자는 정상 체온으로 돌아오고 충분히 나아졌다고 느낄 때까지 집에 머물르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함.
- 또한 몸이 좋지 않거나 고열인 아동은 열이 내리고 충분히 나아졌다고 느껴질 때까지 집에 머물면서 교육 또는 보육시설에 등원하지 말 것을 권고함.
-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난 경우, 전염성이 강한 5일 동안 집에 머물면서 다른 이들과의 접촉을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단 아동(학생)의 경우, 바이러스 전염 기간과 학업에 대한 지장을 고려하여 격리 권고 기간을 3일로 단축함.
- 코로나 상황이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으나, 여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대응 조치를 취하는 데에 자신감을 가져야 함. 이것은 보육시설에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청소 절차를 마련하며, 감염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위한 공중보건 지침을 따르는 것을 의미함. 만약 본인, 가족, 또는 시설의 영유아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을 경우 별도의 지침을 따라야 함.

2022년 03월 31일/2022년 03월 29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government-publishes-next-steps-for-living-w/>

<https://www.gov.uk/government/news/government-sets-out-next-steps-for-living-with-covid>

6. 교육부, 아이돌보미 멘토 프로그램 개설

- 교육부는 코로나 팬데믹이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전문가 및 멘토 유아기 코로나19 회복 프로그램(Experts and Mentors Early Years COVID-19 Recovery Programme)”을 지원하고 있음.
- 자격요건을 갖춘 유아교육 및 보육 실무자와 기관은 실무자를 위한 리더십 서포트, 코칭, 멘토링이 포함된 맞춤형 지원(대면, 비대면 모두)을 개인의 요구에 따라 신청 할 수 있음.
- 교육부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잉글랜드 전역의 아이돌보미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함. 이러한 아이돌보미 멘토 프로그램은 취약하고 어린 영유아에게 미친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지원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아이돌보미는 최소 3년 경력을 지닌 유경험 실무자로부터 지원을 받게 되며 전액 무료임.
- 또한 해당 지역의 다른 아이돌보미, 교육부, 지자체, 그 외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임.
- 교육부 아이돌보미 멘토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려면 아이돌보미는 반드시 현재 0~5세 영유아(최소한 한 명)에게 보육을 제공하고 있는 중이어야 함.
- 교육부는 아동청소년 및 가족 관련 사업 컨설팅 기관인 Hemsall's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Hemsall's에서 멘토와 아이돌보미를 연결 및 지원하고 멘토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음.
- 2023년 5월부터 2023년 여름학기 지원 대상 아이돌보미를 모집 중에 있으며, 개인 단위 또는 다른 아이돌보미와 함께 소그룹(최대 4명)으로 신청할 수 있음.

2022년 12월 21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dfe-childminding-experts-and-mentors-program/>

<https://www.hemsalls.com/covid-recovery-childminders>

7. 교육기준청(Ofsted) 연차 보고서: 아동의 교육 및 돌봄 인력 부족으로 인해 더더 지고 있는 팬데믹 회복

- 교육기준청(Ofsted)의 2022년 연차보고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교육과 아동복지가 어느 정도 회복되었는지에 대한 기술하고 있음. 유아교육 및 보육 관련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본 보고서는 2021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학년도를 담고 있으며, 학년도 시작 당시 교육 및 사회복지 제공자들은 팬데믹의 가장 최근 영향을 다루고 있음. 시설이 문을 닫고 에너지 위기와 생활비 압력이 심해지면서 교육 및 사회복지 부문이 더욱 어려워지고 두 분야의 회복탄력성이 시험대에 오르게 됨.
- 보고서는 인력 및 자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또는 악화되고 있는, 그리고 팬데믹 이후 남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교육 및 돌봄의 여러 이슈들을 강조하고 있음.
- 교직원 부족으로 인하여, 교육과 보육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동은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음. 교육 및 사회복지 부문이 미래 도전적 상황들에 직면하여 회복력을 가지려면 교직원 고용 및 유지에 관한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
-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은 더 높은 급여와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는 다른 고용과의 경쟁에서 지고 있음. 따라서 보육시설은 경험이 풍부한 양질의 경력 직원을 채용하거나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문을 닫고 있음. 일부 시설에서는 고용 격차를 메우기 위해 실습생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는데, 이는 교육과 보호의 질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음.
-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은 아동에게 지속되고 있는데, 특히 말하기 및 언어 지연, 개인적·사회적·정서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교육기준청은 등록된 보육시설/제공자 수가 감소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음. 이는 주로 아이돌보미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점차 다른 유형의 시설 폐쇄도 증가하고 있음.
- 교육기준청에 등록된 유아교육 및 보육 제공에 대한 평가에서 '우수' 또는 '매우우수'로 평가받은 비율이 2019년 89%에서 2022년 8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22년 12월 13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news/ofsted-annual-report-pandemic-recovery-slowed-by-workforce-crisis-in-childrens-education-and-care>

❖ 기타

1. 지속가능성과 기후 변화: 교육 및 아동 서비스 체계를 위한 전략

■ 지속가능성과 기후 변화 전략

- 4월 21일 교육부는 정책 보고서를 통해 새로운 ‘지속가능성과 기후 변화 전략(Sustainability and Climate Change Strategy)’ 출범을 발표함.
- 본 전략은 영국이 2030년까지 “지속 가능성 및 기후 변화에 있어 세계 최고의 교육 부문”이 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 네 가지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함.
 - 1) 변화하는 세상을 위한 교육과 기술의 우수성: 학습과 실천적 경험을 통해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세상에 대해 모든 아동, 청소년을 준비시킴.
 - 2) 탄소중립(Net Zero): 교육 및 보육 시설에서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법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혁신을 주도하며, 아동, 청소년이 탄소중립 실천에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
 - 3) 기후 변화에 대한 회복력: 기후 변화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 교육 및 보육 시설 건물과 시스템을 개선함.
 - 4)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생물다양성 향상, 대기 질 개선, 교육 및 보육시설 내 그리고 주변의 자연환경에 대한 접근과 연결을 확대함.
- 교육부는 지속가능성의 모든 측면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영역은 환경 발자국(Environmental Footprint, 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을 줄이는 것이며, 특히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임. 이러한 정책들은 지속가능성의 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속가능성의 사회적, 경제적 측면과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 고려하여 시행될 것임.
- UK 정부와 위임 정부(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는 기후 행동에 함께 힘을 모을 것이며 국제적 실천에 협력하기로 함. 이번에 수립된 목표와 전략은 영국과 관련이 있음. 이는 네 가지 전략적 목표와 포괄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단기, 중장기 실천을 포함하고 있음.

-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에 관해서는, 기후변화와 환경 인식이 있는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만 이는 주로 공립 보육시설에 관한 것으로서 아이돌보미를 포함하여 민간, 자발적, 독립 보육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었음.
- 정부는 새로운 기회, 과학적 업데이트, 증거 및 데이터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실천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할 예정임. 이번 정책보고서에는 비전과 목표를 비롯하여 실천영역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음.

2022년 04월 21일

출처: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sustainability-and-climate-change-strategy/sustainability-and-climate-change-a-strategy-for-the-education-and-childrens-services-systems>

2. 교육기준청(Ofsted), 새로운 5개년(2022-2027) 전략 발표

■ 교육기준청(Ofsted) 5개년 전략

- 지난 4월 26일 잉글랜드 교육기준청(Ofsted)은 앞으로 5개년(2022-2027) 간 초점을 맞출 주요 핵심 영역을 설정한 5개년 전략을 발표함. 교육기준청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영국 아동, 청소년을 지원하는 '기준을 향상하고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음.

■ 생의 초기에 대한 초점

- 팬데믹으로 인해 영유아들의 학습, 삶의 질, 발달의 혼란을 야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출발(The Best Start in Life)'이라는 제목의 섹션에서 유아기를 우선순위로 설정함. 이 일환으로 교육기준청은 유아교육 및 보육 인력을 위한 '전문 훈련'을 개발할 예정임.

■ 돌봄 규정

- 교육기준청은 돌봄종사자(Childminders)의 노동에 대한 부담과 압박을 완화하고 돌봄종사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관련 규제의 간소화를 검토하고 있음. 유아교육 및 보육 전문가 협회(PACEY)는 이러한 제안에 대해 교육기준청 및 교육부와 예비 토

론을 여러 차례 진행해 오고 있음. 이 제안은 EIF(Education Inspection Framework)의 리더십 및 관리 요구사항을 통해, 돌봄종사자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더욱 쉽게 입증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규정에 관한 제안된 변경사항은 섹터 대표 및 실무자의 피드백이 포함된 협의 절차의 대상이 됨.

■ 증거 및 연구

- Ofsted는 조사 및 최신 연구에서 수집한 증거를 사용하여 관행을 개선하고 정부의 정책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자세한 내용은 다음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fsted-strategy-2022-to-2027/ofsted-strategy-2022-27>

2022년 04월 24일

출처: <https://www.pacey.org.uk/news-and-views/news/news-ofsted-publishes-its-five-year-strategy/>

3. 5세 미만 아동에 관한 왕립 재단의 새로운 연구 결과 발표

- 왕립재단 영유아센터(Royal Foundation Center for Early Childhood)는 유아기 발달에 관한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함. 영유아센터와 케임브리지 공작부인은 유아교육 및 보육 부문 장관, 고위 공무원이 참석한 원탁회의를 주관하여 연구결과와 연구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함.
- 왕립재단 영유아센터가 위탁하여 Ipsos UK가 수행한 이번 조사는, 왕세손비의 획기적인 설문조사인 '5세 미만 아동에 대한 5가지 중요한 질문(5 Big Questions on the Under-Fives)' 이후 2년 만에 실시된 조사임. 본 연구에서 한 달 동안, 500,000개 이상의 응답을 끌어내면서 유아기 아동에 관한 전국적인 관심을 촉발함.
- 발표된 연구결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유아기의 우선순위, 생애 첫 5년과 정신 건강 및 웰빙에 관한 전 생애와의 연관성, 자녀 양육 시 부모가 원하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면서 유아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실시함.

-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음.

- 사회적 이슈: 어린 시절이 한 사람의 미래 삶을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대다수가 동의(91%)했지만, 단지 17%만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0~5세 시기의 고유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음.
- 정신 건강 및 웰빙: 응답자의 절반 이상(55%)이 개인의 미래 정신건강 및 웰빙이 유아기 발달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이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는 능력(51%), 그리고 그들의 미래 행복(40%) 순으로 나타남.
- 지원 공동체: 비형식적인 지원은 부모를 위한 핵심 지원 메커니즘이며, 0~5세 자녀를 둔 부모의 절반 이상(56%)이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관한 정보의 주요 출처로 가족이나 친구를 언급함.
- 정보 및 조언: 부모는 사회적(21%) 정서적 발달(23%)보다 자녀의 신체 건강(예: 영양 35%, 예방 접종 34%, 건강 33%)에 관한 정보와 조언을 찾을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2022년 06월

출처: <https://www.ipsos.com/en-uk/seven-ten-people-say-early-years-should-be-more-priority-society>

스웨덴

양육지원		
1	가족법 및 부모지원국에 양육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주정부 보조금을 알릴 임무 부여	139
2	스웨덴 정부의 아동돌봄 조사: 부모수당 지원 범위 증대 제안 등	139
3	자녀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가정에 대한 추가 수당 확대 제안	140
4	양육 지원 접근성 강화	141
유아교육·보육		
1	더 많은 아동의 유치원 입학	142
2	스웨덴에서의 우크라이나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상황	143
3	교육부 장관 Anna Ekström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교육 장관 회의에 참석	144
4	학교의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강력한 조치	145
5	학교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속적 전략	146
6	스웨덴 문화 위원회와 교육청의 유치원내 소리 내어 읽기에 대한 공동 투자	147
7	사회민주당의 유치원 내 언어능력 요건 도입	148
8	스웨덴 학교에 등록된 우크라이나 아동의 비율	148
9	학교 내 지식향상, 보안 및 평화로운 학업분위기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149
임신·출산지원		
1	출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많은 노력	151
코로나19		
1	학교 및 유치원 휴교 시 보상 가능성의 확대	152
2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교육의 가능성 폐지	153
3	방학 중 학교(lovskola)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임시 규칙 연장	153
기타		
1	국제적인 상황에서의 육아에 대한 평등한 규칙	154
2	공공아동재단은 스웨덴 아동 폭력 발생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3백만 코로나 지원 받음	155
3	보호자 동의 없이 지원 조치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	156
4	학교 안전 개선 방안 대한 조사 발족	157

☞ 양육지원

1. 가족법 및 부모지원국에 양육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주정부 보조금을 알릴 임무 부여

- 정부는 가족법 및 부모 지원국에 양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국가 보조금에 관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알리는 임무를 부여하기로 결정함. 임무의 목적은 지방자 단체가 양육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일반 주 보조금에 자금이 따로 배정되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함 임.
- 사회부 장관인 Lena Hallengre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부모가 양육기술 및 자녀와 부모 간의 관계 강화를 목표로 하는 양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 양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지원국에 국가 보조금에 관한 정보를 알릴 임무를 위임한다.”
- 국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부모에게 유아기와 청소년기에 초점을 맞춘 양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2022년에 일반 주 보조금을 1억크로나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함. 일반 주 보조금은 지방자치 단체에 자동으로 지급되며, 보조금은 특정 목적에 할당되지 않음.
- 가족법 및 부모 지원국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부모, 특히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뢰가 낮은 부모에게 연락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임. 또한 임무에 2023년 초에 당국이 보조금이 양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증가시켰는지 여부와 방법에 대한 후속 조치가 포함됨.

2022년 03월 25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3/myndigheten-for-familjeratt-och-foraldraskapsstod-ska-informera-om-statsbidrag-till-foraldraskapsstodprogram/>

2. 스웨덴 정부의 아동돌봄 조사: 부모수당 지원 범위 증대 제안 등

- 스웨덴 정부의 특별 수사관인 Marika Lindgren Åsbrink는 아동돌봄 조사 최종 보고서를 사회 보험 장관 Ardalan Shekarabi에게 제출함.

- 사회보험부 장관인 Ardalan Shekarabi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족 지원의 핵심이다. 아동돌봄 조사의 임무는 광범위하고, 사회보험부는 조사관들의 정책 제안을 고대하고 있다”
- 본 조사에서는 현재보다 더 많은 상황에서 임시 부모수당에 대한 권리를 부여할 것을 제안함. 예를 들어, 아동의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학교회의에 참석하거나, 사회서비스 조사에 참여할 경우, 부모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임. 또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16세에서 18세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연령 범위를 늘릴 것을 제안함.
- 또한 본 조사는 새로운 혜택 기간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즉, 1년에 40일 이상 아동 돌봄을 사용한 부모는 본 혜택이 지속적인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조사에서는 불법 수급을 제한하고, 불필요한(부정확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제안함. 무엇보다 보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증명서를 조기에 제출해야 하며, 사립 유치원과 학교에도 아동 결석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화를 제안함.

2022년 06월 03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6/vab-utredningen-overlamnar-sitt-slutbetan-
ande/](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6/vab-utredningen-overlamnar-sitt-slutbetan-
ande/)

3. 자녀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가정에 대한 추가 수당 확대 제안

- 스웨덴 사회부는 주택수당을 받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한 한시적 추가수당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추가수당의 목적은 자녀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가정들이 높아진 물가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임.
- 노인사회보험부 장관 Anna Tenje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경제상황과 전기, 연료 및 식품 물가 인상과 함께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이미 재정적으로 취약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12월 종료 예정인 추가 수당을 6개월 연장하고자 한다.”

- 주택 수당을 받는 자녀가 있는 가정은 주택수당을 받지 않는 다른 가정보다 사회 보험 및 기타 복지 시스템 기여금에 더 많이 의존하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부양비 부담이 높은 집단임.
- 무엇보다도 경제적 상황은 이미 많은 가정의 지출을 크게 늘렸거나 지출이 증가할 위험이 있도록 기여하였으며, 특히 전기, 연료, 식량 물가가 상승하였음. 주택 수당은 재정이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고, 재정적으로 취약한 자녀가 있는 가정에 추가 지원을 제공함.
- 수당은 별도의 신청 없이 예비주택수당 규모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최대 수당은 월 SEK 1,325 크로나 임. 추가 보조금을 연장하고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적용할 것을 제안함.

2022년 10월 21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10/forlangning-av-tillaggsbidrag-for-ekonomisk-utsatta-barnfamiljer-foreslas/>

4. 양육 지원 접근성 강화

- 더 많은 아동이 밝고 안전한 미래를 누리기 위해, 아동 권리 및 건강에 대한 지식, 부모 간 유대 강화 등의 양육능력을 강화하는 양육지원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해 짐. 따라서 가족법 및 양육지원 당국은 정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지역 및 기타 관련 행위자들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준비하고 있음.
- 목표는 부모가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예방에 기여하고, 지원에 대한 평등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임.
- 사회복지부 장관(Camilla Waltersson Grönvall)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정부는 아동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부모의 양육능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더 많은 아동이 밝고 안전한 미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험에 대한 예방은 정부의 최우선 순위이며, 스웨덴의 어떤 어린이도 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 가족법 및 양육지원 당국은 양육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지역 및 기타 관련 행위자들에게 국가 보조금을 분배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 것이며, 보조금은 두 가지 방향에 따라 분배될 것임.

- 지원이 필요한 모든 부모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양육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평등을 기함.
- 아동과 청소년의 범죄를 예방함.
- 당국은 국가보조금 처리를 위한 예산과 계획은 물론, 국가보조금 결과를 추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임무는 2023년 3월 15일까지 정부에 보고되어야 함.

2022년 12월 22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12/starkt-tillgang-till-foraldraskapsstod-i-hela-landet/>

❖ 유아교육·보육

1. 더 많은 아동의 유치원 입학

- 스웨덴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아동과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아동의 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실정임. 정부는 법률위원회의 심의 요청서에 더 많은 아동이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임.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것이 제안 사항 중 하나임.
-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활동을 통해,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제안함. 자치단체는 유치원의 목적과 아동의 권리에 대해 알려야 하며, 아동이 만 3세가 되는 해 가을 이전까지는 아동의 보호자와 첫 연락이 이루어져야 함.
- 교육부 장관 Lina Axelsson Kihlblom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모든 아이들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조기 개입이 중요하며, 유치원 과정을 수료한 아이들이 학교를 시작할 준비가 더 잘 되어 있다. 모든 아동 청소년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은 사회와의 분리를 줄이고 친사회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중요한 조치이다.”
- 스웨덴에 단기간 거주한 아동일 경우, 보호자가 유치원 배정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유치원 배정을 받아야 함. 지방자치단체들은 또한 언어 발달을 위해 유치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도 적극적으로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 스포츠 담당 통합 및 이민부 장관 Anders Ygeman은 다음과 같이 전함. “더 많은 아이들이 유치원에 입학하는 것은 통합을 위해 중요하다. 이것은 정부가 인종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 이 법의 수정안은 2022년 7월 1일에 발효되고, 2023년 7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교육에 적용되도록 제안됨.

2022년 01월 26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1/fler-barn-ska-borja-i-forskolan/>

2. 스웨덴에서의 우크라이나 아동 및 청소년의 학교 상황

- 교육청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동과 청소년을 가장 많이 수용한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학교 교장과의 면담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동과 청소년 중 소수만이 스웨덴 학교에 등록하였음이 밝혀짐. 이에 따라 교육청은, 많은 우크라이나 아동, 청소년을 수용한 21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 고등학생보다 초등학생의 비율이 더 높음.
- 교육청 비서실장 Katarina Tiväng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수치로 인해 몇 명의 교장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실정임. 따라서 데이터를 스웨덴 이민 위원회의 통계와 비교할 때 주의해야 하며, 이번 조사를 하나의 지표로 봐야 함.”
-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보다 초등학교에 등록하는 아동의 비율이 더 높음. 또한 우크라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원격으로 공부하는 아동과 청소년도 있음.

■ 지속되는 불안과 교직원의 부족은 학교의 과제임.

- 조사에 참여한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관련 언어 능력을 갖춘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고 응답함.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과제는 교직원 부족과 학교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원 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임.

■ 우크라이나 가정에 다가가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

- 일반적으로 스웨덴 학교는 아동 돌봄을 위한 지식과 자원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지금 당면한 과제는 우크라이나 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것임. 교육청은 우크라이나 아동과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교육청은 스웨덴 학교에 등록하고 적응하는 방법을 우크라이나 언어로 번역하고, SNS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른 당국 및 기관과 협력하고 있음.

2022년 05월 23일

출처: <https://www.skolverket.se/om-oss/aktuellt/nyheter/nyheter/2022-05-23-lagesbild-skolsituationen-for-barn-och-unga-fran-ukraina>

3. 교육부 장관 Anna Ekström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교육 장관 회의에 참석

- 4월 5일 교육부 장관 Anna Ekström은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유럽연합 회의에 참석함. 의제는 고등교육에 대한 유럽 협력, 교사 이동성 개선 및 위기관리 강화를 포함함.
- 본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효과적인 유럽 협력을 위한 다리 건설에 대한 이사회의 권고를 이행할 것임. 이 제안은 포용, 질, 다양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위한 국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또한 장관들은 유럽의 미래를 위한 고등교육 기관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됨.
- 교육부 장관 Anna Ekström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유럽연합 협력은 스웨덴의 경제, 복지 및 기술 공급의 핵심임. 스웨덴 정부는 고등교육이 국제적 성격을 강하게 가져야 하고 이동성을 증가해야 한다고 생각함. 이것이 우리가 함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고 녹색 전환을 구현할 수 있는 핵심임.”
-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안건은 교사와 교육자의 이동성을 개선하는 것임. 장관들은 교사, 교육자 및 학교 지도자의 유럽 내 이동을 단순화하는 것을 논의할 것임. 유럽 내 이동성은 개인 및 학문적 발전에 기여하고, 교사의 전문성 훈련과 교육적 지식을 향상시키며, 교사라는 직업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장관들은 유럽 내 교육 지역의 위기관리 및 계획 강화에 대한 정책토론을 개최함. 논의의 배경은 팬데믹이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팬데믹으로 인한 교육기관 폐쇄가 아동과

청소년의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동, 청소년, 교사에게도 큰 타격을 줌. 장관들은 무엇보다도 위기에 대응하는 교육 시스템의 수용력에 대한 교훈을 논의할 것임.

2022년 04월 04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4/anna-ekstrom-deltar-vid-utbildningsministras-radsmote-i-luxemburg/>

4. 학교의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강력한 조치

- 모든 아동은 성인이 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받아야 함. 그러나 오늘날의 시스템은 이익 추구, 학생 만족도 등급을 위해 조작되고 있음. Magdalena Andersson 총리는 “학교의 민주적 통제를 회복하기 위한 세 가지 강력한 조치”를 발표함. 세 가지 조치는 학교에서의 이익 창출 금지, 종교 사립학교 신설 금지, 공통 입학 시스템 도입임.
- Magdalena Andersson 총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학교 교실에 질서가 있듯이, 스웨덴 학교 시스템에도 질서가 있어야 함. 학교는 이익 추구나 종교적 영향력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동의 학습에 초점을 맞춘 곳이어야 함. 정부는 학교 내에서의 이익창출과 부적절한 학교운영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의 조치들을 취할 예정임.”

■ 비영리 학교(En skola utan vinstintresse)

- 학교에서의 이익 창출은 부적절한 운영자들이 학교 시스템에 참여하여 부적절한 방법으로 학교를 운영하게 할 동기가 됨. 이익 창출은 학교사업의 주요한 지출 비용을 절감 하려고 하고,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만족도 등급을 조작할 위험이 있으며, 이는 공정성을 악화시킴.
- 정부는 학교의 수익 창출을 금지하기 위해, 현재, 학교에 배정된 자금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예산사용 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 종교 사립학교 설립 중지(Stopp för nyetablering av konfessionella friskolor)

- 정부는 2024년부터 종교 사립학교 신설을 금지시킬 예정임. 기존의 종교 중심의 사립학교와 방과후 시설은 계속 운영할 수 있으나 확장은 불가능함.

■ 투명성과 법질서를 높이기 위한 학교 입학시스템(Gemensamt skolval för ökad öppenhet och rättssäkerhet)

- 정부는 학교 선택안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국립교육청은 학교 입학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음.
-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선택에 대한 국가 차원의 규정이 없음. 각 학교 교장의 재량에 따라 절차를 만들 수 있으며, 이는 동등성, 공정성을 감소시키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 학교 입학시스템은 투명성과 법질서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시스템은 학교 배치 절차를 간소화할 것이고, 학교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Magdalena Andersson 총리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학교 선택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학생은 학교를 선택할 수 있지만, 학교는 학생을 선택할 수 없어야 함. 공동의 입학시스템은 투명성을 높이고 입학 대기 비리를 줄일 것으로 기대됨.”

2022년 07월 3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7/forbud-mot-vinstuttag-stopp-for-nya-religiosa-friskolor-och-nationellt-skolval-for-att-aterta-den-demokratiska-kontrollen-over-skolan/>

5. 학교의 디지털화를 위한 지속적 전략

- 스웨덴 정부는 ‘2023-2027년 학교 시스템에 대한 국가적인 디지털화 전략’을 개발하도록 국립교육청에 의뢰함. 본 전략은 유치원과 학교에서 더 높은 목표 달성과 평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화 전략’은 올해(2022년) 만료됨. 디지털화의 가능성을 활용하고 아동과 학생에게 동등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시스템이 공동의 방향을 기반으로 협력하여 발전해야 함. 정부에 따르면, 학교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위한 공동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정부는 ‘2023-2027년 학교 시스템에 대한 국가 디지털화 전략’을 국립 교육청에 의뢰하였음. 이 전략은 목표 달성과 평등 향상에 기여해야 하며, 아동 및 학생의 연령 및 기술과 관련된 교육 개발을 위한 디지털화의 가능성과 어려움들을 고려해야 함. 또한, 임무에는 디지털 도구를 사용할 때 낮은 연령의 아동이 겪는 어려움과 위험을 특별히 고려하여 디지털화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음.

- Lina Axelsson Kihlblom 교육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모든 아동과 학생은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미래의 기술 공급을 위한 기반이 됨. 디지털 도구는 목적이 있어야 하고, 사용자 친화적이어야 하며 유치원 및 학교 운영에 적합해야 함. 교사는 아동의 학습을 강화하기 위해 언제, 어떻게 이러한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지식과 권한을 가져야 함.”

2022년 07월 4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7/fortsatt-strategi-for-skolans-digitalisering/>

6. 스웨덴 문화 위원회와 교육청의 유치원내 소리 내어 읽기에 대한 공동 투자

- 스웨덴 문화위원회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한 ‘유치원, 도서관에서 그리고 집에서 함께 읽기!’ 자료를 전국 유치원에 배포함. 본 자료는 소리내어 읽기에 대한 영감을 주기 위해 제작됨.
- SOM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스웨덴 아동의 독서량이 증가하였으나, 동시에 가정과 유치원에서 아동에게 소리내어 책 읽어주는 활동은 감소함.
- 문화 위원회 부서장인 Lotta Brilioth Biörnstad는 다음과 같이 언급함. “소리 내어 읽기는 가정과 유치원에서 아동에게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이다. 소리내어 읽기는 모든 언어, 읽기 및 쓰기 발달의 기초를 제공한다.”
- 이 자료는 소리내어 읽기와 글자 및 그림에 관한 것이고, 유치원에서 읽기 활동을 실행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포함되어 있음.
- 교육청의 교육고문인 Tammi Gustafsson Nadel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우리는 이 자료가 전국의 유치원에서 소리내어 읽기 활동에 대한 새로운 방법에 영감을 주길 바란다. 또한 아동의 언어 발달을 자극하고 아동에게 문학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란다.”
- 교육청과 문화위원회 간의 협력으로 수행되는 읽기 촉진을 위한 여러 노력들 중 하나로, 두 당국은 아동과 청소년의 독서를 촉진하기 위한 활동가를 모집하고 조정함.

2022년 08월 24일

출처: <https://www.skolverket.se/om-oss/aktuellt/nyheter/nyheter/2022-08-24-kulturradet-och-skolverket-i-gemensam-satsning-pa-hoglasning-i-forskolan>

7. 사회민주당의 유치원 내 언어능력 요건 도입

- 스웨덴 사회민주당은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언어능력 요건을 도입하고자 함. 스웨덴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교직원은 근무시간 동안 언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언어능력을 확인할 예정임. 언어교육 필요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이 아닌, 관리자의 확인을 통해 결정할 예정임.
- Magdalena Andersson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힘. “유치원의 아동이 스웨덴어를 구사하는 교직원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아동 스스로 언어를 배워야 한다.”
- 더불어 유치원에 근무하는 아동교육 및 보육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교직원은 교육을 받아야 함.
- 2020년, 노인 요양 부문 직원을 위해 시작된, 이른바 노인 돌봄 프로젝트와 동일하게, 유치원 교직원은 전문성 교육 및 언어 교육을 근무시간(유급) 중에 받아야 함. 또한 고용주는 교직원이 교육받는 시간에 대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022년 08월 14일

출처: <https://arbetet.se/2022/08/23/s-vill-infora-sprakkrav-i-forskolan/>

8. 스웨덴 학교에 등록된 우크라이나 아동의 비율

- 교육청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6-17세 우크라이나 아동의 5명 중 4명은 스웨덴 학교에 다니거나 지원한 적이 있음. 총 6,100명의 우크라이나 아동이 학교에 다니고 있음.
- 교육청 소장 Peter Fredriksso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많은 우크라이나 아동이 스웨덴 학교에 다니는 것은 긍정적이다. 학교는 지식 뿐 만 아니라 사회 안전망,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 및 학교 내 학생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 설문 조사에 응답한 지방자치단체의 약 2/3가 더 많은 우크라이나 아동과 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여 짐.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은 초등학교에서 우크라이나어 또는 러시아어를 구사하거나 기타 관련 언어 능력을 갖춘 교사 또는 기타 직원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응답함.

- 교육청 소장 Peter Fredriksson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실제보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 아동이 스웨덴으로 이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아동의 초기 정착이 있은 후, 학교에서의 우크라이나 학생 수용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없었다.”고 언급하였음.
- 지난 5월, 교육청은 당시 우크라이나 학생을 많이 수용한 21개 지방자치단체의 초등학교에 약 1,200명의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등록했다고 보고함. 9월 1일, 해당 지자체의 학생 수는 약 2,000명으로 증가함. 5월과 9월 사이에 해당 지역들에 등록된 학생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조사결과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교육청의 설문조사는 전국 290개 지방자치단체들을 대상으로 행해졌으며, 258개 지자체가 응답함. 응답률은 89%임.
 - 조사의 목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피해 스웨덴으로 도망친 6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과 청소년 중 스웨덴 초등 또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수를 파악하는 것임. 또한 유치원 및 중고등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조사 결과는 스웨덴 이민청의 통계(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스웨덴에서 수용한 우크라이나 아동의 수)와 비교분석함. 스웨덴 이민청 통계와 비교하는 것은 약간의 불확실성을 수반하는데, 이는 스웨덴 이민청이 등록한 인구수가 반드시 지방 자치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실제 수와 일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임.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학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아동의 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사 결과는 현재 상황에 따라 고려되어야 함.

2022년 10월 04일

출처: <https://www.skolverket.se/om-oss/press/pressmeddelanden/pressmeddelanden/2022-10-04-storandel-ukrainska-barn-inskrivna-i-svensk-skola>

9. 학교 내 지식향상, 보안 및 평화로운 학업분위기 증진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스웨덴 정부는 2023년 예산 법안에서 학교에 약 16억 SEK코로나의 투자를 제안함. 이 기금은 학교내의 학업의 질과 지식 향상, 보안 및 평화로운 학업분위기 증진, 조기 지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함.

- 교육의 질과 동등성의 강화: 커리큘럼에 따라 개발된 고품질 학습 자료는 교육의 질에 도움이 되고 교사의 업무량을 줄여 줌. 정부는 고품질 학습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에는 예산 SEK 6억 8,500만 크로나를 별도로 배정하고, 2024년부터 매년 SEK 5억 5,500만 크로나의 예산을 제안함.
- 정부의 목표는 학교 감독관의 임무를 보호하고 강화하는 것임. 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학교 감독관이 감독 및 검토 내에서 계속하여 감독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2023년부터 학교 감독관의 보조금을 연간 SEK 800만 크로나를 추가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함.
- 특수 교육 학교 당국에 의하면, 정부는 특수학교의 최고 책임자임. 무엇보다도 교사 급여 인상과 특수학교 내의 학생 수 증가로 인한 당국의 비용을 충당하고, 학교 내 기타 노력들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정부는 당국의 행정 지출을 2023년에 SEK 1000만 크로나, 2024년에 SEK 2000만 크로나, 2025년부터 매년 SEK 3000만 크로나의 증가를 제안함.
- 더 많은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특수교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제안함. 이는 교장이 특수교육 그룹을 구성할 가능성을 강화하고, 특수 교육 노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이를 위해 정부는 2023년에 SEK 6억 크로나, 2024년에 SEK 9억 크로나, 2025년에 SEK 10억 크로나의 예산을 추산함.
- 또한 정부는 저학년 아동에게 방학 학교를 제공하기 위해, 2023년까지 방학 학교에 대한 국가보조금 할당을 SEK 1억 크로나까지 늘릴 것을 제안함.
- 아동 및 학생의 언어, 읽기 및 쓰기 발달은 모든 학교 과목 학습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소임. 따라서 정부는 문해교육을 위해 2023년에 SEK 500만 크로나를 따로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2024년에 SEK 3000만 크로나, 2025년부터 SEK 1800만 크로나의 예산을 추산함.
-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 집중하고, 학교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함. 따라서 최소 성적 기준에 쉽게 충족하며, 재능있고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학습 개발에 더 도달할 수 있도록 지도와 자극을 받아야 함. 그리하여 정부는 초·중등학교 내 최고 교육 프로그램들을 전국적으로 모집하여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연속성과 확대에 대비할 계획임. 정부는 선진 교육의 창출과 질을 향상하기 위해 기금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며, 이 제안에서 2023년에SEK 2,500만 크로나, 2024년부터 SEK 5,000만 크로나의 예산을 추산함.

- 유능하고 질 높은 유치원 및 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높은 성취 목표 달성과 학교 운영의 질이 향상됨. 따라서 정부는 유치원 및 학교 교사의 추가 교육을 위해 2023년에 SEK 5천만 크로나의 예산을 별도 배정할 것을 제안하고, 2024-2025년에 연간 SEK 5천만 크로나의 예산을 추산함.
- 정부는 학교의 보안, 안전과 평화로운 학습 분위기에 기여하고, 학생의 출석률을 높이며, 학교와 사회 서비스 간의 협력을 개선하는 사회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정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따라서 정부는 2023년에 SEK 7,500만 크로나의 예산을 사회팀에 대한 투자로 제안하고, 이를 위해 2024년과 2025년에는 SEK 250백만 크로나의 예산을 추산함.
- 또한 정부는 전국에 비상학교 설립을 추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2023년에 SEK 5,000만 크로나, 2024년부터 매년 SEK 1억 크로나를 따로 할당할 것을 제안함.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2023년 예산안에 제출할 예정임.

2022년 11월 03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11/regeringen-satsar-pa-hojda-kunskapsresultat-och-okad-trygghet-och-studiero-i-skolan/>

❖ 임신·출산지원

1. 출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더 많은 노력

- 정부는 출산 의료서비스가 여전히 접근성이 충분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으며, 대상 중심적이지 않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특히 지자체는 산모 건강 의료서비스 및 출산 의료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으로 이끄는 지식 지원에 대한 집단적 이해가 필요함. 현재 국가보건복지위원회(National Board of Health and Welfare)의 출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침을 개발하는 임무를 수행 중이며, 임상 활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있음.
- 정부는 산모 건강 의료서비스 및 출산 의료서비스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음. 노력 중 일부는 지역을 사후 관리를 포함하여 산모 건강 의료서비스 및 출산 서비스를 발전시키는 작업으로 이끄는 국가적 지식 지원에 대한 통일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임.

- 국가보건복지위원회의 출산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 지침을 개발하는 임무는 산모 건강 의료서비스 및 출산 의료서비스의 임상 활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하도록 확장됨. 여기에는 임신 중 산모 건강관리를 위한 기본 의료 프로그램과 출산을 위한 지식 지원이 포함됨. 정부는 이번 임무에 대한 종합적 지식 지원이 여성의 다양한 여건과 니즈를 고려한 보다 평등하고 사람 중심적인 산모 건강 의료서비스와 출산 의료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또한 정부는 출산 의료서비스 및 완전한 지식 지원을 위한 국가 지침의 이행을 준비하고 지원하기 위해 하위 임무를 확장하며, 이 임무는 2023년 12월 30일에 보고되어야 함.
- 국회가 현재 보조금을 위해 자금을 책정할 경우, 2023년에 총 SEK 11,100,000 크로나를 이 임무를 위해 따로 책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022년 12월 16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12/fler-insatser-for-att-forbattra-forlossningsvarden/>

❧ 코로나19

1. 학교 및 유치원 휴교 시 보상 가능성의 확대

-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특정 임시 육아수당에 대한 조례를 2022년 3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 이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정 상황으로 인해 유치원이나 학교가 문을 닫았을 때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유급 고용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 부모가 일시적인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연장은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는 아픈 아동을 둔 부모를 위한 예방적 임시 육아수당의 가능성도 포함됨.

2022년 01월 20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1/forlangning-av-mojligheten-till-ersattning-nar-skola-eller-forskola-stanger/>

2. 팬데믹으로 인한 원격교육의 가능성 폐지

- 정부는 팬데믹 기간 동안 학교에 적용된 여러 임시 규정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시작함. 4월 1일부터 학교의 원격 교육과 교육청의 국가시험 취소 가능성이 없어짐.
- 정부는 2020년 3월 팬데믹으로 인해, 이전에는 교육법상 일반적으로 불가능했던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활동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임시 조례를 결정하였음. 그 목적은 팬데믹 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나은 조건을 교장에게 제공하는 것이었음. 규정은 팬데믹 상황에 따라 여러 번 수정되어왔음.
- 교육부 장관 Lina Axelsson Kihlblom은 다음과 같이 말함. “학생에게는 원격교육이 아닌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가장 적합하며, 정부의 기조는 가능한 한 현장에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현재 상황은 학교에 대한 면제 조항을 단계로 폐지할 만큼 충분히 안정적이다.”
- 조례에 의거하여 4월 1일부터 원격 교육 실시가 폐지되며, 또한 학생 및 교직원 간의 결석(코로나로 인한 결석)은 다른 질병으로 인한 결석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될 것임. 스웨덴 교육청의 국가시험 취소와 조례에 따라 교장이 교사 대신 성적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도 폐지함.
- 그러나 학교가 팬데믹으로 인해 야기할 수 있는 상황(결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그대로 유지됨. 교장은 어린이, 학생, 교사 및 기타 교직원의 높은 결석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함. 예를 들어 학생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할 수 있음. 또한 수업일 또는 학기를 연장하고, 주말, 공휴일에 수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유지됨.

2022년 03월 03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3/mojligheten-att-bedriva-fjarr-eller-distansundervisning-pa-grund-av-pandemin-tas-bort/>

3. 방학 중 학교(lovskola)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임시 규칙 연장

-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도입된 방학 중 국가보조금 조건 변경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기로 함. 여기에는 학교장이 더 나은 조건으로 ‘방학 중 학교(lovskola)’를 제공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 방식의 간소화가 포함됨.

- 교육부 장관 Lina Axelsson Kihlblom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팬데믹 기간 동안의 학습 결손을 만회하기 위하여, 방학 중 학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이러한 지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함. 따라서 학교장이 방학 동안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임시 변경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임.”
- 팬데믹 기간 동안, 방학 중 학교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는 더 나은 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6월에 학교장이 방학 동안 교육에 대한 국가 보조금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시 변경 사항을 도입했음. 여기에는 교장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방식의 간소화 뿐 만 아니라 이번 여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도 방학 중 학교에 참여 할 수 있는 것 등이 포함됨.
- 정부는 임시 변경 사항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함. 이로 인해 교장은 이번 가을에도 팬데믹 기간 동안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에게 더 많은 방학 중 학교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게 됨.

2022년 05월 05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5/regeringen-forlanger-tillfalliga-regler-for-att-
underlatta-lovskola/](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5/regeringen-forlanger-tillfalliga-regler-for-att-underlatta-lovskola/)

❖ 기타

1. 국제적인 상황에서의 육아에 대한 평등한 규칙

- 정부는 국제적인 상황에서 육아에 대한 평등하고 포괄적인 규칙에 대한 제안과 함께 법률 자문을 의뢰하기로 결정함. 본 규칙의 목표는 동성 및 이성 부모 간의 평등을 높이는 것임.
- 법무부 장관 Morgan Johansso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육아에 대한 규칙이 사회 발전과 가족을 형성하는 다양한 방식에 적용되는 것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님. 본 규칙은 스웨덴의 다양한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출신의 다양한 가족에게도 적용되어야 함.”
- 문화부 장관 Jeanette Gustafsdotter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모든 아동은 안전한 가정 환경에서 성장해야 하며, 성별이나 가족 형성 구조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사회에서 자라야 함.”

- 법률 위원회는 국제적인 상황의 새로운 육아 가정을 도입할 것을 제안함. 즉 특정 조건 아래, 자녀의 어머니와 결혼했거나 결혼한 적이 있는 여성은 스웨덴에서 자동으로 그 자녀의 부모로 간주된다는 것을 의미함.
- 또한 특정 조건 아래 자녀의 어머니와 결혼했거나 동거한 여성에 대한 외국 법원의 판결과 결정은 스웨덴에서도 인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음. 자녀의 어머니와 결혼했거나 동거한 여성의 부모 역할에 관한 다른 여러 국제 사립 법 및 절차 규칙도 제안됨.
- 이 제안은 스웨덴의 많은 아동이 두 명의 법적 부모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동성 및 이성 부모 간의 평등을 증가시킬 것임.

2022년 02월 10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2/jamlika-regler-om-foraldraskap-i-internationala-situationer/>

2. 공공아동재단은 스웨덴 아동 폭력 발생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해 3백만 크로나 지원 받음

- 스웨덴 정부는 칼스타드대학과 협력하여 아동 폭력 발생에 대한 학생 및 부모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아동재단에 약 3백만 크로나를 지원하기로 함.
- 스웨덴에서 얼마나 많은 아동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경찰 보고서, 사회복지 기관 보고서와 같은 다양한 자료가 사용됨. 또한 폭력에 노출되더라도 사회기관과 접촉하지 않는 피해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중요한 것으로 봄. 이를 통해 더 많은 아동과 청소년의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폭력에 대한 아동의 취약 이미지를 보완할 수 있음.
- 사회부 장관 Lena Hallengre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함. “아동 폭력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폭력이 얼마나 흔한 지, 폭력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한 지식을 지속적으로 수집해야 함. 위기 상황은 아동이 폭력에 노출될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발발로 인해 발생한 상황과 더욱 관련이 있음.”

- 폭력에 대한 학생 설문조사를 위해 2,104,400크로나를 지원함.
 -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의 폭력과 학대 경험을 추적하고,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폭력 노출 위험군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임.
 - 또한 코로나19 기간 동안 아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유해한 약물복용이나 알코올 의존, 정신 질환과 같은 폭력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증가했는지 여부를 조사함.
 - 연구는 2023년까지 진행됨.
- 양육, 폭력, 양육지원 등에 대한 부모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위해 855,000크로나를 지원함.
 - 부모 설문조사의 목적은 부부 폭력, 양육 폭력에 대한 태도, 폭력의 위험 및 보호 요인, 아동폭력 발생을 조사하기 위함. 추가적 목적으로는 코로나19 전염병이 양육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양육지원의 필요성과 경험을 조사하는 것임.
 - 공공아동재단은 2023년 3월 31일까지 사회부에 본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2022년 02월 18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2/stiftelsen-allmanna-barnhuset-far-tre-miljoner-kronor-for-fortsatta-undersokningar-om-forekomsten-av-vald-mot-barn-i-sverige/>

3. 보호자 동의 없이 지원 조치를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조사

- 오늘날 보호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와 아동을 지원할 수 없음. 이에 따라 사회부는, 아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관에게 검토하도록 함.
- 사회부 장관인 Lena Hallengren은 다음과 같이 말함. “우리는 범죄 집단을 소탕하고, 아동이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임. 강력하고 안정적인 양육은 아동,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임. 아동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보호자가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함. 따라서 사회복지위원회는 부모(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함.”

-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 개입을 결정할 수 없음. 따라서 조사관은 사회복지위원회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 개입을 결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야 하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함. 예를 들어, 사회복지위원회는 보호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자가 부모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위한 상담을 하거나, 담당자와 정기적으로 연락해야 한다고 결정할 수 있음.
- 또한 보호자는 아동이 언제 집에 있고, 학교에 가는지, 필요한 지원 및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고, 여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인지 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조사관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 개입에 대한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보호자와 아동 모두에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대하여 조사할 것임.
- 아동을 조기에 지원하고 보호하여 부정적인 발달을 방지하도록, 조사관은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동 및 청소년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조사해야 함.
- 청소년이 사회복지위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사회복지위원회에 이를 알려야 함. 중요한 문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그러한 결정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임. 조사관은 전자모니터링을 통해 청소년이 그러한 요구 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할 것임. 그러나 이러한 모니터링은 청소년의 개인적 정체성(사생활)에 대한 침해를 수반하므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함.
- 본 조사는 2023년 말까지 계속될 것임.

2022년 04월 28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4/utredning-om-mojligheten-att-ge-stodinsatser-till-varnadshavare-utan-samtycke/>

4. 학교 안전 개선 방안 대한 조사 발족

- 학교는 모두에게 안전한 장소여야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스웨덴의 학교에서 심각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음. 따라서 정부는 학교 시스템의 안전, 보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본 조사를 발족함.
- 예방 및 홍보 작업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여러 관계 당국은 학교 시스템 내에서 범죄를 감지하고 예방할 역할과 책임이 있음. 폭력적인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임무에는 위험 평

가가 포함됨. 이러한 평가를 위해서는 학교, 유치원 및 방과후 센터가 경찰, 사회 복지 기관, 보건 및 의료 기관과 협력해야 함. 해당 주체들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구조화된 지역 협력을 할 필요가 있음. 조사관은 지자체 수준의 공동 운영기관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해야 함.

- Lina Axelsson Kihlblom 교육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말함. “학생과 교사는 학교에서 안전감을 느껴야 한다. 학교 폭력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학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한다. 학교는 지속적으로 폭력에 대처할 준비와 위험 평가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 학교, 유치원 및 방과후 센터는 인근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상황에 대비해야 함. 따라서 조사관은 학교가 지속적인 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방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도 제출해야 함. 조사관은 또한 위협 및 폭력에 대한 학교 시스템의 예방 작업을 조사, 분석하고, 폭력 행위에 대한 예방 작업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제안을 제출해야 함.
- 과거의 상황을 통해, 지식을 얻고 더 나아가려면, 이전의 경험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따라서 조사관은 과제의 일부로 스웨덴 및 다른 국가의 학교 환경에서 발생한 폭력에 경험과 교훈을 보고해야 함.
- 정부는 반폭력극단주의 센터의 소장인 Jonas Trolle을 특별 수사관으로 임명함. 본 조사는 2023년 8월 31일에 완료될 예정임.

2022년 06월 23일

출처: <https://www.regeringen.se/pressmeddelanden/2022/06/regeringen-tillsatter-en-utredning-om-hursakerheten-i-skolan-kan-forbattras/>

중국

일·가정 양립		
1	후난성 세 자녀 양육 정책 발표, 보호자는 아동 만 1세까지 휴가 신청 가능	161
양육지원		
1	청두시, <아동 친화 도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발표	162
2	이상적인 교육에 초점, 2022 베이징 가정교육 홍보 행사 개최	164
3	중국 부녀연합회·교육부 등 11개 부처에서 <가정교육 촉진 계획(2021-2025)> 발표	165
4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혜성 보육 특별 사업 실시 예정	166
유아교육·보육		
1	교육부, '유치원 보육 및 교육 품질 평가 지침' 발표	167
2	중국, 국공립 초중등 스마트교육 플랫폼 시범 운영	170
3	2022년 중국 유아교육 진흥의 달 캠페인 개시	171
4	안후이성, 2022년 가을학기 부터 유치원에서 연장 돌봄 서비스 제공	172
5	베이징, 2~3세 영유아 보육 위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유치원 탁아반 시범 사업 규모 확대	174
6	상하이시, 유아교육 및 보육사업 조례 공포 및 2023년 1월 정식 시행	176
7	상하이 유치원, CCTV 기록 최소 90일 보관	177
8	후난성 교육 발전 제고 행동 계획 발표	178
임신·출산지원		
1	세 자녀 정책 시행 후 지자체 현황	179
2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보고서에 기재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 체계 구축"	180
3	중국 우한시, 출산 보험 제도 개편	181
코로나19		
1	중국 일부 지역, 유·초·중등학교 코로나19 정책 조정	183
기타		
1	산시성, 여성발전계획과 아동발전계획(2021-2030) 발표	184
2	교육부, 교내 시력 검사 및 근시 예방 서비스 규범 발표	185
3	후난성 고등법원, 여성과 아동의 권익 침해 범죄를 소탕하고자 특별 재판 활동 전개	187
4	광시좡족자치구, 요보호 아동 결연 사업 추진	188
5	푸젠성, 학생의 수업시간 중 휴대폰 소지 금지 법안 통과	189
6	윈난성, 미성년자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 통과	190
7	산둥성, <제14차 5개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 계획> 발표	191

❖ 일·가정 양립

1. 후난성 세 자녀 양육 정책 발표, 보호자는 아동 만 1세까지 휴가 신청 가능

- 후난성은 6월 21일에 <인구 장기 균형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출산 양육 정책 방안>을 발표함.
 - 발표에 따르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어머니는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에서 60일을 더 사용할 수 있고, 아버지는 20일의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됨. 출산휴가 이후 직장에서 허가하는 경우, 자녀 연령 만 1세까지 휴가를 연장할 수 있음. 휴가 동안의 처우는 직장과 협의하여 결정함.
 - 해당 방안은 2025년까지의 출산과 양육 장려 정책 체계 마련, 서비스 관리제도 개선, 출산과 양육 서비스 수준 제고, 보혜성* 보육 서비스 체계 구축 마련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음. 또한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절감하고 출산과 양육 수준을 높이며 출생인구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목표임.
- * 보혜성 보육기관: 정부가 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정부 기준 보육비용 수용, 교직원 사회보험 가입 등)
- 본 방안은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인구나 계획생육법>과 <후난성 인구나 계획생육조례>를 실천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세 자녀 양육 정책을 시행해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또한 세 자녀 정책과 어긋나는 지방 법규, 정부 규정, 문건과 관련 제도를 재정리하고 전입, 입학, 취직과 개인의 출산 간 연관성을 약화하고자 함.
 - 방안에 따르면, 가족계획 가정(외동자녀 가정)의 경우, 외동자녀의 부모(만 60세 이상)가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자녀는 매년 15일의 부모 병간호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정상 근무로 간주함.

2022년 06월 22일

출처: <http://www.ceweekly.cn/2022/0622/387505.shtml>

❖ 양육지원

1. 청두시, 〈아동 친화 도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발표

■ 청두시 〈아동 친화 도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 발표

- 청두시가 발표한 〈아동 친화 도시 건설 5개년 계획(2021-2025)〉은 사회정책, 공공 서비스, 권익보장, 성장 공간, 발전환경 측면에서 14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했고 2023년까지 아동 친화단지, 아동 친화 모범 일터 구축 및 아동 친화 사업 시행, 2025년까지 아동 친화 도시 건설을 목표로 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회정책

- 아동의 시선에서 아동 친화 도시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아동 친화적인 단지·학교·병원·공원·도서관·교통 구축 관련 지침을 연구할 예정임. 이를 기반으로 아동의 심신 발달에 적합하고 아동 서비스와 활동에 대한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아동 친화도시를 조성할 것임.
- 정부 위탁, 사업 협력, 발굴 지원 등 방식을 통해 아동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조직과 자원봉사 조직을 적극 육성하고자 함. 조건에 부합하는 아동 보호와 서비스 항목을 정부 서비스 조달 지침 목록에 더 많이 포함해 아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조직이 지역사회, 가정, 학교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도할 방침임.
- 인센티브를 개선하여 기업이 아동 친화 도시 건설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임직원 자녀를 살피며 아동 친화적인 공익 서비스와 공익 활동을 전개하도록 유도할 것임. 또한 기업이 아동 친화적인 상품과 IP를 개발하도록 독려할 예정임.

■ 공공 서비스

- 영유아 돌봄 서비스 체계를 정비하고 보편적 복지로써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하고 2025년까지 지역사회 전역에 영유아 돌봄 서비스 시설을 구축할 계획임.
- 각급의 여성과 유아 보건 기구, 지역사회 보건 서비스 센터, 돌봄 기구 등을 활용해 방문 지도, 부모-자녀 프로그램, 학부모 강좌 등 방식으로 연령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2025년 말까지, 각 구/시/현은 영유아 발전 기지를 최소 1곳 이상 건설해야 하며 영유아 발달 개념, 기초 상식과 육아 노하우를 보급해야 함.

- 각 구/시/현은 교육시설 개조, 안전한 교내·외 환경 조성, 교내 공공 활동 시설을 방학에 개방하는 제도 등을 통해 현존 학교 중 1-2곳을 아동 친화 시범학교로 만들 예정임.
- 각 구/시/현은 신생아 치료 센터를 최소 1곳 이상 마련하고 보건소, 보건 서비스 센터에 아동 기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가정의학과 전문의, 아동 보건 전문의 최소 1명씩 배치할 방침임.

■ 권익 보장

- 장애아동 재활치료 제도를 완비하고 아동 장애 검사를 실시하며 0-15세 장애아동을 우선으로 치료와 재활을 진행할 것임. 아동 장애 예방, 조기 발견, 치료와 재활 원스톱 체제를 구축할 예정임. 여건이 되는 지역은 아동 재활 치료 연령 범위를 확대하고 공립, 민간단체가 장애아동 재활 사업을 전개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 자연재해, 공공보건 위기, 가정 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아동에 대한 발견/보고/관리/개입 체계를 개선하고 발달 지연 아동에 대한 조기 치료와 양육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임.

■ 성장 공간

- 중심 단지마다 아동센터를 설립하고 단지 공공문화서비스 센터, 아동 전문 서비스 시설을 보장해 단지 안에서 아동이 놀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2025년 말까지 도시 전역을 아동 친화단지로 조성할 계획임.
- 아동 이사회 육성 계획을 시행할 것임. 자발적으로 참여한 아동 중 각 연령대의 대표를 선정하고 학교, 단지에서 아동 참여 강좌를 열어 아동의 시민 의식을 함양하고자 함. 또한 *홍링진 제안 행사를 열어 아동이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지역사회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능력을 신장하도록 독려할 방침임.
- 공원 도시 건설 사업과 접목해 각 구/시/현은 아동 친화 테마 공원을 최소 1곳 이상 조성해 아동의 독립적인 활동 공간과 아동 친화적인 자연환경을 제공할 것임.

* 홍링진: 중국 소년선봉대 대원이 착용하는 붉은 스카프를 의미

■ 발전환경

- 가정 교육 지도 서비스 체계를 마련해 가정 교육 서비스 수준이 신시대에 걸맞도록 제고할 것임. 인도, 자전거 도로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등하굣길 환경을 개선해 아동의 외출 안전을 보장하는 아동 친화 거리를 조성할 것임. 2025년까지 각 구/시/현은 아동 친화 거리를 최소 1곳 이상 조성해야 함.
- 미성년자 보호 거점 조성을 추진할 계획으로 거리마다 1명의 아동 감독원을, 단지마다 1명의 아동 주임을 배치할 것임. 미성년자 보호 서비스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 관련 사건을 조기 발견 및 예방하고자 함. 또한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체육관 등 공공 문화 체육시설은 아동 연령에 따라 입장권을 무료 또는 할인하도록 추진하고 영리 목적의 아동 놀이 시설, 영화관, 극장 등 문화 체육시설을 아동 대상으로 무료 개방하도록 독려할 것임.

2022년 01월 05일

출처: http://www.chengdu.gov.cn/chengdu/home/2022-01/05/content_3cb9ba0daa63487eb43397e679ede60f.shtml

2. 이상적인 교육에 초점, 2022 베이징 가정교육 홍보 행사 개최

- 4월 22일, 베이징 부녀 연합회, 베이징 교육 위원회, 베이징 세관 노동 위원회가 주최하는 베이징 가정교육 홍보 행사가 온라인으로 진행됨. 베이징 가정교육 홍보 행사는 아동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는 가정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베이징 부녀 연합회는 관련 부처와 함께 매년 가정교육 주제를 정해 홍보하고 있음. 이번 행사의 주제는 '이상(Ideal), 함께 만드는 미래'였으며 여러 플랫폼을 통해 생중계되어 420만 명이 시청한 것으로 알려짐.
-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트럼펫 연주를 맡은 주덕은 학생이, 이번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우리의 이상,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며 베이징 동계올림픽 공연에서 느낀 소회를 밝힘. 전홍걸 중국청소년연구센터 부교수는 '행복한 인생', '삶을 받쳐주는 이상', '이상적으로 사는 법'에 대해 연설함.
- 이어서 세계 챔피언 이이나 선수는 영상을 통해, 아이들에게 모범이 되고,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것(운동)을 통해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전달하는 것이 자신의 이상이라고 이야기함.

- 이 밖에도 본 행사는 이상을 주제로 한 어린이도서 20권을 선정해 발표했으며 중국 부녀연합회에서 발표한 부모와 함께 읽으면 좋은 100대 추천도서 목록을 홍보함.

2022년 04월 26일

출처: http://www.jyb.cn/rmtzcg/xwy/wzxw/202204/t20220426_690844.html

3. 중국 부녀연합회·교육부 등 11개 부처에서 <가정교육 촉진 계획(2021-2025)> 발표

- 중국 부녀연합회, 교육부 등 11개 부처는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는 가정교육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가정교육 촉진 계획(2021-2025)>을 발표함.
- 본 계획은 학교, 가정, 사회 협동 교육 매커니즘을 개선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촉진하는 것이 가정교육 촉진 계획의 기본 목표로 설정되었음.
-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가정교육에서 인성과 인권을 중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개선을 통해 각종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 기지 규모를 늘리며, 전문 지도 서비스 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임.
- 또한 공공서비스 공급을 확장하여 도시와 농촌을 아우르고, 공평하고 우수한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임. 더불어 학교, 가정, 사회 협동 교육 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가 지덕체 등 소양을 두루 갖추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임.
-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도농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공공 문화 서비스, 건강 교육 서비스, 아동친화도시 건설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임. 또한 가정교육 지도 기관 설립 방안을 모색할 예정임. 인민정부는 현지 실정에 맞는 가정교육 지도 기관 설립을 추진해 지역 특색을 살리고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학교의 가정교육 지도의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학부모 학교를 보급하여 학기 당 최소 두 차례의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 활동을 실시할 예정임.
- 지역사회의 가정교육 지도의 경우, 도농 지역의 종합서비스 시설, 문명실천센터* 등 시설에 학부모 학교를 보급해 연 4회 이상 가정교육 지도 서비스 활동을 실시하도록 함. 3세 이하 영유아 가정에 대한 육아 지도 서비스 체계의 경우, 여성과 영유아 보건 기관, 일선 의료 보건 기관이 영유아 조기 발전 서비스를 제공할 것임.

* 문명실천센터: 의식 수준 제고를 목표로 하는 자원봉사센터

- 마지막으로, 가정, 학교, 사회의 협동 교육 체제 개선, 관리 계획과 자원 배치 최적화 방안을 모색할 것임. 가정교육 시범 영역, 혁신적인 실천 기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효과적인 메커니즘과 모델을 개발하고 노하우를 축적할 것임.

2022년 04월 13일

출처: http://www.jyb.cn/rmtzcg/xwy/wzxw/202204/t20220413_688668.html

4. 가정의 보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혜성 보육 특별 사업 실시 예정

■ 육아 지원 조치 개선 및 실제 적용에 대한 지도의견

- 보육 서비스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중국의 17개 부처는 ‘육아 지원 조치 개선 및 실제 적용에 대한 지도의견’(이하 ‘지도의견’)을 발표함.

■ 지도의견 핵심 키워드 5가지

- 본 지도의견에 결혼 비용, 출산, 육아, 교육 전반을 고려해 구체적인 조치 20가지를 제시하였으며, 8월 17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도의견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함. 지도의견의 핵심 키워드는 아래 5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음.

1) 기본

-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를 강화함. 지도의견은 보육 서비스 기능을 확대해 영유아 돌봄 등 기본적인 공공서비스 시설을 개선하고, 공립 보육 서비스 건설 사업을 시행해 아동 돌봄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방점으로 둬.

2) 보혜성 서비스 보급(저렴한 비용의 보육 서비스 보급)

- 보혜성 서비스 보급하기 위해, 공립 보육기관을 발전시키고 사회 각계각층의 투자를 독려함. 또한 직장 보육기관 개선을 지원하고 기관 간 서비스망을 구축하며 가정 보육 모델 개발에 착수함. 또한 여건이 되는 유치원은 2~3세 아동까지 모집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보혜성 서비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참여를 독려하고자 함.

3) 투자

- 투자 예산을 확대함. 보육 건설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중앙 예산 내에서 건설 보조금을 지원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보혜성 사업을 지원함. 중앙정부의 투자 견인을 통해 지방 정부와 사회 각층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보육 서비스 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4) 비용

- 각 서비스 비용의 기준을 수립함. 공립 보육기관의 비용 기준은 지방정부가 정하고, 보혜성 보육기관의 비용은 보육 서비스 비용이 합리적인 선에 머물도록 감독과 관리를 강화함.

5) 부담 경감

- 기관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자 함. 중앙 예산에서의 특별 지원을 제외하고 보육 기관의 수도, 전기, 가스, 난방은 주민생활 비용 기준을 따르고, 각지는 보육 기관 발전을 지원하는 윈스톱 정책을 수립해야 함. 이와 동시에 보육 기관 폐쇄 등 특수 상황이 발생했을 시 긴급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코로나 방역 기간에 발생하는 보육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함.

2022년 08월 18일

출처: https://3g.163.com/dy/article/HF1Q3R1S0514R9NP.html?spss=adap_pc

● 유아교육·보육

1. 교육부, '유치원 보육 및 교육 품질 평가 지침' 발표

■ 유치원 보육 및 교육 품질 평가 지침

- 중국 교육부는 교육 평가 제도를 개선하며 유아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에서 발표한 '유아교육 심화 개혁 발전에 관한 의견'과 '신시대 교육평가 개혁 심화를 위한 종합적 방안'을 토대로 '유치원 보육 및 교육 품질 평가 지침'을 발표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평가 내용

- 영유아 심신 건강 발달 촉진을 목표로 유치원 보육 및 교육과정 품질에 대해 평가를 진행함. 평가 내용은 유치원 교육목표, 보육과 안전, 교육과정, 교육환경, 교사 전문성 다섯 가지로 핵심 지표 15개와 평가항목 48개로 구성됨.

1) 교육목표: 당건 작업*, 윤리 계몽, 과학이념 등 세 가지 핵심지표 포함

* 당건 작업(党建工作): 당의 윤리 정책 수준을 제고하고 당의 조직을 공고히 하여 당원의 사상 정치교육을 강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당의 업무 외에도 정치, 사상, 조직, 기풍, 계율, 제도 마련을 포함함.

2) 보육과 안전: 보건위생, 돌봄, 안전 보호 등 세 가지 핵심지표 포함

3) 교육과정: 활동조직,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 가정과 함께하는 육아 등 세 가지 핵심지표 포함

4) 교육환경: 공간 설계와 교구 등 두 가지 핵심지표 포함

5) 교사 전문성: 교사 윤리와 기풍, 보육 인력, 전문성, 장려 체제 등 네 가지 핵심 지표 포함

■ 평가방식

1) 과정 중심 평가

- 영유아의 능력과 발달 수준을 직접 검사하여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 품질을 평가하는 방식은 금지됨.

- 보육과 교육과정의 품질에 초점을 두고 유치원이 보육과 교육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정도와 개선 과정을 반영해야 함.

2) 자기 평가 강화

- 유치원은 상시적인 자기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교직원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해 함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책을 모색해야 함.

- 외부 평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유치원이 자기 평가 체제를 개선하고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해야 함.

3) 학급 관찰에 집중

- 만나절 이상의 관찰을 통해 교사와 영유아 간 상호작용 상황을 이해하고 영유아의 학습과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교사가 해온 노력과 지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함. 이를 통해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 과정 및 품질을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이해해야 함. 외부에서 학급 관찰을 하는 경우 무작위로 선정하며 각 연령의 총 학급 수 1/3 이상을 관찰해야 함.

■ 평가 시행 시 유의점

1) 평가 조직 구축

- 당위원회, 정부 교육 감독 부처를 필두로 다부처가 참여하는 평가 조직 구축
- 각 성/구/시는 현지 실정에 맞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유치원 보육 및 교육 품질에 대한 자기 평가 매뉴얼을 발간해 품질 평가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도록 지원
- 기존에 시행한 지방 정부 교육 책임 평가, 학령 전 교육 보급 및 지도에 대한 평가, 유치원 감독 평가 등과 통합해 중복 평가 방지

2) 평가 주기 설정

- 유치원은 매 학기에 자기평가를 한 차례 실시
- 교육부처는 유치원 보육, 교육 및 자기 평가에 대한 지도 강화
- 원칙적으로는 3-5년 단위로 모든 유치원을 평가해야 하지만 현급 관리감독은 관할 유치원 수와 업무적 필요에 따라 평가를 진행
- 성과 시는 적절히 무작위로 평가를 진행하고 구체적인 추첨 비율은 성/구/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3) 평가 지원 강화

- 각지는 유치원 보육/교육 품질 평가 및 평가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 유아교육의 특성을 존중하고 유치원 보육 및 교육 현장에 익숙하며 책임감이 강하고 전문성을 지닌 평가단을 구축하고 평가단의 전문성을 제고

- 본 지침에 대한 연수를 강화해 유치원 원장과 교사가 지침을 활용해 보육 및 교육 수준을 높이도록 추진

4) 격려와 지도 중시

- 유치원의 보육 및 교육 품질 평가 결과를 유치원 표창, 정책 지원, 자원 분배, 원장 심사 및 민간 유치원 연간 검사, 보혜성 민간 유치원 인증 지원 등에 중요한 근거자료로 활용
- 관련 정책 규정을 위반했거나 보육 및 교육 품질이 떨어진 유치원에 대해서는 지도를 통해 개선시켜야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법적 책임을 추궁
- 유치원 보육 및 교육 평가를 통해 지방정부가 상응하는 교육적 책임을 지도록 적극 추진하고 영유아 교육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

5) 긍정적 분위기 조성

- 영유아 교육 개혁 발전에 관한 국가 정책 홍보
- 유치원 보육 및 교육 품질 평가의 중요 의의와 평가 내용 및 지표 체계 설명
- 품질 평가 관련 선진 경험 분석
- 국제 교류 적극 추진

2022년 02월 15일

출처: http://www.moe.gov.cn/srcsite/A06/s3327/202202/t20220214_599198.html

2. 중국, 국공립 초중등 스마트교육 플랫폼 시범 운영

- 중국 교육부는 3월 1일에 개최된 '2022 교육의 봄' 제4회 뉴스 브리핑에서 국공립 초중등 스마트교육 플랫폼 사업 진행 상황을 소개함.
- 2020년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자, 중국 교육부는 초중등 온라인 플랫폼을 긴급히 마련해 테마 수업과 학교 교육과정 수업을 제공함. 현재까지 누적 조회 수는 64억 회를 기록하였고 해당 플랫폼은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높은 평가를 받음.

- 교육부는 쌍감(双减)*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기초교육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고자 초중등 온라인 플랫폼의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국가 초중등 스마트교육 플랫폼 구축 및 활용 방안>을 제정하였고 기존 온라인 플랫폼을 ‘국가 초중등 스마트교육 플랫폼’으로 업그레이드함.

* 쌍감(双减) 정책: 의무 교육단계 학생의 숙제 부담과 사교육 부담 경감 업무에 관한 의견

- 업그레이드된 플랫폼은 기존 테마 수업과 교육과정 수업 자료가 한층 풍부해졌고 방과후 서비스, 교사 연수, 가정교육, 교육 노하우 등 4가지 카테고리를 증설해 쌍감 정책의 수효를 더 충족시킬 수 있게 됨.
- 현재 플랫폼에는 총 21,334개의 수업자료가 등록되어 있으며 그 중 신규 업로드된 수업자료는 10,335개로 기존보다 데이터가 약 2배 증가함. 또한 외부 전문 사이트 60곳에 자료를 공유하여 자료 규모가 대폭 증가함.
- 향후 계획에 따라, 교육부는 플랫폼의 기능을 개선하고 교육자원을 확충해 서비스 질을 향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국공립 초중등 스마트교육 플랫폼은 브리핑을 시작으로 시범 운영에 착수함.

2022년 03월 01일

출처: <http://education.news.cn/20220301/0149a804570f493f92b02f25b34a8b33/c.html>

3. 2022년 중국 유아교육 진흥의 달 캠페인 개시

- 중국 교육부는 <2022년 중국 유아교육 진흥의 달 캠페인 행사에 관한 고시>에 따라 5월 20일부터 한 달간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을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함.
-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은 유아의 건전한 발달과 후속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 2021년,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에 대한 지도의견>, <유치원의 입학 준비 교육 지도 요점>, <초등학교 입학 적응 교육 지도 요점>을 발표해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교육을 위한 발판을 마련함. 위 문건들에 따르면, 유치원의 유아교육과정 전반에 초등학교 입학 준비 교육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5세 반은 맞춤형 입학 준비 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는 입학 적응 기간인 만큼 유치원과 연계된 입학 적응 교육을 시행해야 함.

- 올 4월에 발표된 의무 교육 과정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연계교육을 강조하고 있으며 초1~2 교육과정을 활동 중심, 게임(놀이) 중심, 생활 중심으로 설계해 신입생의 초등학교 적응을 도울 것을 제시함. 또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입학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마련해 학생의 학업, 생활, 대인관계에 대해 지도해야 한다고 명시함. 이에 각지에서는 입학 준비 교육과 입학 적응 교육에 관하여 여러 가지 교육적 시도를 하는 중임.
- 올해는 유아교육의 달을 맞이하여, 중국의 유치원과 초등학교 연계 관련 정책, 지방의 유·초등 연계 방안 연구 및 실천, 나아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교육적 시도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임. 캠페인의 목표는 유치원, 초등학교, 가정이 연계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함양하도록 지도하고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와 학교 적응을 돕는 것임.
- 각 지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사례를 홍보해야 함. 유치원은 입학 준비 교육을 유아의 생활과 게임(놀이)에 녹여내야 함. 초등학교는 아동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신입생의 상황과 개별적 차이를 파악해 1학년 교육과정의 교육 방식을 수정하고 놀이화, 생활화 등 방식을 통해 학교 적응 교육을 실시해야 함. 또한 학부모의 관심사를 파악해 유·초등 연계교육이 '유치원의 초등학교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캠페인을 하는 동안, 교육부는 각지의 상황과 유의미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교육부 공식 사이트에 별도의 탭을 마련해 전국에서 수합한 유·초등 연계 작업 영상 사례를 공유 할 예정임.

2022년 05월 20일

출처: http://m.jyb.cn/rmtzcg/xwy/wzxw/202205/t20220520_693966_wap.html

4. 안후이성, 2022년 가을학기 부터 유치원에서 연장 돌봄 서비스 제공

- 최근 안후이성 정부는 기자회견담회에서 <안전한 육아 실천 방안>을 발표함. 해당 방안은 '보육의 어려움', '공립 유치원 입학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와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제시간 하원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가을학기부터 유치원 연장 돌봄 서비스를 전면 제공하고, 2023년 봄 학기에는 서비스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로 명시함.
- 안후이성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까지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 종료시간은 현지 실제 퇴근 시간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힘.

- 유치원은 상황에 맞게 하원 시간대를 다양하게 설정하여 학부모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음.
- 보편적 복지 원칙을 고수하며 부모는 자율적으로 연장 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유치원은 서비스 신청을 강제할 수 없음.
- 연장 돌봄 서비스는 해당 유치원의 근무 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퇴직 교사/자질을 갖춘 사회 전문 요원/자원봉사자가 담당할 수 있음. 유치원은 현존하는 교육자원과 학부모의 수요를 활용해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수립해야 함. 교육과 유아의 성장에 알맞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연장 돌봄 서비스를 빌미로 초등학교식 수업을 진행하거나 영리 활동을 할 수 없음.
- 안후이성은 '보육난'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각 시별로 시범 보육 기관 2~3곳, 각 현(시/구)은 최소 1곳 이상의 보혜성* 보육기관을 설립해야 함.
 - * 보혜성 보육기관: 정부가 정한 조건을 갖춘 기관(정부 기준 보육비용 수용, 교직원 사회보험 가입 등)
- 2025년 기준, 모든 현(시/구)에 1곳 이상의 공립 보육 기관이 배치되어야 함.
- 민간에서 공공서비스 시설이나 방치된 공간 등 유휴 자원을 활용해 보육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지지하며 위탁이나 매매 방식으로 보혜성 보육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함.
- 공립 병원에 위탁하여 보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음.
- 직장 내 직원 복지 차원에서, 독립 혹은 연합의 형태로 직원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여건이 되는 경우 인근 주민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장려함.
- 안후이성은 보육 통합화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조건에 부합하는 유치원이 탁반*을 운영하도록 장려하고, 공립 유치원의 탁반은 원칙적으로 보혜성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설 혹은 확장한 공립 유치원은 보혜성 탁반을 운영해야 함.
 - * 탁반: 0~3세 영유아의 자립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업
- 공립 유치원의 탁반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탁반의 물리적 환경, 교사 자원, 원아 모집, 경비 보장 등 구체적인 기준을 세워야 함.
-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 유치원이 보혜성 탁반을 개설하도록 장려하고 2025년 기준 모든 현(시/구)의 유치원 중 2~3세 대상 탁반을 운영하는 비율이 30% 이상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 ‘공립 유치원 입학난’을 해소하기 위해 안후이성은 ‘위치적으로 근접한 유치원 입학’이라는 원칙에 따라, 2025년까지 공립 유치원을 9.9만개 신설하고 공립 유치원이 유치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 되도록 할 예정임.
- 보혜성 유치원의 비율이 90% 이상이고, 학령 전 교육 실제 학급당 원생 수가 기준보다 20% 초과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해 보편적 복지를 핵심으로 하는 유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 2022년 공립 유치원 설립 목표는 4만 곳, 2023년은 2만 곳임.
- 안후이성에 따르면, 신설 단지 부설 유치원은 전부 공립 유치원으로 설립하고, 거주 인구가 3,000명 이상인 단지에는 학급이 3개 이상인 유치원이 최소 1곳 이상 있어야 함.
- 노후화 단지를 재정비할 때 부설 유치원도 함께 관리하고 방치된 공간, 공공 서비스 시설, 사용하지 않는 기숙사 등 자원을 활용해 임대, 전환 등 방식으로 공립 유치원을 설립해야 함.
- 일반 대학에서 공립 유치원을 설립해, 대중을 대상으로 보혜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할 것임.

2022년 06월 02일

출처: http://www.jyb.cn/rmtzcg/xwy/wzxw/202206/t20220602_695721.html

5. 베이징, 2~3세 영유아 보육 위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3년부터 유치원 탁아반 시범 사업 규모 확대

■ 베이징시 보육 위탁 서비스 체계 구축 현황

- 향후 베이징시는 합리적인 비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탁아소를 확대 보급할 예정임. 9월 23일, 베이징시 15차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고 베이징시 보육 위탁 서비스 체계 구축 현황에 대해 보고함.
- 보고에 따르면, 2023년부터 베이징시는 탁아반 시범 사업을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고 노후 지역 등 도시 재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위탁 보육 서비스 시설을 보강할 예정임.

■ 위탁 보육 서비스 보급 현황

- 지난 7월 기준, 베이징 전역에서 위탁 보육 서비스 제공 기관은 총 627곳, 위탁 보육 서비스 정원은 총 29,171명인 것으로 나타남. 베이징 시민 천 명당 위탁 보육 서비스 정원 1.33개꼴로 2021년 말 전 중국의 평균 수준(천 명당 2.03개)을 밑돌고 있음. 제14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한 2025년 목표(천 명당 4.5명)를 고려하면, 정원 7~8만 명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임.
- 그 밖에도, 현존하는 유치원 정원 충족률이 35.4%로 정원 미달인 곳이 많음. 게다가 위탁 보육 시설 분포 편중 현상으로 도시의 유치원 정원 수는 외곽지역보다 훨씬 많고, 차오양과 하이톈구의 유치원 정원 수는 전 도시의 46.7%를 차지함.
- 그간 위탁 보육 서비스가 부족해서 가정의 실제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음. 서비스 비용과 감독 관리 측면에서 보자면, 2020년 베이징 위탁 보육 시설의 월평균 가격이 7,000위안을 초과해 가격이 높은 편임.

■ 향후 계획

- 가정의 출산·양육·교육 부담을 낮추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유치원 시범 타카이반, 직장과 지역사회 위탁 보육 시설 등 다양한 방식으로 단계와 연령대를 구분하여 편리하고 가격이 합리적이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위탁 보육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예정임.
- 직장에서 위탁 보육 시설 설립 시 필요 자금은 규정에 따라 노조 경비, 복지 비용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발전개혁위원회, 총 노조 등 부서는 재정 보조금, 노조 경비 보조금 등 방식을 통해 기관과 기업 등이 위탁 보육 시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할 수 있음.
- 위탁 보육 서비스를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에 포함하고 지역사회 위탁 보육 서비스 보급에 민간의 참여를 독려하며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임.
- 0~3세 대상 위탁 보육 시설을 거주지 신축 사업 공공 서비스 체계에 포함하고 도시 재개발 등 작업을 통해 공익성을 띤 위탁 보육 서비스에 대한 토지 공급을 확대하여 위탁 보육 시설 용지 비용을 줄이고자 함. 또한 각 구가 시설 확대, 매입, 임대, 현존하는 공공 서비스 시설활용 등 방식을 통해 위탁 보육 시설에 토지를 무료 혹은 저가로 제공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임.

- 위탁 보육 시설에 대한 세금 혜택을 강화하고 해당 시설의 수도, 전기, 가스비는 주민 생활료 가격 기준을 따름. 더불어 위탁 보육 서비스 발전건설 투자 정책, 현존 유치원 정원 확대 지원, 가정 보육 보조금 정책 연구를 진행할 예정임.

2022년 09월 23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44740750357979785&wfr=spider&for=pc&searchword=%E5%A9%B4%E5%B9%BC%20%E5%87%BA%E5%8F%B0>

6. 상하이시, 유아교육 및 보육사업 조례 공포 및 2023년 1월 정식 시행

- 상하이 시는 <유아교육 및 보육사업 조례>를 발표함. 본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상하이시 유아교육과 보육사업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고 학령 전 아동과 3세 이하의 영유아, 관련 종사자,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합법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됨.
- 상하이시는 조례에 따라, 관련 부처와 협력하여 공공 서비스 체계 구축과 위탁 보육 시설 관리 감독 등 문제의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정책 연계성을 강화할 예정임. 또한 사업 목표를 수치화하고, 실천 가능한 타임라인을 마련하며 구체적인 지표를 설정해 각급 정부와 관련 부처가 유아교육과 보육 서비스에 대한 투자, 관리 감독 등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임.
- 현재, 상하이시의 학령 전(3년) 유치원 취원률은 99%이고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 중 공립유치원에 다니는 비율은 73.89%이며, 보혜성 유치원* 보급률은 93%임. 최근 몇 년 동안, 상하이시가 우수유치원을 적극 확대하면서 도시 전역에 있는 공립유치원 중 우수 유치원의 비율은 67%에 달하지만, 도시 내 유치원의 질적 격차는 여전히 존재함.

* 보혜성 유치원: 저렴한 비용의 보육 서비스 보급하는 유치원

- 앞으로 상하이시는 유치원이 안전, 위생, 영양 등 요구 조건에 부합하고 게임 수업을 기본활동으로 하며, 유아의 발달 우선 이념을 추구하도록 할 것임. 이를 통해 아동의 실외활동 시간을 보장하고 보육자원을 확보하며 가정과 유치원의 협력 육아를 추진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학령 전 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것임.
- 보육 서비스의 질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상하이시는 민간 프로젝트인 ‘보혜성 보육시설 사업’을 추진 지속할 예정임. 이를 통해 유치원 규정과 기준에 맞게 보육반을 개설하고 학

대하도록 할 것임. 또한 지역사회 위탁 보육 서비스를 단지 15분 내 생활권, 농촌지역 생활권, 지역사회 종합 서비스 체계 구축 내용에 포함할 것임. 현재 상하이시의 보육시설은 53,000개 이며, 인구 천 명 당 보육시설 2.12개가 배정된 상황임. 도시 전역에 보급된 보육시설 비율은 97%임.

- 최근 상하이시 교육위원회 등 10개 부처가 공동 발표한 〈상하이시 지역사회 위탁 보육 서비스 업무에 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내년에 지역사회 위탁 보육 지점을 전면 구축하고, 더 많은 공립유치원에 학급을 개설할 방침이며 2025년 천 명 당 보육시설 4.5개 이상을 설치하는 것이 목표임.

2022년 11월 24일

출처: https://www.cnr.cn/shanghai/tt/20221124/t20221124_526072311.shtml

7. 상하이 유치원, CCTV 기록 최소 90일 보관

- 〈상하이시 유아교육 및 보육사업 조례〉는 중국 최초로 학령 전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를 포괄하여 입법한 지역 조례임. 본 조례에 따르면, 보육시설은 지역사회 공공 서비스 시설에 설립할 수 있으며 단독 설립도 가능함. 독립된 공간이 있고 위생, 환경 보호, 소방안전 등 기준에 부합하며 실외활동 공간이 마련된 곳에 설치할 수 있음.
- 본 조례는 아동의 심신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안전 보장 책임을 강화하고자 CCTV 설치 및 기록 보관 기한에 대해 명시함. 본 조례에 따르면 보육 기간 동안 아동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해야 함. 출입구, 아동 활동 장소, 휴식 장소 구역 등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최소 90일 이상 보관해야 함.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상 피해가 의심될 경우, 유치원과 위탁 보육 시설은 곧바로 교육, 공안 부처에 신고해야 함.
-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본 조례는 교직원에 대한 취업 조건을 명시함. 본 조례에 따르면,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교직원을 채용하기 전에, 범죄 기록 등 신원조회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동 학대, 성범죄, 폭력 등 행위로 치안 관리 처벌을 받은 경우, 마약, 음주, 도박 등 위법한 일을 저지른 경우, 유치원 및 보육시설 업무에 부적합한 만성 전염병, 정신병에 걸린 경우 등, 교직원으로서 부도덕한 행위를 한 경우 채용이 불가함.

- 본 조례는 유치원, 어린이집 및 종사자의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명시함. 예를 들어, 유치원이 국가와 상하이시의 비용 기준을 위배하거나, 관련 비용을 횡령한 경우, 체벌, 차별, 학대, 성범죄 등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를 끼친 경우, 사안에 따라 원아 등록 중지 명령, 유치원의 설립 허가증을 취소 할 수 있음.

2022년 11월 23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50277389754578549&wfr=spider&for=pc>

8. 후난성 교육 발전 제고 행동 계획 발표

- 후난성 교육청, 후난성 발전개혁위원회 등 여러 부처가 「후난성 학령 전 교육 발전 제고 행동 계획(2022~2025)(이하 계획)」을 발표함. 전 지역을 합리적으로 포괄해 공익을 증진하는 학령 전 교육 공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유치원의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연계 메커니즘을 형성하는 것이 본 계획의 목표임.
- 각 지역은 영리성 유치원 운영 허가 시 엄격히 심사해야 하며, 보혜성 유치원 배치를 개선해 보혜성 교육자원이 도농지역에 고루 분포되도록 해야 함.
- 인구 밀집 지역, 인구 부족 지역이 실정에 맞게 공공 자원을 확대하고, 지역마다 공립 유치원이 운영되도록 지원할 것임. 정부 기관, 국유 기업, 군대, 농촌 단체 등이 공립 유치원을 운영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학령 전 교육 과밀 학급 현상을 점차 해소해나갈 것임.
- 유치원은 국가적 요구에 따라 적절한 교구를 갖춰 게임 위주의 수업을 진행해야 함. 각지는 시범 유치원, 우수 유치원의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고 도시와 농촌의 공생 모델을 구축해 도시와 농촌 간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령 전 교육의 균형 발전과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야 함.
-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 메커니즘을 강화할 것임. 이를 위해 초등학교 입학 준비와 입학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선행학습과 같이 유아의 심신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를 바로 잡을 것임.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협업 메커니즘을 구축해 교육과정, 교수학습, 관리감독과 교육 연구 분야에서의 교류를 활성화할 예정임.
- 유치원은 실험반, 취미반, 방과후 수업,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수업 등 특색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교육비 외 비용을 수납할 수 없음. 또한 유치원 입학과 연관된 금전적 후원을 받을 수 없음.

2022년 12월 23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53014851477657429&wfr=spider&for=pc>

● 임신·출산지원

1. 세 자녀 정책 시행 후 지자체 현황

- 세 자녀 정책이 시행된 이후, 많은 지역에서 출산지원정책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음. 지금까지 30개 성에서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를 개정하였고, 18개 성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발표함.
- 최근 산둥성에서는 ‘산둥성 인구 및 가족계획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본 개정안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장려책(인센티브)과 사회적 보장 부분 조항이 수정되었는데, 법률과 본 조례가 규정한 내용에 맞게 자녀를 낳은 부부는 국가에서 규정한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여성 근로자는 출산휴가 60일, 배우자는 15일 이상의 돌봄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음. 또한 자녀가 만3세 이하라면 부모는 각 연 10일 이상의 육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최근 충칭시는 ‘출산장려정책 개선과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에 관한 실시 방안’을 발표함. 이 방안에 따르면, 아동 기본 의료 보장 범위를 넓히고, 신생아 보험 가입 정책을 개선하고자 함. 신생아는 생후 90일 내 관련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출생일부터 발생하는 의료비용은 의료보험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의료보험에 가입한 아동의 입원비 공제 비율은 성인보다 5%p 높음.
- <중국 인구신문> 보도에 의하면, 많은 지자체에서 출산과 양육 관련한 휴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출산휴가는 대체로 158일 이상, 배우자 동반 출산휴가는 약 15일, 부모 육아 휴가는 5~20일인 것으로 파악됨.
- 또한 특색 있는 정책으로, 길림성은 결혼과 양육 신용대출을 지원함. 혼인신고를 완료한 조건에 부합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은행에서 최고 20만 위안까지 소비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자녀 수에 따라 금리 혜택이 달라짐.

- 후난성은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낳은 미성년 자녀의 의료보험 비용을 직장의 노조 경비에서 제하도록 함. 만 14세 이하 아동은 유효한 증명서를 소지 시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2022년 07월 31일

출처: <https://baijiahao.baidu.com/s?id=1739860499312630861&wfr=spider&for=pc>

2.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보고서에 기재된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 정책 체계 구축”

- 중국 공산당 제19차 당대회 보고서에 “출산·양육 정책과 경제·사회 정책의 연계성을 촉진하고 인구 발전 전략 연구를 강화한다”는 목표를 발표함. 제20차 보고서에는 이를 바탕으로 “출산·양육 지원 정책 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함. 구체적으로는 인구 발전 전략을 개선하고 출산·양육 지원 정책 체계를 구축해 출산, 양육, 교육 비용을 절감할 계획임.
- 중국 인구학회 위안신(原新) 부회장은 공산당이 중국의 인구 변화 추세에 주목하고 있으며 출산·양육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기존 정책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루어 질것이라고 분석함.
- 중국 인구학회 부회장에 따르면, 출산·양육 정책 체계는 기본적인 틀을 갖춘 상태이며, 주요 해결 과제는 영유아 돌봄 수급, 출산 의지와(신체적) 능력, 양로 서비스 체계 개선에 관한 문제이며 앞으로는 정책을 개선하고 현장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함.
- 2019년, 국무원이 발표한 <3세 이하 영유아 돌봄 서비스 발전에 대한 지도 의견>에 따르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혜성 영유아 돌봄 서비스 기관을 우선 지원하고 육아로 휴직한 부모가 직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힘. 이에 각지에서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해 실시하기 시작함. 성급 정부의 경우 유연근무제, 근무 시간 감축, 원격 근무 등 대안책을 내놓음.
- 중국사회과학원 사회학연구소의 탕쥘(唐鈞) 연구원은 두 자녀 정책을 전국적으로 시행한 이후, 두 자녀를 키운 경우가 적지 않았지만 세 자녀 정책에 대한 호응도는 전과 같지 않았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경제적 압박, 양육 스트레스, 개인의 업무 스트레스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함.

- 국가인구와 계획생육 위원회의 인구전문가 위원인 펑시저(彭希哲)에 따르면, 각 성급과 도시급 정부의 출산·양육 지원 정책은 지역사회의 경우 돌봄, 교육부의 경우 학령전 교육을 담당하는 등 대부분 부처별로 나뉘어 있다고 분석함. 또한 상하이 정부가 아직까지 정책을 발표하지 않은 이유는, 예산 확보 방안, 예산 규모, 출산·양육 관련 휴가에 쓰이는 비용 책임 주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힘. 그러나 어떤 정책을 시행하든 “출산·양육 지원 정책 체계 구축”이라는 목표를 단순 출산율 제고보다는 중국인이 새로운 시대에 마땅히 누려야 할 공공복지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함.
- 상기 목표를 출산율 제고로만 이해한다면, 출산율이 단기적으로 높아지지 않았을 시 정책이 실패했다고 판단하게 됨. 그러나 유럽과 미국, 동아시아 지역 등 출산 장려 정책을 오랫동안 시행해온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투입(input) 만큼 결과(output)가 나오지 않고, 직접적인 경제적 장려책이 출산율 제고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출산율을 출산·양육 정책의 유일한 성공 기준으로 보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고 밝힘.
- 위안신 역시 인구학 관점에서, 출산율은 완만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당장 발표한 정책을 통해 눈에 띄는 출산율 제고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함. 그는 중국의 출산율 저하는 필연적인 결과로 출산·양육 규제를 점차 완화하였지만 출산율은 감소 추세에 있다고 분석함. 그러나 인구 감소 성장은 일종의 인구 현상에 불과하며 현 상황이 문제로 악화되기 전에 적극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함.

2022년 10월 19일

출처: <https://view.inews.qq.com/wxn2/20221019A060L300?qq=2177152835>

3. 중국 우한시, 출산 보험 제도 개편

■ 출산 보험 제도를 개선

- 중국 우한시 의료보험국은 출산·양육 지원책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와 성급 부처 정책에 발맞춰 출산 보험 제도를 개선하였음.
- 구체적으로 여성 근로자의 출산·양육 관련 진료 시, 기존의 등록 과정을 삭제하고 남자 근로자의 미취업 배우자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출산·양육 관련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함. 또한 출산·양육 지원금 수령 시 혼인 증명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됨.

■ 현재 성급 의료보험정보서비스플랫폼은 관련 내용을 업데이트한 상황임.

1) 여직원의 출산·양육 관련 진료 시 등록 과정 삭제

- 분만 혹은 임신중절 수술 시 앞으로 출산·양육 진료 등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으며, 본인의 전자 의료보험증 혹은 사회보장카드를 지참해 지정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출산 보험제도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현 규정에 따르면, 개인은 출산 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나 우한시 출산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여성 프리랜서, 여성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는 규정에 따라 출산·양육 관련 의료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그러나 여성 프리랜서와 여성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는 출산·양육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음.

2) 남직원의 미취업 배우자도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출산·양육 진료 가능

- 우한시의 남직원이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배우자가 미취업 상태일 시 출산·양육 진료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함.
- 우한시 보험에 가입한 남직원의 미취업 배우자는 임신 진단을 받은 뒤 분만 또는 임신중절 수술을 실시할 경우, 사전에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료를 등록할 수 있음.
- 진료 승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배우자는 남직원의 전자 의료보험증 혹은 사회보장카드를 지참해 지정 병원에서 발생한 출산·양육 치료 비용을 결제할 수 있음.

3) 출산·양육 지원금 수령 시 혼인 증명서 지참 불필요

- 우한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직장은 근로자 출산 휴가, 산후조리 휴가 이후 3달 안에 관할 구의 의료보장 처리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금 수령 절차를 밟아야 함.
- 작년 후베이성에서 발표한 의료보장 서비스 관련 요구사항에 따르면, 보험가입자는 출산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 국가, 성급과 지방의 출산·양육 정책을 따라야 함. 관련 부처는 데이터 공유 범위를 확대해 증명서류를 상호 제공할 예정임. 성급 의료보장 업무 처리 플랫폼이 다른 부처를 통해 증명서류를 받을 수 없다면 업무담당자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마저 어려운 경우 개인이 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 얼마 전 국가와 후베이성의 정책에 따라, 우한시는 보험 가입 직장 혹은 개인이 의료보장 처리 기관에서 출산·양육 지원금을 수령하고 혼인 증명서 대신 개인이 서면으로 서약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절차를 개편함.

2022년 10월 12일

출처: <https://new.qq.com/rain/a/20221012A06PXY00>

❖ 코로나19

1. 중국 일부 지역, 유·초·중등학교 코로나19 정책 조정

■ 광저우

- 광저우 지역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고등학생의 경우 자발적으로 오프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고, 학교에 오지 못한 학생을 위해 온라인 수업도 동시에 진행함.
-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온라인 수업을 실시함.
-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학년은 온라인 기말고사를 실시하고 학교 실정에 맞게 시험 난이도를 조절해야 함.

■ 난징

- 난징 지역은 2022년 12월 19일부터 등원을 중지함. 기관은 온라인 가정교육 지도를 강화해야 함.
-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은 모두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함. 중3, 고2, 고3 학생은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야 하나 원하는 경우 재택학습을 신청할 수 있음. 재택학습인 경우 오프라인 수업 생중계 혹은 녹화 수업을 제공할 수 있음.
- 가정 돌봄이 어려운 학생과 유아는 학교와 유치원에 갈 수 있음.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온라인 수업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보육시설, 유치원은 보육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직업학교, 특수교육학교는 초·중등학교 방안을 따르면 됨.

■ 쉐저우

- 쉐저우 지역은 2022년12월 19일부터 등원을 중지함. 가정 돌봄이 어려운 유아는 등원 신청을 할 수 있음. 각 관련 유치원은 돌봄 학급을 개설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수업을 선택할 수 있음.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오프라인 수업을 실시하되 원하는 경우 재택학습이 가능하며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제공함.
- 일선 학교는 온·오프라인 수업이 동일한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재택인 학생이어도 외출과 모임이 가능함. 등교한 학생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교직원과 학생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 할 예정임. 직업학교는 초중등학교 방안을 따르면 됨.

2022년 12월 17일

출처: <https://news.sina.cn/gn/2022-12-17/detail-imxwywmi0394949.d.html>

❖ 기타

1. 산시성, 여성발전계획과 아동발전계획(2021-2030) 발표

- 산시성은 여성발전계획(2021-2030)과 아동발전계획(2021-2030)을 발표 하였고, 시와 현에서도 산시성이 발표한 계획을 근거로 현지 실정에 맞는 여성 및 아동발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임.
- 여성발전계획(2021-2030)은 여성의 생애주기 전반에 양질의 보건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음.
- 산시성은 여성의 생애주기별 특징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사춘기와 갱년기를 대상으로 한 보건 서비스 모델을 수립할 것임. 또한 생식 건강 관련 서비스를 단계별 여성 건강 관리 시스템에 포함해 생애주기별 수요를 맞출 예정임.
- 더불어 임신부와 영아 사망의 감소와 예방을 목표로 임신 및 출산기 보건 서비스의 퀄리티를 보장하고 임신 위험 경보 시스템, 5등급 관리 시스템 및 협진 등 핵심 제도를 표준화하여 산전 상담, 산후 재활 등 임신과 출산 모든 과정을 아우르는 서비스 체계를 개선할 방침임.

- 산시성은 또한 여성 건강 전면 촉진을 목표로 자궁경부암과 유선암 검사를 주로 하는 여성 건강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HPV 백신 접종, 자궁경부암 검사, 진단과 치료를 연결해 여성 자궁경부암 3등급 예방과 종합 치료 모델을 연구할 예정임. 마지막으로 이번 여성발전 계획은 지원자 대상 성차별을 예방하고 <산시성 여직원 노동 보호 특별 규정>을 실천하며 여직원의 안전과 보건, 특히 임신, 출산, 수유 기간에 보호를 강화하고자 직장의 고용 행위 규범을 마련함.
- 아동발전계획(2021-2030)은 영유아 건강에 주안점을 두고 아동 공공보건 서비스와 관리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아동의 공공의료 자원 사용 효율을 높이고 아동 눈 건강과 시력 검사 강화로 아동 근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 아동 면역 계획을 시행하여 예방접종 관리를 표준화하고 전 과정 모니터링 검사 제도를 구축할 방침임. 그리고 건강, 영양, 반응적 훈육, 조기학습, 안전 등 방면에서 더욱 다양한 영유아 발달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질을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임. 이를 통해 부모가 건전하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도록 돕고 양질의 영유아 서비스 제공 범위를 빈곤 지역, 농촌 지역까지 확장해 아동 전체의 건강하고 전면적인 발달을 촉진하고자 함.

2022년 02월 02일

출처: http://www.shaanxi.gov.cn/xw/sxyw/202201/t20220114_2207394.html

2. 교육부, 교내 시력 검사 및 근시 예방 서비스 규범 발표

■ <아동 청소년 근시 예방 계획(2021-2025)>의 성과

- 교육부, 국가보건위원회, 시장감독총국 등 8개 부처가 공동으로 발표한 ‘아동 청소년 근시 예방 계획(2021-2025)’을 이행하기 위하여, 각 지역은 학생 시력 정기검사를 진행하고 학생 시력 건강 방안을 개선하여 시력 관리와 근시 예방 측면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보임.
- 그러나 무자격 업체가 교내에서 시력 검사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근시 예방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학생의 시력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함.
- 이에 교육부는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교내 시력 검사 및 근시 예방 서비스 규범’을 발표함.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무자격 업체의 교내 시력 검사 금지

- 각 지역 보건위생부처에서 학생 근시 등 흔한 질병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거나 교육행정부처에서 학생 건강검진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자격을 갖춘 검사 업체에 의뢰해야 함.
- 학교는 현지 교육 주무부처의 허가를 받은 후 학생 시력 모니터링 및 검사를 진행해야 함.

■ 허위 광고 금지

- 현 의료 기술로는 근시를 완치할 수 없음.
- 각지 교육행정부처는 보건위생부처 및 시장관리감독부처와 함께 근시 예방 건강 지식을 보급해야 함.
- 각지 시장관리감독부처는 아동 청소년 근시 예방 상품 홍보 시 ‘회복’, ‘근시 완치’, ‘근시 천적’, ‘도수 경감’, ‘각막 두께 회복’ 등 잘못된 표현을 사용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고 유·초·중등학교에서의 관련 상업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해야 함.

■ 근시 예방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 확보

- 학생 시력의 이차적 훼손을 막기 위해 검증되지 않은 근시 예방 상품과 관련 서비스를 학교에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됨. 근시 예방 관련 상품의 품질과 시력 건강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교실 조명, 학습용 스탠드 등 건강 조명 상품, 인체공학 의자와 책상, 시력 교정 상품, 학용품, 시력 측정 서비스 등을 대상으로 상품 품질 인증 제도를 시행할 것임. 또한, 정부, 업계, 사회 등 다층적인 인증 체계를 마련해 인증된 시력 교정 상품과 서비스를 홍보할 것임.

■ 시력 모니터링 데이터 보안 강화

- 모니터링 담당 부처, 학교와 시력 검사 기관은 데이터 수집, 저장, 전송, 처리, 응용 등 생애주기 전반에서 데이터 보안과 개인 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함. 학생 개인 정보 및 시력 정보를 사적으로 유출하거나 제3자와 상업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며 심각한 사안인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자 책임을 물을 것임.

■ 시력 검사와 관련 서비스에 대해 엄격 지도

- 각지 교육행정부처, 보건위생부처와 시장관리감독부처는 공동 협력하여 시력 검사자의 자질, 검사 과정과 방법, 품질 관리 및 근시 예방 상품과 서비스 제공 상황 등에 대해 단속 지도해야 함. 또한 사실을 왜곡하거나 책임을 회피한 기관에 대해 엄벌하고 심각한 사안의 경우 책임자에 대해 법적 책임을 추궁할 것임.

2022년 02월 17일

출처: http://www.moe.gov.cn/srcsite/A17/moe_943/s3285/202202/t20220224_601943.html

3. 후난성 고등법원, 여성과 아동의 권익 침해 범죄를 소탕하고자 특별 재판 활동 전개

- 후난성 고등법원은 <여성과 아동의 권익 침해 범죄를 소탕하기 위한 특별 재판 활동 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하고 후난성 전역의 기층법원, 중급법원, 고등법원에서 특별 재판 활동을 전개함. 이를 통해 여성과 아동에 대한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여성과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엄벌해 여성과 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 방안에 따르면, 형사재판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여성과 아동 권익을 침해한 범죄자를 엄벌하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또한 사안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 여죄를 발견하는 등 사안 조사에 만전을 기해야 함. 그리고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침해한 범죄를 심판하는 재판 체계를 개선하여 여성과 아동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함. 아울러 근본적 해결을 위해 정치+법 혹은 사회 윈스톱 체계를 구축해 종합적인 범죄 예방을 꾀하고자 함.
- 최고인민법원(대한민국의 대법원에 해당)은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인신매매를 저지른 범죄 집단의 주요 인물, 범죄를 계획한 자, 가담한 자, 인신매매 전과 등 심각한 범죄자에게 중형 또는 사형을 내릴 수 있음.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또는 인신매매 범죄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인신매매 과정에서 강간, 고의적 상해, 모욕 등 범죄가 발생한 경우 통합 처벌함. 각급의 법원은 여성과 아동의 권익을 침해한 범죄 사안을 처리할 때 법정기한을 준수해야 하며 심판의 효과와 법정 신고 비율을 제고해 법의 범죄 억제력을 강화해야 함.
- 또한 후난성 전역의 법원은 공안, 검찰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현지 정부, 교육, 부녀연합회 및 현장 기구와 연계해 여성과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함. 사안 조사 및 사법 건의에 관한 장부를 마련하고 특별 조사를 진행해 여성과 아동 권익을 침해하는 범죄 사건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분석해야 함. 더불어 현행 법률과 유권 해석에서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제안해야 함.

- 후난성 고등법원은 여성과 아동 권익 전문 재판팀을 결성하였음. 각 중급 법원은 이에 상응하는 전문 재판 기구를 설립하고 전문 재판 활동 상황을 연말 평가에 반영해 전문 재판 활동이 여성과 아동의 합법적 권익 보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할 예정임.

2022년 03월 23일

출처: <https://hunanfy.chinacourt.gov.cn/article/detail/2022/03/id/6594937.shtml>

4. 광시좡족자치구, 요보호 아동 결연 사업 추진

- 광시좡족자치구는 농촌의 우수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2년 5월부터 12월까지 우수 아동* 등 '요보호아동'과 결연하는 '사랑의 부모'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우수아동: 부모가 도시의 일터로 떠나면서 농촌에 남겨진 아동

■ '요보호 아동'의 범위

- 각 지역의 부처는 지역 전체의 우수아동과 어려움에 처한 아동을 파악하고 위험 등급이 높은 아동을 선별해 아동 기본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임.
- 본 사업은 우수아동, 사실상 보호자가 없는 아동, 저소득 가정의 아동, 특수곤란 가정의 장애아동, 농촌 진흥 중점 관찰 가정의 아동을 우선함.

■ '사랑의 부모' 선발 방식

- 개인, 가정, 단체 모두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규모는 1만 명임.
- 단체의 추천과 개인의 자발적 지원을 통해 '사랑의 부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임.

■ ‘사랑의 부모’ 지원 자격

- 정치적 입장이 확고해야 함.
- 도덕적 소양과 사회적 책임감을 지녀야 함.
- 범죄기록이 없어야 함.
- 미성년자 보호 관련 지식을 갖춰야 함.

■ ‘사랑의 부모’ 결연 방식 및 활동 내용

- ‘사랑의 부모’와 수혜 아동은 상호 동의를 바탕으로 일대일, 일대다, 다대일의 방식으로 결연함.
- ‘사랑의 부모’는 아동, 보호자 또는 학교에 연락하여, 해당 아동의 가정 배경, 일상행황, 학업성취, 신체적 건강 등 기본 사항을 파악하고, 아동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함.
- ‘사랑의 부모’는 결연후원 과정에서 아동이 교육, 의료, 지원 등 정책적 혜택을 실제로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아동의 권익침해 여부를 살펴야 함.
- 그 밖에 정서 지지, 심리적 건강 증진, 신체 안전 교육, 경제적 후원, 명절 안부 묻기 등을 통해 아동을 도와야 함.

2022년 05월 27일

출처: <http://www.chinanews.com.cn/sh/2022/05-27/9765390.shtml>

5. 푸젠성, 학생의 수업시간 중 휴대폰 소지 금지 법안 통과

- <푸젠성 유·초·중·고교생의 수업 시간 중 휴대전화 소지 금지에 관한 규정>이 통과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규정에 따르면, 유·초·중·고교생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를 소지할 수 없음. 반드시 휴대전화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 보호자가 학교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소지를 허가 받게 되

면, 학교에서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걷어 일괄 관리함. 학생이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 교사가 대신 휴대전화를 보관하되 보호자에 이러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여야 함.

- 학교는 학생이 통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휴대전화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해, 일상적으로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를 관리해야 함. 교육행정부서는 학교가 규정을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교육감독부서는 학교의 휴대전화 관리 상황을 감시해야 함.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에 공중전화가 마련되어 있고 학생은 교사의 교무실 전화기와 휴대전화를 통해서도 보호자와 연락을 취할 수 있음.
- 본 규정은 학생 생활 지도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별도의 벌칙은 설정하지 않았음. 따라서 일선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이 선호하는 휴대전화 관리 방식을 채택해 상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

2022년 07월 29일

출처: <https://www.163.com/dy/article/HDEC1KHJ0550CBNY.html>

6. 원난성, 미성년자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정안 통과

- 원난성은 미성년자를 범죄에서 보호하기 위해 '원난성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실시 방법'과 '원난성 미성년자 범죄 예방 조례' 개정하기로 함. 개정안은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원난성 인민대표회의 법제위원회 장링 부주임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부터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이 시행되었고, 이는 미성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음.
- '원난성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 보호법」 실시 방법'(이하 '방법'으로 지칭)은 1997년 6월 1일 시행 이래 원난성 미성년자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함.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당면한 과제가 변화하면서, 미성년자 보호 작업 시스템 미비, 사이버 보호 측면에서의 전반적인 결함, 가정과 학교의 아동 보호 규범의 한계, 사회와 정부의 보호 조치 미흡 등 문제가 드러남.

- ‘방법’ 개정안은 총 51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기존 법안에서 대폭 개선됨. 미성년자 보호 권리와 업무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자의 인신권(인격권, 신분권), 교육기본권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은 법적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단체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미성년자의 생존권, 발전권, 피보호권, 참여권 등 권리는 법적 보호를 받으며, 그 어떤 단체나 개인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변경됨.
- 또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보호 내용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였으며, 미성년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의 보호책임을 세분화하여 교육과 양육, 안전 보장 측면에서 학교와 유치원의 보호 의무를 강화함.
- <원난성 미성년자 범죄 예방 조례> 개정안은 교육과 보호를 연계하는 차원에서 미성년자 불량 행위에 대한 개입, 교정, 재발 예방 조치를 등급으로 세분화함. 또한 상위법에서 “불량 행위”와 “심각한 불량 행위”의 차이를 구분함.
- 이 외 개정안에 “미성년자의 인격과 존엄을 존중하고, 미성년자의 명예권,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등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함.

2022년 08월 23일

출처: <http://education.news.cn/20220823/5d03c4b4260042ecbd3e8a736d9b7748/c.html>

7. 산둥성, <제14차 5개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 계획> 발표

■ <제14차 5개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 계획> 수립 계기

- 특수교육은 국가 교육시스템의 중요한 구성요소임. 양질의 특수교육은 사회적 형평성 개선에 필요한 것이며 사회 발전 수준을 나타냄.
- 산둥성은 특수교육을 중시하며 국가 정책에 따라 2번의 특수교육 개선 계획을 시행해 특수교육의 발전을 도모하였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임.
- 2021년 기준, 산둥성 전역에서 의무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은 99.48%로 장애아동교육권이 비교적 잘 보장됨.

- 그러나 교육 분야에서 여전히 특수교육이 취약한 부분이고 지역 간, 지역 내 발전 불균형 현상이 존재하기에 특수교육 보장 수준과 교육의 질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14차 5개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 계획>을 수립하게 됨.

■ <제14차 5개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 계획>의 목표

- 새로운 발전 단계를 수립해 특수교육 발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개선해 장애아동의 자존감, 독립성, 자립 능력을 증진해 최대한의 발전을 이루는 것임.
- 본 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15년간 무상 특수교육을 전면 보급하고, 장애아동의 의무 교육 입학률을 99%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임.
- 비의무교육 단계에서의 특수교육 규모를 확대하고 일반교육, 직업교육, 의료재활, 정보기술과 특수교육을 접목해 교육의 질적 발전, 경비 보장 체제 개선, 교사 역량 증진 나아가 양질의 특수교육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

■ 구체적인 실현 방법

- 일반교육, 직업교육, 의료재활, 정보기술과 특수교육을 융합해 2022년 말 현(縣)급 특수교육을 모두 현지 일반교육에 포괄하고 제14차 5개년 기간 동안 직업교육 특색 전공 30개, 의료재활을 접목한 특색 업무 기지를 10곳 설립할 예정임.
- 제14차 5개년 기간 동안 모든 특수교육을 대상으로 학교평가를 진행할 예정임. 각 학교는 교수 및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각급의 교육연구부서는 최소 1명 이상의 특수교사를 배치해야 함. 그리고 성(省)급 장애인 교육전문가지도위원회를 설립하고 학교와 과학 연구, 의료, 재활 등 시설과 함께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업무 시스템을 구축할 것임. 또한 특수교육 자원센터를 동네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보급해나갈 예정임.
- 장애아동 입학 연동 작업 시스템을 정비해 학습 능력을 갖춘 장애아동의 수업권을 보장할 것임. 산동성 안에 시청각 장애특수학교를 세우고, 성에 국한되지 않는 특수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할 것임. 또 모든 특수학교가 유치원을 병설하도록 추진하고 직업교육을 주로 하는 고등학교 단계의 특수교육 발전에 주력하여 시·현에 소재한 특수학교 모두 중등 직업교육반을 설치하고 중등 직업학교에서는 특수교육반을 설치하도록 할 것임.

- “특수학교 평가 사업”을 시행해 2025년까지 산둥성의 모든 특수학교가 성급 평가 기준에 부합하게 할 것임. 2025년까지 인구가 20만 명 이상인 현/시/구는 특수학교를 설립할 것이고, 인구가 500만을 넘는 도시의 경우, 자폐 스펙트럼 전문 특수학교를 세워야 함. 또한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해 2025년까지 의무교육 단계인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경비 보조금 기준을 9,000위안까지 상향할 계획임.
- 가정과 학교가 협력하는 교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아동 가정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체계를 마련할 예정임. 그리고 여러 부처가 공조하는 특수교육 추진 체제를 구축하고 각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특수교육의 개혁과 발전에 이로운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임.

2022년 09월 13일

출처: http://edu.shandong.gov.cn/art/2022/9/13/art_11992_10304491.html

호주

일·가정 양립		
1	호주, 2026년까지 6개월 유급 육아휴직 제공	197
양육지원		
1	2023년부터 퀸즐랜드 가정, 아동보육비 수천달러 절감	198
2	뉴사우스웨일즈 학부모, 생활비 부양을 위해 150달러 '개학준비' 바우처 지원	199
유아교육·보육		
1	유치원 개혁 자금지원 협정서 발표	200
2	뉴사우스웨일즈주 가족과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지원변화	201
3	2023년부터 유아교육 및 돌봄 분야 유인책 변경	202
코로나19		
1	코로나19와 영유아 보육 및 교육	203
기타		
1	장애와 포용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204

❖ 일·가정 양립

1. 호주, 2026년까지 6개월 유급 육아휴직 제공

- 호주 정부는 기존 유급 육아휴직 제도(Paid Parental Leave Scheme)에 6주를 추가하여 자녀가 있는 부모(호주국적)가 육아를 위하여 휴직할 경우 6개월 동안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발표함.
- 현재 호주에서 새롭게 부모가 된 경우, 주양육자는 18주의 유급 육아 휴가와 2차 양육자는 2주간의 보조 보육 휴가를 받을 자격이 있음. 두 휴가 모두 국가 최저 임금과 동일한 비율로 지급됨.
- 정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유급 육아휴직이 2026년 7월에 전체 26주에 도달 할 때까지 매년 2주씩 기간을 늘릴 것을 제안함. 안토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총리는 새롭게 부모가 된 이들에게 경제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함. 안토니 알바니즈 총리는 “이것은 현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정책임. 육아 휴직에 투자하는 것은 생산성 및 가족, 국가 전체에 이롭다. 보다 관대하고 융통성 있는 유급 육아휴직은 모든 부모가 원하는 지원이며, 더 많은 선택권과 더 나은 지원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함.
- 아만다 리쉬워스(Amanda Rishworth) 사회 서비스부 장관은, 여성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고 더 많은 아버지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우선과제라고 함. 리쉬워스는 또한 “유급 육아휴직기간의 확대는 부모와 아동에게 좋고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육아를 평등한 파트너십으로 대하는 것은 성평등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언급함.
- 호주 정부는 많은 부모가 유급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use it or lose it)’ 주간(week)을 유지할 것임. 아동의 중요한 초기 단계를 부모가 공유하고 양육 책임을 동등하게 부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발표함.
- 26주간의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한부모인 경우, 2인 부모에게 제공되는 휴가 전체를 받을 있음.

2022년 10월 15일

출처: <https://www.9news.com.au/national/australia-paid-parental-leave-to-offer-six-months-leave-by-2026/bf4d4294-b8ea-4499-9748-a210d6861e22>

☞ 양육지원

1. 2023년부터 퀸즐랜드 가정, 아동보육비 수천달러 절감

■ 퀸즐랜드 가정은 내년 2023년부터 수천 달러의 보육비용을 절감

- 10억 달러 규모의 주정부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육비 절감과 함께 보육 인력 부족 문제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임.
- 내년 2023년부터 시행되는 퀸즐랜드 주정부의 보육지원 프로그램은 내년 1월 1일부터 약 40,000가구의 가정이 무료 또는 저렴한 보육을 이용할 수 있음.
-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14,000여명의 취약하고 불우한 아동에게 보육을 무료로 제공하며, 26,000여명의 이들에게는 저렴한 보육 제공이 보장됨.
- 퀸즐랜드 교육부 장관은 “퀸즐랜드에는 약 58,000가구의 보육을 받는 아동이 있으며, 이 중 70%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자녀가 있는 가정의 상당 부분이 이번 조치로 도움을 받을 것으로 언급함.
- 이 프로그램은 2022년 2월에 발표되었지만 수혜 자격을 확인하고 절감액을 계산하는 웹 사이트가 현재 운영 중.
- 연간 소득이 약 60,000달러이고 호주정부 메디케어 의료 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가족은 무료로 유치원에 등록하여 매년 평균 4,5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음.
- 만약 아동이 종일보육(long-daycare) 센터에 다닐 경우 보육비는 더 저렴해질 수 있음.
- 부모의 소득이 최대 \$130,000인 가족은 연간 최대 \$500를 절약가능.
- 이는 이번 10월 연방 정부가 발표한 45억 달러의 아동 보조금 예산 계획과 함께, 생활비 부담을 안고 있는 퀸즐랜드 가정을 돕기 위한 또 다른 조치임. 또한, 보육 지원 프로그램에는 시골 및 벽지 지역에 더 많은 보육 교사를 유치하기 위한 3,850만 달러도 포함됨.

2022년 10월 30일

출처: <https://www.9news.com.au/national/childcare-queensland-cheaper-kindergarten/6565d330-4d1d-43c5-8294-9b22b82153c6>

2. 뉴사우스웨일즈 학부모, 생활비 부양을 위해 150달러 '개학준비' 바우처 지원

- 뉴사우스웨일즈주(NSW) 전역의 학부모에게 증가하는 생활비 압박을 돕기 위해 150달러 상당의 '개학준비' 바우처가 발행될 예정임.
- 12월 11일, NSW 도미니크 페로테(Dominic Perrottet) 총리는 바우처 지원으로 인해 교과서, 교복, 문구류 및 기타 학교 필수품에 대한 예산 절약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가계 재정에 활력을 줄 것이라고 발표함.
- 12월 12일 오전 8시부터 학부모는 'Service NSW 앱'을 통해 자녀 한 명 당 50달러 바우처 3개를 다운로드 할 수 있음. 바우처는 등록된 500개 이상의 사업체에서 가방, 신발, 도시락 등과 같은 제품 구매에 사용 가능함. 바우처 이용기간은 6개월임.
- 페로테 총리는 “연말은 크리스마스와 가족 휴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가정에 예산이 많이 드는 시기이다. 따라서 NSW 정부가 생활비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바우처에 1억 9,3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이유이다.” 라고 말함.
- 빅터 도미니엘로(Victor Dominello) 고객 서비스부 장관(Minister of Customer Service)은 “바우처 신청은 간단하며 Service NSW 앱, 전화 또는 서비스 센터 방문을 통해 몇 분 만에 완료할 수 있다.”고 언급함.
- 부모와 아동 보호자는 온라인 비즈니스 찾기 도구(the online Business Finder Tool)를 사용하여 거주 지역에서 등록된 비즈니스를 검색할 수 있으며, 바우처는 한 번에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음.

2022년 12월 11일

출처: <https://www.9news.com.au/national/nsw-parents-given-150-back-to-school-vouchers-in-cost-of-living-boost/06a0e794-548a-4d52-83aa-7c5059212453>

❖ 유아교육·보육

1. 유치원 개혁 자금지원 협정서 발표

■ 유치원 개혁 협정

- 호주 연방정부와 모든 주 및 준주(territories)는 유치원 교육을 강화하고 학령 초기 학교 생활을 잘 준비하기 위한 유치원 개혁 협정에 동의함. 개혁 협정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4년간임.
- 2022년 연방정부는 각 주 및 준주의 입학 전 아동에게 주당 15시간(연간 600시간)의 무료 유치원 교육을 지원함.
- 호주 전역의 가족과 아동을 위한 형평성있는 자금 지원을 위한 개혁임.

■ 개혁안 의제

- 유치원 취원율과 출석률 향상이 주된 개혁안 의제이며, 유치원 교육의 더 나은 성과를 위해 28.7백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함.
- 전국적으로 이용 가능한 유치원 데이터의 품질과 투명성 개선을 위한 지원금임.
- 새로운 유치원 성과 프레임워크를 위한 개발비로 사용될 예정임.

■ 새로운 유치원 개혁안에 대한 기대

- AEDC(Australian Early Development Census)에 의하면, 학교생활이 준비되지 않은 아동의 수 10% 감소 될것임.
- 원주민 및 섬지역 주민 아동과 사회 취약계층의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2년 09월 23일

출처: <https://www.education.gov.au/child-care-package/preschool/preschool-reform-funding-agreement>

2. 뉴사우스웨일즈주 가족과 아동을 위한 유아교육보육 지원변화

■ 생애 초기를 위한 약속(The Early Years Commitment)

- “생애 초기를 위한 약속(The Early Years Commitment)”은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보육과 유아교육, 아동발달과 여성의 경제 참여를 위해 10년간 159억 달러를 투자하는 장기 프로젝트임.
- 아동의 생애 첫 2000일 동안 긍정적인 변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입증된 가족 및 아동 발달 프로그램을 주 전체로 확대함.
- 부모와 보호자의 보육 수요를 반영한 저렴하고 접근성 높은 유아교육 및 보육서비스를 지원함.
- 영유아를 위한 유아교육 보장 및 유아교육 서비스 질 향상
- 유아교육 및 보육인력을 위한 투자와, 해당 직업을 유망한 직업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 “생애 초기를 위한 약속(The Early Years Commitment)”의 핵심은, 모든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에 유치원에 취원하도록 하는 것임.

■ 단 한명의 아동도 소외되지 않도록 함(No child left behind).

- 유아보육 및 교육에 있어서 장애아동과 저소득층 아동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원주민과 섬지역 아동은 유아교육과 보육 중심에 있도록 지원해야 함. 뉴사우스웨일즈주 정부는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유아교육 서비스와를 연계하여 원주민 및 섬지역 아동과 가족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함.
- 뉴사우스웨일즈주 교육청과 유치원 교사, 보육 교사 및 서비스 기관과의 파트너십은 본 계획의 핵심요소임. “생애 초기를 위한 약속(The Early Years Commitment)”을 설계 및 구현할 때, 지역사회 및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와 광범위하게 협의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야 함.
- 뉴사우스웨일즈주는 모든 아동에게 저렴하고 높은 질의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둬. 특히 초등학교 입학 직전의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한 양질의 학교 준비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모든 아동은 가족의 상황이나 거주지역 상관없이, 동등한 출발선에 놓여질 자격이 있으며, 보다 저렴하고 질높은 보육과 유아교육, 돌봄을 받을 자격이 있음.

2022년 09월 29일

출처: <https://education.nsw.gov.au/early-childhood-education/early-years-commitment/about-the-early-years-commitment>

3. 2023년부터 유아교육 및 돌봄 분야 유인책 변경

-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아동이 센터 등록 시, 특정 유형의 유인책만 제공할 수 있음.
- 유인책(inducement)은 아동의 보육센터 등록을 확보하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인센티브임.
- 2023년 1월부터 유아교육·돌봄 서비스의 질이나 서비스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금전적 유인은 불가능함. 허용되지 않는 유인책의 예는 다음과 같음. - 현금 또는 상품권, 태블릿 PC, 기타 전자 기계 및 기타 선물
- 할인 또는 무료 돌봄의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게 유인책으로 제공 가능함. 하지만 부모에게 CCS(보육보조금, Child Care Subsidy)가 청구되는 경우 요금 할인을 정확하게 정부에 보고해야 함.
- 보육 서비스 제공자는 아동보육을 이용하기 원하는 가족에게 제공하는 보육 서비스를 광고할 수 있으며, 아동 및 가족의 센터 방문과 보육서비스 무료체험 형태의 답례 제공은 가능함. 또한 아동 가족이 서면으로 된 약정을 준수 할 시, 30달러 상당의 마케팅 상품을 발행할 수도 있음.
- 2023년 1월 1일까지 보육서비스 제공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함.
 - 허용되지 않는 유인책 제공 중단
 - 인쇄 및 온라인 마케팅 자료를 업데이트하여 허용되지 않는 유인책에 관한 정보 삭제

- 본 조치는 보육료의 투명성을 개선하고 공정한 아동 보육 시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정부 약속의 일환임.
- 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유인책을 계속 제공하는 보육제공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조치를 취할 예정임.
- 보육 서비스 제공의 조건부 승인, 위반 통지 및 처벌 발행, 보육 서비스 제공 정지 및 취소

2022년 11월 24일

출처: <https://www.education.gov.au/early-childhood/announcements/changes-inducements-2023>

❖ 코로나19

1. 코로나19와 영유아 보육 및 교육

-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상당한 지원을 제공함.

■ 갭 수수료 면제

-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영유아가 코로나로 인하여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 아동의 가족은 갭 수수료를 면제받음.

※ 갭 수수료란 호주 가족지원법에 의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보육보조금(CCS: Child Care Subsidy)이외의 나머지 비용을 가정에서 지불하는 것을 의미함.

- 호주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2023년 6월 30일까지 아동이 보육에 참여할 수 없는 세 가지 상황에 대해, 가정이 지불하는 갭 수수료를 면제하고 보육보조금(CCS)은 보육센터가 정부로부터 계속 받을 수 있게 지원하였음. 세 가지 상황은 다음과 같음.

- 1) 아동 또는 아동의 직계가족이 지난 7일 동안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 2) 아동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만약 코로나19 감염이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경우(장애가 있는 아동, 심각한 만성질환을 가진 아동, 원주민 및 토레스 해협 아동)
- 3) 보육센터가 코로나19로 인해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폐쇄해야 하는 경우(보육 교사나 교사의 직계가족이 코로나19에 양성 반응인 경우를 말함)

■ 결석

- 1년에 42일까지 아동이 보육센터를 결석해도 보육센터는 보육보조금(CCS)을 받았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1-22년 회계년도 동안(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과 2022-23년 회계년도 동안(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에는 52일까지 결석하여도 보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간이 늘어남.
- 아동이나 아동의 직계가족이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을 보인 경우, 52일 이외 추가 결석을 할 수 있음. 다만 의사 또는 코로나 검사센터로부터 코로나 19 양성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함.
- 아동이나 아동의 직계가족이 방과후 보육을 시작하기 7일 전(서비스 첫째날 포함)이나 마지막 7일(마지막 날 포함)에, 코로나19 양성이면, CCS가 보육센터로 지원되고, 이 기간은 아동의 부모가 깎 수수료를 면제받음.

■ 보육 서비스 중단

- 보육센터가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반드시 Provider Entry Point(PEP)를 통해 이를 보고해야함. 또한 해당 주 정부에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함. 만약 2022년 1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서비스의 종료 또는 보육센터가 일시적 폐쇄를 한 경우, Community Child Care Fund(CCCF) 특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또한 각 주 정부의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긴급 기간 동안의 보육센터 서비스 접근이 제한 될 수 있음.

2022년 09월 07일

출처: <https://www.education.gov.au/covid-19/childcare>

❖ 기타

1. 장애와 포용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

■ 장애 및 포용 프로그램

- 장애 및 포용 프로그램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아동이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일반 아동에게 지원되는 동일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뉴사우스웨일즈주(NSW) 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임.

- 2020년 통계에 의하면 NSW주의 4~5세 유치원 등록 아동 중 7.6%의 아동이 장애를 가진 것으로 보고됨.
- 약 85%의 보육교사가 장애를 가진 아동을 보육 중임.
- 일반 아동은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기술 습득 및 발달을 위해 초등학교 입학 전 연간 최소 600시간의 유아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함.
- 대부분의 장애를 가진 아동이 또래와 더 많은 참여활동 및 놀이와 행동에 관한 긍정적인 영향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본 프로그램 지원 목적

- 장애아동 및 추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또래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유아교육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 장애아동 및 추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유치원에 등록 중 또는 초등학교로 입학하는 과정에서 공평한 교육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
- 재정적 지원, 교육적 지원을 제공하는 NSW주의 국가 장애인보험제도(NDIS,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와 목적을 같이 하기 위함.
- 추가 학습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기 위함.

■ 서비스 지원 자격

- 비영리 센터이거나 이민자 거주 지역환경에 맞춘 보육기관.
- 국가 규정에 의해 승인된 유아교육 및 보육기관.
- 유아교육 프레임워크에 따른 자격을 갖춘 보육 교사가 설계한 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 해당 지원 보조금 약관과 지원금 수령방법에 대한 동의가 있어야 함.

2022년 12월 02일

출처: <https://education.nsw.gov.au/early-childhood-education/operating-an-early-childhood-education-service/grants-and-funded-programs/disability-and-inclusion-program>

프랑스

양육지원		
1	육아 지원 기술의 기초를 확립하는 임무 개시	209
2	국가 육아 지원 현장 발행	209
유아교육·보육		
1	2022년 개학 시즌의 새로운 소식: 초등학교에서 하루 30분 신체 운동	211
코로나19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보건 프로토콜(2022년 1월 기준)	212
2	겨울방학 이후 학교 보건 수칙 간소화	216
3	코로나 19: 마스크 착용, 검사 등 3월 14일부터 변경사항	217
기타		
1	흔들린 아이 증후군 예방을 위한 캠페인	218
2	입양 개혁을 공식 저널에 발표함	221
3	우크라이나 학생 수용을 위한 유럽연합 행동 계획	224
4	아동=평등(Enfance=Egalité) 훈련 계획: 보육전문가가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225
5	효율적이고 공정한 유럽 교육 시스템을 위한 투자: 유럽 연합의 잠재적 성장과 사회적 회복력에 대한 도전	226
6	4세부터 12세 아동에게 수영 무료 강습 실시	227
7	개학보조수당, 장애아동교육수당을 지급받는 가정에 Pass' Sport 지급	228

☞ 양육지원

1. 육아 지원 기술의 기초를 확립하는 임무 개시

- 2021년 5월 19일 가족 지원 서비스에 관한 조례로 규정된 ‘국가 육아 지원 현장’이 2022년 3월 9일에 발표됨. 본 현장은 공공 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육아 지원 활동에 참여한 모든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함.
- 육아 지원 전문가와 육아 지원 관계자를 대표하는 연맹 및 가족, 아동 및 고령화 위원회(HCFEA)와 협의하여 작성된 이 현장은, 공공 자금 지원을 받는 육아 지원 활동을 위한 8가지 주요 원칙을 설정함. 이 현장은 가족의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된 직업적 정체성의 조건을 규정함.
- 국가 육아 지원 현장의 여덟 번째 원칙은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는 육아하는 부모에게,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을 제공하며, 경험 공유와 사례 분석의 시간을 보장하는 것”임.
- 이러한 맥락에서, 아동가족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사회통합 국장은 Anne Raynaud(부모-자녀 관계 정신과 전문의, 육아 연구소 Instituts de la parentalité 설립자)와 Charles Ingles(임상 심리학자, 지롱드 CAF의 육아 정책 책임자)를 임명하여 양적, 질적 데이터에 기초하여 육아 지원 전문가와 자원봉사자의 공통 역량을 파악하고, 이러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한 권고안을 개발할 예정임.

2022년 05월 20일

출처: <https://solidarites-sante.gouv.fr/affaires-sociales/familles-enfance/soutien-a-la-parentalite-10875/article/lancement-d-une-mission-visant-a-definir-un-socle-de-competences-en-matiere-de>

2. 국가 육아 지원 현장 발행

■ 국가 육아 지원 현장 발표

- 2022년 3월 9일에 국가 육아 지원 현장이 발표됨. 본 현장은 공공 자금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육아 지원 활동에 적용될 8가지 원칙을 설정하며, 육아 지원 분야의 기초가 됨.

- 현장은 육아 지원 전문가, 육아 지원 행위자를 대표하는 연맹, 가족, 아동 및 고령화 위원회(HCFEA)와의 협의 결과임.
- 가족 서비스는 가족 정책의 이차적인 활동 수단으로, 재정 지원과는 구별되면서도 보완적임. 가족 서비스는 두 개의 틀로 이루어짐.
 - 1) 영유아 보육 방식
 - 2) 육아에 대한 지원

■ 육아 지원 서비스

- 육아에 대한 지원은, 가족의 현재 상황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가족이 직면한 어려움을 예방하기 위해 지원될 수 있는 사회적 투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완전한 공공정책이 됨.
- 육아 지원 서비스는,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함. 자녀의 1차 교육자로서의 부모 역할, 즉 경청, 지원, 조언 및 정보 활동을 통해 동반되는 모든 활동, 그리고 부모 간의 상호 지원 및 교류를 촉진하는 활동으로 정의됨.
- 가족 담당 장관의 명령에 의해 발행된 국가 육아 지원 현장은 육아 지원 조치에 적용되는 원칙을 설정하고 있음(사회행동 및 가족에 대한 규정 L. 214-1-2).

■ 부모 지원 8대 주요 원칙

- 부모의 역할, 기술 및 역량을 우선적으로 인식하고 우선순위를 정함. 지원은 부모의 자원과 능력을 기반으로 하며, 부모의 자원과 능력에 맞추어 지원내용 구성됨. 지원은 판단, 편견, 명령,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비와 경청에 의한 것임. 또한 동료들 간의 상호 지원을 장려함.
- 가족 상황, 사회적 배경, 환경, 거주지, 장애 유무 또는 문화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함. 양육 지원은 각 부모의 개별성을 고려하면서도 전 지역에서 보편적 관점으로 모든 가족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
- 자녀와 부모 자신의 행복을 위해,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상관없이, 가족생활의 모든 차원과 전체 맥락을 통합하여 부모를 지원함.

- 자녀의 출생 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동행과 지원을 제공함. 조기 대처를 통해, 취약점, 어려움을 예방, 예측 할 수 있음.
- 육아와 가족 영역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 원칙을 존중함. 육아 지원 활동과 부모 지원은 부모 또는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고정관념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함.
- 어떤 가족 구성이든, 가능한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서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또한 부모만이 자녀 돌봄과 교육에 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인적 자원(조부모, 양부모, 복합 가족 등)이 육아 지원 활동에 참여 할 수 있음.
- 정치적, 철학적, 종교적 중립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전 지역의 모든 가족이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단체 또는 개인적 지원, 이동 중인 장소에서의 지원 또는 주거지에서의 지원 등)을 제안함.
- 전문가와 자원봉사자는 육아 하는 부모에게,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공유하고 교육을 제공하며, 경험 공유와 사례 분석의 시간을 보장해야 함.

2022년 05월 22일

출처: <https://solidarites-sante.gouv.fr/affaires-sociales/familles-enfance/soutien-a-la-parentalite-10875/article/publication-de-la-charte-nationale-de-soutien-a-la-parentalite-431755>

❖ 유아교육·보육

1. 2022년 개학 시즌의 새로운 소식: 초등학교에서 하루 30분 신체 운동

- 2022년 9월부터 초등학생은 의무적으로 하루 30분 신체 활동을 실시해야 함. 신체 활동의 형태는 시설 및 구조, 활동 내용(줄넘기, 계주, 공놀이 등)에 따라 다양함.
- 이 조치의 목적은 아동 및 청소년의 움직이지 않는 습관(좌식생활)과 비만을 방지하는 것임. 2020년 9월부터 7,000개 학교에서 시범사업을 실행하였으며, 2024년 파리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목표의 일부임.
- 왜 시행하는가. 건강한 신체는 공부(학습)를 위한 기본 전제 조건임. 이 계획은 학교 프로젝트 내에서 모든 교육 활동과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계획을 연결하는 “건강 증진 학교” 접근 방식의 일환임.

- 2024년 파리올림픽조직위원회(OCOG)의 경우, 이 계획은 “2024 세대(Génération 2024)” 프로그램(*학교 교육과 체육 활동의 교류를 통해 학생의 체육활동을 증진하는 프로그램)의 일부이며, 아동의 운동 기술 및 신체 능력 개발을 촉진하여 어린이가 올림픽 및 패럴림픽 종목에 흥미를 갖게 만드는 데 기여함.
- 구현 방법: 체육 및 스포츠 교육(EPS)과는 구별되는 이 대책은, 학생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공유된 목표 중심으로 운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하루 30분 신체 활동”의 형태는 다양하며, 각 학교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 활동 시간은 학교 교과 시간 뿐 만 아니라, 방과후 시간에도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음.
- 일상적인 신체활동은 기존 환경에 기초되어야 함. 운동복은 불필요하며, 학교 운동장, 학교 시설 및 학교 주변이 우선적으로 사용될 것. 교육 공동체 관계자(교사, 교육자, 가족, 지방 자치 단체, 초등교육스포츠연맹(USEP), 사립학교스포츠연맹(UGSEL)를 포함한 파트너 협회, 스포츠 클럽 등)는 학교 프로젝트와 ‘하루 30분 신체활동’을 통합하는데 참여하고 있음.
- 이 조치는 자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유연한 프레임워크임. 모든 학교에 획일화하거나 제한적인 모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 도구 및 예시를 제공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도록 함.

2022년 07월 07일

출처: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5736>

<https://eduscol.education.fr/2569/30-minutes-d-activite-physique-quotidienne>(추가자료: 2022년 1월
게시자료)

❖ 코로나19

1.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보건 프로토콜(2022년 1월 기준)

■ 학교에 적용 되는 보건 프로토콜(2022년 1월)

- 프랑스 국무총리는 2022년 1월 10일부터, 학교의 보건 프로토콜을 완화한다고 발표함.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 사례가 있는 학생은 3회의 자가 테스트 후 등교할 수 있음. 의무적으로 PCR이나 항원 테스트를 수행할 필요는 없고, 3번의 자가 진단(D0, D+2 및 D+4의 자가 테스트 수행)에서의 음성 결과로 충분함. 약국에서 무료로 자가 테스트기를 받을 수 있고 집에서 검사를 할 수 있음.

- 두 가지 조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과 같음.
 - 1) 학급에서 코로나 양성 사례가 발생해도, 다른 학생들은 하루 학교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학교에 남아있을 수 있음.
 - 2) 학급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자가 테스트의 음성 결과에 대한 부모(부모 중 한 명)의 증명서가 필요함.
- 또한, 2022년 1월 7일부터, 코로나 양성 사례가 수업에서 발생한 지 7일 이내에 또 다른 새로운 양성 사례가 발생하면, 3회(D0, D+2, D+4의 자가 테스트 수행)의 자가 테스트 과정을 다시 반복하지 않아도 됨. 7일째부터 수업에 새로운 양성 사례가 나타나면, 접촉한 다른 학생은 자가 테스트 3회를 다시 시작해야 함.
- 끝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실내에서의 오락 시간과 나들이를 권장하지 않고 야외에서의 체육 활동을 우선으로 하는 등의 다른 조치들이 적용됨.

* 자가 테스트 주기

D0(day0): 확인된 사례의 발생에 대한 정보

D0(day0): 첫 번째 자가 테스트의 수행

D2(day2): 두 번째 자가 테스트 수행

D4(day4): 세 번째 자가 테스트 수행

D7(day7)부터: 새로운 양성 사례가 발생하면 3번의 자가 테스트 실시해야 함.

■ 보건 프로토콜의 레벨 3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대면 학습, 지역적 상황에 따라 고등학교의 경우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 혼합
- 환기 및 손 씻기 조치를 강화 및 유지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직원의 경우 실내와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 건강 프로토콜의 1단계로 복귀하기 전까지는, 학년별 수업에 따른 학생들의 교류나 수업의 교류가 제한됨. 교사의 결석으로 교체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수업 사이에 학생들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함. 학생들은 다른 수업에 배정될 수 없음.
- 테이블이나 접촉 횟수가 많은 표면을 하루에 여러 번 소독하고 가능하면 매 식사 후 식당의 테이블을 소독.
- 신체 및 스포츠 활동은 마스크 착용과 신체적 거리 두기가 적합한 낮은 강도의 활동만이 실내와 실외에서 허가됨. 접촉 스포츠는 허용되지 않음.

■ 보건 프로토콜의 레벨 2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의 대면 수업
- 환기 및 손 씻기 조치 강화 및 유지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및 교직원의 경우 실내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
- 학생 간 교류 제한은 학년별로 적용됨. 레크리에이션 시간에는 방역수칙과 관련된 권장 사항을 고려하여 학생들을 그룹별로 편성함. 그룹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레크리에이션은 수업 중 휴식 시간으로 대체될 수 있음.
- 서로 다른 그룹(수업, 학급 또는 학년)의 학생들 사이에 신체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함.
- 접촉 횟수가 많은 표면을 하루에 여러 번 소독하고 매 서비스 후에 식당 테이블을 소독함.
- 신체 활동 및 스포츠 활동은 일반적으로 야외에서 이루어짐. 다만, 실내 연습이 불가피한 경우(악천후, 시설 이용 활동 등), 활동에 적합한 거리를 두고 실시 할 수 있음. 접촉 스포츠는 허용되지 않음.

■ 학교 급식

- 급식 시간대와 서비스 제공 횟수는 유동하는 학생 수와 학생의 밀집도 및 학생 간 교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조정됨. 가능한 한 입장과 퇴장이 분리됨. 의자는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는 방식으로 배열됨.

- 각 수준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음
 - 1) 1단계 / 초록색 레벨: 학생들 사이에 가능한 한 멀리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공간이 배치되고 조직됨.
 - 2) 2단계 / 노란색 레벨: 학생들은 매일 같은 테이블에서 점심을 먹음. 개별 서비스(쟁반, 식기, 물, 접시 또는 쟁반)가 권장됨.
 - 3) 3단계 / 오렌지색 레벨: 다른 반 학생들과는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학생들은 같은 식탁에서 매일 점심을 먹음. 개별 서비스(쟁반, 식기, 물, 접시 또는 쟁반) 제공. 대량 음식 제공은 금지됨.
 - 4) 4단계 / 빨간색 레벨 : 오렌지 레벨과 동일한 규칙이 적용.

■ 보건 프로토콜의 변화

- 교육부는 2021년 7월 28일 수요일에, 2021-2022학년도 보건 프로토콜을 발표함. 이 프로토콜은 전염병 상황에 따른 조치를 단계적으로 제공함.

■ 2021년부터 변경된 보건 프로토콜 조치는 다음과 같음.

- 2021년 9월 2일부터 10월 4일까지 학교에서 시행 중인 보건 프로토콜은 일부 해외 지역을 제외하고 2단계.
- 2021년 10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적용되는 보건 프로토콜은 최소 연속 5일 동안 코로나19 발병률이 인구 10만 명당 50명 미만인 지역에서만 1단계였음. 타지역에 적용된 보건 프로토콜은 2단계(인구 10만명 당 발병률 50명 이상일 경우 적용).
- 2021년 11월 15일부터 12월 9일까지 프랑스 본토와 해외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이 다시 의무화되었음. 전염병이 다시 유행하면서 초등학생들은 교내에서 마스크를 다시 착용함. 보건 프로토콜 4단계인 가이아나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보건 프로토콜은 2단계.
- 2021년 12월 9일부터, 모든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의 보건 프로토콜은 가이아나를 제외하고 3단계로 전환했으며, 가이아나는 4단계로 유지. 모든 초등학생과 교직원들은 교실 밖에서

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함. 반면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항상 적용되는 보건 프로토콜은 2단계이며 가이아나는 4단계를 유지.

- 2022년 1월 3일부터, 모든 지역의 학생 및 교직원에게 대한 격리 및 검사 규칙이 보건 프로토콜 수준에 관계없이 변경됨. 오락 시간 및 실내 나들이 금지, 실내가 아닌 실외에서의 체육 및 스포츠 활동 우선 등 기타 조치가 적용됨.

2022년 01월 27일

출처: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5074>

2. 겨울방학 이후 학교 보건 수칙 간소화

■ 프랑스 본토 내 초등 교육 기관*의 보건 수칙이 3단계에서 2단계로 내려감.

(*프랑스의 초등교육기관에는 유치원도 포함됨.)

■ 초등교육기관 보건 수칙 변경 날짜는 프랑스 본토 내 구역에 따라 다음과 같음.

- B구역: 2022년 2월 21일부터
- A구역: 2022년 2월 28일부터
- C구역: 2022년 3월 7일부터

(*프랑스 본토 내 교육 기관은 겨울방학 시작 날짜에 따라 A, B, C 통학 구역으로 나뉨.

A학구: Besançon, Bordeaux, Clermont-Ferrand, Dijon, Grenoble, Limoges, Lyon, Poitiers / B학구: Aix-Marseille, Amiens, Caen, Lille, Nancy-Metz, Nantes, Nice, Orléans-Tours, Reims, Rennes, Rouen, Strasbourg / C학구: Créteil, Montpellier, Paris, Toulouse, Versailles)

■ 실외 마스크 착용 종료

- 2단계에 포함되는 세 가지 주요 사항:
 - 1) 초등학생 및 교직원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종료
 - 2) 마스크 착용 없이 실내 체육 및 스포츠 활동을 다시 할 가능성(거리두기로 인해 신체 접촉 스포츠는 마스크 없이 승인되지 않음)
 - 3) 특히 식사 시간 동안 교류 제한 완화(교실내 전체 학생의 교류보다는 조별 교류)
- 현 단계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밀폐된 공간 내 교직원과 6세 이상 학생에게 여전히 요구됨.
- 보건 수칙 2단계는 중등교육기관에도 적용되어 갈 것.

■ 검사 간소화

- 전염병 확산 정점을 찍은 시기 4주 후인 2022년 2월 28일부터, 확진자와 접촉한 자에 대한 검사가 간소화 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간소화 됨. 교직원과 학생은 검사를 세 번(확진 당일, 확진 2일 후, 확진 4일 후)하는 대신 확진 2일 후에 한 번만 검사(자가 테스트 또는 항원 테스트)하면 됨.
- 2022년 2월 21일부터 학생이 검사 완료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학교에 입학 가능함.

2022년 02월 11일

출처: <https://www.gouvernement.fr/actualite/le-protocole-sanitaire-a-l-ecole-allege-au-retour-des-vacances-d-hiver>

3. 코로나 19: 마스크 착용, 검사 등 3월 14일부터 변경사항

- Jean Castex(*프랑스 총리)는 3월 3일 발표한 바와 같이, 3월 14일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중단에 서명하였음. 이는 기관(초등학교, 대학 및 고등학교) 내 새로운 건강 수칙으로 반영되어야 함.

- 3월 14일부터 학교에서 새로운 건강수칙을 적용하기 위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새로운 건강 수칙 관련 내용이 게시됨.
- 구체적으로는 살펴보면, 교실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님. 또한 코로나19 감염 사례 발견 시 다음의 방안이 적용됨: 확진 학생의 격리, 접촉자의 자가 테스트(3회 대신) 2회로 단축.
- 사실상 건강 수칙 1단계가 표준이 될 것임. 마스크(착용 중단) 외에도 학생의 실내 및 실외 접촉 스포츠 재개 가능해짐. 또한 단계 별로 급식소 내 교류 제한이 완화됨.
- 주기적 손 씻기, 교실 정기적 환기 및 소독과 같은 예방 활동은 유지됨.
- 학생이 교육기관에 입학할 때, 코로나 검사를 완료하였다고 증명하는 진술서(학생의 법적 보고자의 선서 진술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이러한 완화는 전반적으로(그럼에도 조심스러워 보이고자 하는) 교원노조에게 꽤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짐.
- “모든 사람들은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예방 및 전염병 관리의 논리를 유지해야 한다.” 국가 교육 총회 연맹(*프랑스 교육 근로자 노동 조합) 사무총장 Laetitia Aresu은 위와 같이 언급하였음.

2022년 03월 08일

출처: <https://www.cnews.fr/france/2022-03-08/covid-19-port-du-masque-tests-voici-ce-qui-devrait-changer-lecole-partir-du-14>

●● 기타

1. 흔들린 아이 증후군 예방을 위한 캠페인

■ 흔들린 아이 증후군

- 프랑스에서는 10명 중 1명의 영아가 흔들린 아이 증후군으로 인해 사망하며, 나머지는 이로 인해 평생 고통을 겪게 됨.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행동, 언어, 주의력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 시각적 장애, 운동 장애에 의해 나타나는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의 원인이 됨.

■ 흔들린 아이 증후군 예방을 위한 캠페인

-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현상의 실상을 알리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국민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음. 전문가와 부모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아드리엔 타케(Adrien Taquet) 아동가족부 장관의 이 구상은, 아기를 흔드는 것이 치명적인 학대임을 일깨워 줌.

■ 아기를 흔드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는 학대

- 흔들린 아이 증후군은 아기나 어린 영아가 성인에 의해 심하게 흔들릴 때 발생함. 격렬한 흔들림은, 아기가 겨드랑이 밑이나 흉부를 붙잡힐 때 가장 자주 발생함.
- 아기의 머리는 빠르게 앞뒤로 흔들리고 뇌는 두개골 벽에 부딪히게 됨. 그 결과, 아기가 호흡을 멈출 수 있고 뇌, 눈과 척수 손상이 발생할 수 있음. 평생 아이에게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신경의 손실도 발생할 수 있음.

■ 흔들린 아이 증후군의 후유증

- 흔들림에서 살아남은 아기의 75%는 뇌 손상으로 인해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겪음.
- 정신 운동 발달의 지연 또는 운동 장애, 인지 장애 및 학습 장애, 행동 문제, 섭식 장애, 수면 장애, 시각 장애 또는 실명, 청력 상실 또는 난청, 간질 발작

■ 흔들린 아이 증후군의 즉각적인 증상

- 흔들림 이후, 심각한 신경계 손상과 관련될 수 있는 증상이 즉시 발생
- 평상시와는 다른 울음, 의식 장애
- 신체의 경직 또는 반대로 늘어짐
- 정상적인 움직임 또는 발작(팔과 다리가 뻗뻗해지거나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움직이기 시작함)
- 호흡 곤란 또는 호흡 정지

- 뚜렷한 이유 없이 식욕 감소, 먹기 거부 또는 구토
- 평소 미소나 웅얼이를 잃음
- 극도의 과민성, 비정상적인 울음
- 시각 문제: 눈의 움직임이 비정상적이며, 동공의 크기가 다르며, 사시가 되거나 시선을 따르지 않음.

■ 아이 돌봄 중 아기에게 어려움을 겪을 경우의 대처 방법

-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아동에게 어려움을 겪거나 취약하다고 느끼는 경우 다음을 수행해야 함.
 1. 아기를 등을 대고 눕혀서 안전하게 침대 위에 눕힘. 이 위치에 아기를 혼자 두는 것은 위험하지 않음.
 2. 몇 분 동안 방을 나감.
 3. 숨을 크게 들이쉬고 안정을 되찾기 위해 다른 일에 집중함.
 4. 가능하다면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어려움에 대해 상담하거나 교대로 아이를 돌봄.
 5. 도움 요청: 두려움과 의심을 전문가나 주변 사람들과 공유

■ 영유아 전문가와 연락할 수 있는 무료 연락망

- 긴급 전화번호: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위한 국립 전화접수 서비스의 <알로 앙팡 영 덩제 (Allo Enfance en Danger)> 회선. 이 회선은 아동이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발신자에게 도움과 조언을 제공. 연중무휴 24시간 이용 가능 - 119번으로 연락.
- 도움과 청취 번호: 임신부터 아이가 3살 될 때까지, 부모들의 걱정을 듣고, 지원하고, 지도함. 아동&공유 협회의 <알로 파형 베베(Allo Parent Bébé)> 회선. 월요일~금요일,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시~오후 6시 이용 가능.

■ 커뮤니케이션 캠페인

- 흔들린 아이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연대보건부장관 소속 아동 가족부 장관은 인정받은 전문가와 부모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함.
 - 2022년 1월 17일부터 미디어 캠페인의 일환으로 주요 동영상 플랫폼(유튜브, MY TF1, francetvpluz, 6play)과, 소셜 미디어 플랫폼(페이스북/인스타그램, 스냅챗, 트위터) 및 광범위한 사이트에 캠페인 관련 영상을 배포하였으며, 이 영상은 흔들린 아이 증후군의 10건의 사례 중 1건의 사례가 아기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있음.
 - 전문가와 의료기관이 환자나 대중에게 흔들린 아이 증후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키트(포스터, 전단지 등)를 함께 배포할 예정임. 이 캠페인은 미래의 부모와 젊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첫 1000일”의 일환임.
- * 첫 1,000일은 임신부터 아이의 2세까지의 기간으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기까지 출생 전후의 기간을 하나로 묶음. <첫 1,000일>은 아이와 부모의 필요를 중심으로 설계된 새로운 공공 정책임. 2021년 이후, <첫 1,000일> 프로젝트는 연대보건부(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가 시범적으로 시행하였고 사회보장(Sécurité sociale), 프랑스공중보건(Santé publique France), 지역 보건기관(Agences régionales de santé), 경제, 고용, 연대 작업을 위한 지역 이사회(Directions régionales de l'économie, de l'emploi, du travail des solidarités)와 같은 파트너들과 함께 수행되었음.

2022년 01월 17일

출처: <https://solidarites-sante.gouv.fr/affaires-sociales/familles-enfance/syndrome-bebe-secoue>

2. 입양 개혁을 공식 저널에 발표함

■ 2022년 2월 21일의 입양 개혁 법률에 대한 내용 공식 저널에 게재

- 본 입양 개혁은 다음의 세 가지 주요 목표를 추구함. 더 많은 아동이 입양 되고, 아동 권리 존중을 보장하는 경로를 확보하고, 입양 부모를 위해 입양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

■ 주요 변경 사항

- 아동을 위해 친양자 입양 판결
- 아동의 이익을 위한 경우, 13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본인이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판결 가능성 확대
- 양부모(養父母)를 위한 지원 대책 확대 및 강화
- 미혼 부부(동거 또는 PACS로 결합)에게 입양 권리를 부여
(*PACS: '시민연대계약',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동거 제도)
- (입양 부모의) 동거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입양을 위한 최소 연령을 28세에서 26세로 변경함.
-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간의 입양 금지
- 해외에서 의료 보조(체외 수정 등)로 출산한 여성 부부 입양 가능.
- 프랑스 출신 아동의 절차 보완, 아동 사회 지원 서비스와의 더 강화된 연결을 통해 모든 아동이 국가의 피후견인 지위의 혜택을 얻음.
- 피후견인이 되는 즉시 아동에 대한 의무적인 의료·사회·심리검사를 실시하여 피후견인 처지 개선,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관련한 결정의 필수 정보 및 개명에 대해 철저한 동의 수집
- 15세 이상의 아동이 뒤늦게 또는 양부모(養父母)에 의해 유기된 것으로 인정될 때 친양자로 입양 가능
- 부모 방임 상황을 탐지하기 위해 여러영역의 위원회가 아동 복지 서비스(ASE)에 위탁한 3세 미만 아동의 상태를 6개월마다 의무적으로 조사
- 입양 휴가 절차 완화, 2021년 사회 보장 자금 조달법에 따라 10주에서 16주로 입양 휴가 연장
- 입양 문제와 입양될 아동이 필요로 하는 문제에 대해 (입양) 후보자들의 입양 승인 준비 시행

- 가장 젊은 양부모와 입양 아동 간 50세 나이 차의 입양 승인을 위한 새로운 조건 도입 (*기존에는 나이 차 제한 없었음)
- 프랑스에서 태어났으며 법적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아동을 국가 피후견인으로서 보호 받는 지위로 인정
- 입양 후보자의 지원 및 준비에 있어 지정 기관의 역할 인정
- (입양 후보인) 국가 피후견인과 해외에서 태어난 아동에 대해 입양을 기점으로 1년 동안 의무적 지원 도입
- 모든 신청자가 국제 입양 과정에서 지정 기관 또는 프랑스 입양 기관을 의무적으로 동반해야 하는 점을 통해 국제 절차의 보안화 및 그러한 공공 기관에 대한 국가 통제 강화
- 친족회의 기능 개혁: 윤리적이며 반차별적인 자의 필수 참석, 가족원의 의무 교육, 그리고 특히 윤리 규칙의 강화를 포함

■ 보건연대부의 아동가족부 담당

- “이와 같은 입양개혁은 프랑스 수천 아동의 일상생활과 발달에 직접적이고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임. 이를 통해 입양이 아동 보호에 있어 확고하고 결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 법을 통해 우리는 아이들의 기대에 충족시킬 수 있는 완전히 안전한 생활 설계를 보장함으로써, 아이들의 필요를 더 잘 반영하는 방향으로 계속 전진할 것임.” (보건연대부의 아동가족부 담당의 Adrien Taquet 정무차관)

2022년 02월 10일

출처: https://solidarites-sante.gouv.fr/actualites/actualites-du-ministere/article/adoption-la-reforme-publi-ee-au-journal-officiel?TSPD_101_R0=087dc22938ab2000b35844b080788d025288ec3dce1d51694823a138d8b9bad2fec7963244b25d360870fc5a1f143000adf158a991ffced39d31fafb8d2552572e21eb9bf141ff4a33da3235717ef2f9f261259a81cf0495ff321c9018b98105

3. 우크라이나 학생 수용을 위한 유럽연합 행동 계획

- 유럽 국가의 교육부 장관들은 Jean-Michel Blanquer 프랑스 교육부 장관이 주재하고 Mariya Gabriel 교육, 문화, 다국어 사용 및 청소년을 위한 유럽 집행위원이 참석한 유럽 교육 위원회 위원이 참석한 비공식 회의를 개최함(화상). 우크라이나 교육부 장관은 본 회의 개막식에서 연설함.
- 유럽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수용을 조정하기 위해 TF(task force) 구성을 결정함.
- 우크라이나 학생들의 수용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5가지 방침은 다음과 같음. 2022년 2월 24일 이후 300만 명이 넘는 우크라이나인이 우크라이나를 떠났고, 그 중 절반은 어린 아이들임.

■ 난민 유입을 앞둔, 유럽 교육부 장관들이 조정한 대응안은 다음과 같음.

1. “우크라이나 아동의 학교 수용 지원을 위한 유럽 기금의 재할당”을 통해 유럽연합 회원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한 재정 지원 보장
2.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하여 교육을 용이하게 하겠다는 약속
3. 공통 플랫폼을 통해 유럽 교사를 지원하기 위해 공용 자원에 대한 접근 보장
4. 유럽 국가들은 특히 우크라이나 원격 학습 플랫폼과 e-Twinning 프로그램을 통해 우크라이나 문화, 언어 및 교육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보장
5. 우크라이나 교육 시스템 재건 메커니즘에 대한 기여 약속

2022년 03월

출처: <https://www.education.gouv.fr/un-plan-d-action-europeen-coordonne-pour-l-accueil-des-eleves-ukrainiens-340754>

4. 아동=평등(Enfance=Egalité) 훈련 계획: 보육전문가가 불평등에 맞서 싸울 수 있도록

■ 아동=평등(Enfance=Egalité)

- 탈빈곤 및 빈곤 예방을 위한 국가전략의 일환으로 시작된 “아동=평등(Enfance=Egalité)” 훈련 계획을 통해 보육전문가는 불평등 퇴치의 핵심 주제에 대해 교육받을 수 있음.
- 국가 아동보육 현장의 원칙은 국가 빈곤 퇴치 전략의 “아동=평등(Enfance=Egalité)” 훈련 계획의 일환으로 유아 전문가를 위한 교육을 제공함.

■ 불평등 퇴치를 위한 7개 주제가 선정됨.

- 선정이유1: 높은 사회적 불평등(언어, 예술과 문화, 음식과 자연, 전자기기와 디지털)을 다루는 주제이기 때문임.
- 선정이유2: 불평등과 그 불평등의 재생산을 가장 잘 해결 할 수 있는 전문 업무*와 관련되기 때문임.

* 정기적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사회화와 자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임시 돌봄, 부모 돌봄 및 보다 일반적인 육아 지원,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돌봄을 촉진하기 위한 고정관념 방지 등

■ “아동=평등(Enfance=Egalité)” 훈련 계획의 7개 주제

- 언어, 예술과 문화, 음식과 자연, 임시 돌봄, 고정관념 예방, 부모 돌봄, 디지털

■ 7개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훈련과정을 직접 신청하거나 팀의 구성원을 등록하면 OPCO (직업훈련센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본 훈련은 모든 보육전문가에게 열려있으며, 본 훈련 계획의 목표는, 영유아를 보육하는 전문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어린 시절부터의 불평등과 싸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022년 04월 22일

출처: <https://solidarites-sante.gouv.fr/affaires-sociales/familles-enfance/pacte-pour-l-enfance/1000jours/ameliorer-encore-la-qualite-des-modes-d-accueil-du-jeune-enfant/article/plan-de-formation-enfance-egalite-pour-que-chaque-professionnel-de-la-petite>

5. 효율적이고 공정한 유럽 교육 시스템을 위한 투자: 유럽 연합의 잠재적 성장과 사회적 회복력에 대한 도전

- 2022년 4월 5일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이사회 “교육, 청소년, 문화 및 스포츠” 회의와 별도로, 프랑스 의장의 추진 하에 교육 담당 유럽 국가의 장관들은 사회와 경제를 위한 교육 투자의 중요성을 논의함.
- 2년 동안 코로나19 전염병은 특히 교육 분야에서 전례 없는 사회적, 경제적 결과를 가져옴. 이것이 교육 지출의 효율성에 대한 투자가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임.
- 최근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150만 명 이상의 아동이 집을 떠나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음. 교육은 기본권이며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모두가 공유하는 요구사항이며, 교육에 대한 투자는 새로운 세대의 미래를 보장함. 그러므로 유럽연합 회원국은 전쟁을 피해서 온 아동들에게 학교를 제공 하는 지원을 하고 있음.
- 각 국가들은 교육지출에 대해 효과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타 국가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논의함. 2022년 2월 15일 유럽연합(EU) 이사회 프랑스 의장이 주최한 “교육 투자” 내각 회의는 양질의 투자에 대해 성찰하는데 기여함.
- 공동 성명을 통해 26개 회원국 장관은 교육 투자의 효과성, 형평성, 품질 및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치를 강구하고 있음을 보여줌.
- 회원국의 목표는 다음과 같음. 모든 유럽 시민 각자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보다 강력한 경제적, 사회적 유럽 건설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의 연구원을 한데 모아 교육투자에 대한 학습 연구소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적극 찬성함. 프로젝트에서는 교육정책 평가 방법을 구축하고 테스트 할 것임.

2022년 04월

출처: <https://www.education.gouv.fr/investir-pour-des-systemes-educatifs-europeens-efficaces-efficient-s-et-equitables-un-enjeu-de-340979>

6. 4세부터 12세 아동에게 수영 무료 강습 실시

■ 4세~14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영 무료 강습 프로그램 제공

- 프랑스 체육부는 아동의 수상 안전을 위해 4세~14세 아동을 대상으로 수영 무료 강습 프로그램을 제공함. 프랑스 수영 연맹(FFN) 전문가가 수영 강습을 실시하며, 아동의 연령을 구분하여 4~6세 미만 유아를 위한 “편안한 물 속(Aisance Aquatique)”과 6~12세 아동을 위한 “수영을 배워요(J'apprends à nager)” 두 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함.
- 본 프로그램은 2015년부터 시행해왔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우선권이 부여됨(낙후 지역 우선).
- 본 프로그램은 수영을 할 수 없는 4~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우선 정책 도시 지역(QPV) 및 농촌 활성화 구역(ZRR)에 거주하는 아동에게 참여 우선권이 있음.

■ 프로그램의 목표

- 안전한 수상 및 해상 스포츠에 대한 접근성을 높임.
- 물놀이와 관련된 위험을 예방하고 익사 위험을 피함.
- 물과 수영의 즐거움을 발견함.
- 물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함.
- 중학교 1학년 입학 시, 본 프로그램의 참여 증명서를 취득함.

■ 수영 강습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아동의 수준과 연령에 따라 1일 30분~1시간 동안 진행되며, 최소 10시간 과정의 수영 훈련
- 4~6세 미만 아동은 최대 10명, 6~12세 아동은 최대 15명으로 구성하여 프로그램 운영
- 수업은 무료이며(등록 시 무료), 프랑스 수영 연맹(FFN) 전문가가 강습함.
- 훈련 기간을 마친 6~12세 아동은 ‘수영(Sauv'nage)’ 시험에 응시 가능.

■ 프랑스 수영 연맹(FFN)의 웹사이트에서 본 프로그램 신청 가능

2022년 06월 21일

출처: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actualites/A15758>

7. 개학보조수당, 장애아동교육수당을 지급받는 가정에 Pass' Sport 지급

■ Pass' Sport

- Pass' Sport는 6~1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지원 제도임. 본 제도를 통해 아동은 2022~2023 시즌 동안 스포츠 협회 회원 자격과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음. 지원 금액은 1인 50유로임.
- 본 제도는 2022년 개학보조수당(ARS) 또는 6~18세 장애아동교육수당(AEEH)을 받는 가정을 대상으로 함.
- * 개학 보조 수당(ARS): 6~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가구에 지급되는 수당
- 개학 시 스포츠 클럽에 등록하면 50유로의 혜택을 받음.
- Pass' Sport는 2022~2023 시즌에 적합한 스포츠 협회에 등록비의 전액 혹은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자격을 갖춘 아동/청소년을 위한 50유로의 스포츠 수당임.

■ 지원자격

- 2004/09/16 ~ 2016/12/31 출생자이면서 ARS(개학 보조 수당)을 받는 자(만6~17세)
- 2002/06/01 ~ 2016/12/31 출생자이면서 AEEH(장애 아동 교육 수당)을 받는 자(만6~18세)
- 1991/09/16 ~ 2006/12/31 출생자이면서 AAH(장애 수당)을 받는 자(만16~30세)

■ 지원 내용

- Pass' Sport는 스포츠 클럽에 등록 시 50유로를 할인 받을 수 있음. 이 할인 쿠폰은 해당 개인이 사용할 수 있으며, 선택한 클럽에서 한 번만 사용 가능. Pass' Sport는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다른 지원과 중복 가능함.

■ 사용처

- Pass' Sport는 자격을 갖춘 기관(스포츠 담당부서에서 승인한 스포츠 연맹 산하 협회 및 조직)에서 사용할 수 있음.
- JEP(청소년 및 대중 교육) 또는 스포츠 승인 협회는 우선 정책 도시 지역(QPV)에서 운영 교육되거나 국가의 “교육 도시”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음.

2022년 06월 20일

출처: <https://www.enfant-different.org/actualite/lallocation-pass-sport>

<https://www.sports.gouv.fr/pratiques-sportives/sports-pour-tous/pass-sport/>

<https://www.sports.gouv.fr/pratiques-sportives/sports-pour-tous/pass-sport/article/le-pass-sport>

